

연구보고서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강 경 숙 | 고 지 영 | 이 연 화 | 이 화 진
| 양 금 선 | 염 미 경 | 이 신 선 | 정 은 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연구책임자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연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선(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신선(서귀포YWCA 사무총장)
정은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연구기간 : 2021년 6월 ~ 11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을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거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성평등정책관 등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는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례로서, 지역 양성평등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외 39개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2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 주류화와 성평등 문화, 여성 안전 및 인권과 건강,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여성 일자리 및 노동 등 4개 정책영역의 14개 전략과제,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활동가)와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기관의 협업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또한 서귀포YWCA, 제주여민회, 제주YWCA 등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특히, 양성평등정책 개발과 집필에 참여하신 서귀포YWCA 이신선 사무총장님, 제주여민회 정은숙 정책위원장님, 제주YWCA 통합상담소 양금선 소장님,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염미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지역과 타지역 관계자 여러분, 본원의 연구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성평등 이슈 발굴 및 제안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1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속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내용	4
가. 연구 범위	4
나.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과 절차	7
가. 연구 방법	7
나. 연구 절차	8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9
1.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1
2.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14
3.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17
4.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20
5. 소결 및 시사점	23
제3장.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27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29
가. 법적 기반 및 예산	29
나. 추진체계	37
다. 연구기관 및 여성단체	45
2. 정책 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48
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48
나. 여성 안전, 인권, 건강	53
다.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58
라. 여성 일자리 및 노동	64
3. 소결 및 시사점	73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79
1. 조사 개요	81
가.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조사 개요	81
나. 조사 참여자의 특성	82
2. 제주지역 조사 결과	84
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84
나. 여성 안전, 인권, 건강	93
다.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98
라. 여성 일자리 및 노동	108
3. 타지역 조사 결과	116
가. 타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현황	116
나.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개선 방안	117
4. 소결 및 시사점	121
제5장.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127
1. 여건 변화 전망	129
가. 종합 전망	129
나. 환경 분석	131
2. 정책 비전과 방향	134
가. 비전과 목표	134
나. 추진 방향	135
3. 정책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136
가. 여성 인권·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136
나.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159
다.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177
라.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90
참 고 문 헌	218

표 목 차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영역 분류 기준	5
<표 2-1> WID와 GAD의 비교	11
<표 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 개요	21
<표 2-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의 정책 과제	22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관련 조례(성평등정책관 및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	30
<표 3-2>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예산(2017~2021)	32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현황(2017~2021)	32
<표 3-4>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현황	33
<표 3-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33
<표 3-6>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34
<표 3-7> 2021년 제주시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여성가족과 소관)	34
<표 3-8> 2021년 서귀포시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여성가족과 소관)	34
<표 3-9>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규모(2018~2021)	35
<표 3-10>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추이(2018~2021)	36
<표 3-11>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2018~2021)	36
<표 3-12>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조직의 변화	38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의 주요 업무	42
<표 3-1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관련 협의 조정 기구	44
<표 3-15> 각 지자체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 유형	47

<표 3-16>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지정·운영 현황	49
<표 3-17> 정책개선 사항 발굴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추진 실적	50
<표 3-1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61
<표 3-19> 전국과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규모별 추이	63
<표 3-20>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의 중점·실천과제	65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 주요 시책(2021) ..	66
<표 3-22>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직업훈련 인프라(4개소)	67
<표 3-23> 제주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성과(2018~2021)	68
<표 3-2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과(2018~2021)	68
<표 3-25>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성과(2018~2021)	69
<표 3-2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성과(2018~2021)	71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81
<표 4-2> 조사 참여자의 특성	83
<표 5-1>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SWOT 분석)	133
<표 5-2>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전략 및 과제)	135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8
<그림 2-1> 지속가능한발전 17개 주요 목표	12
<그림 3-1>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도	37
<그림 3-2> 민선6기와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인력) 비교	39
<그림 3-3> 민선7기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	40
<그림 3-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체계	41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¹⁾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추진되거나 중앙의 시책 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김혜정 외, 2018; 장윤선 외, 2019).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중장기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017년,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 과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 프로젝트의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를 추진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19), 그 결과 다수의 제안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18.8월)과 ‘제주양성평등 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20.9월) 등이 있음
- 올해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추진기반 및 주요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민선7기(2018. 7월) 이후부터 민선8기(2022~2026)까지임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정책(여성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인 ‘Gender Equality(젠더평등)’를 의미함. 궁극적인 의미는 생물학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나 제도로써 젠더 관계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임. 한국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인지 성평등정책인지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로, 양 조직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함
- 정책 영역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과 연동하여, 4개 영역으로 분류함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여성 안전·인권·건강
 -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연구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법적 기반 및 예산, 추진체계, 협력 기관)
 - 정책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 정책영역별 추진기반 구축·운영 성과 및 개선 과제
 - 정책영역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여건 변화 전망
 -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3. 연구 방법과 절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전문가 및 관계자 FGI
 - 조사대상 : 민·관·학·의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 조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전반 및 영역별 정책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 타 지역 조사(서면조사)
 - 조사대상 : 대전, 대구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지역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 조사내용 : 해당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 및 제주지역 시사점
- 전문가 자문회의(2회)
 - 연구 설계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연구 절차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수행 계획 마련 및 착수 보고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2단계	정책 환경 및 성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배경 및 변화 분석 • 민선7기 정책성과 평가(주요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3단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영역별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FGI를 통한 의견 수렴(7회, 37명) • 대구, 대전 등 타지역 관계자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5명)
4단계	민선8기 정책방향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방향 수립 및 과제 도출
5단계	결과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1.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은 1970년대 ‘여성과 발전’(WID : Women in Development), 1980년대 ‘젠더와 발전’(GAD : Gender and Development), 1990년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 성 주류화 전략은 ‘젠더와 발전’(GAD) 관점을 확대·발전시킨 개념으로,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음
- 같은 맥락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로 선언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2.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운동과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음. 1980년대부터 여성단체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1980년 후반부터 고용과 가족, 섹슈얼리티 등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나타남.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과거 소외계층 여성과 일부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녀행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1980년 초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
-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여성정책 업무가 추진됨.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정책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였음을 명문화함
- 2001년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출범에 따라, 한국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가 구축강화되고 여성정책의 범위가 일반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여성부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청소년, 가족업무 포함)로 존재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중앙부처²⁾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부처 내 양성평등 정책 기획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변화와 연동하여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왔음
- 지방자치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선1기~3기(1995~2006)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정책)로 변화가 일어난 시기임. 1996년 최초로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졌으며, 2000년에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함. 여성특별위원회는 당시 제주지역에 여성가족 관련 연구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 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제주여성사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토대를 강화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민선4기~5기(2006~2014)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연동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한 시기임. 특히, 민선4기(2006.7월~2010.6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출발하면서 행정체계, 연구기관,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남. 당시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요구도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기조는 민선5기까지 이어짐
- 민선7기는 민선6기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제주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과 「더/제주처럼(2019~2022)」이 추진되었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7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 등 성평등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감. 이러한 흐름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이어졌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의 전략으로 ‘여성·가족친화’영역을 최초 반영하는 성과

2)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임

를 도출함. 이러한 과정은 제주지역의 독립적인 여성가족 연구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2014.3월)과 민선6기에 이은 7기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소수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적인 여성단체 및 활동가와의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 소결 및 시사점

-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을 목적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정책 도구로 채택하여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성평등정책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지속되고 있음. 특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할당제 폐지, 역 성차별의 논란 속에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성평등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전략과 정책과제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는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활동가)와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기관의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방향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3장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 법적 기반 및 예산

－ 법적 기반

-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³⁾

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5년 제정 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 1월 13일 전부개정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상위법령의 주요 조항들이 반영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

-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의 변화가 일어난 도본청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0.35% 수준으로 조직체계 변화에 비해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단일 행정체제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시 예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도전체 예산의 5.7%로 도본청 보다 양 행정시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정책영역별로 보면 ‘성평등 및 여성권익’ 0.17%, ‘청소년’ 0.3%, ‘가족’ 0.32%, ‘보육, 아동, 어린이’ 4.9%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 및 여성, 가족정책의 예산은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이 보육, 아동, 어린이 관련 정책 예산으로 나타남

○ 추진체계

－ 담당조직 및 인력

-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강화됨. 그 결과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로 이원화된 추진체계가 구축됨. 이처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되었음
- 한편, 기존 여성가족정책의 담당 조직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됨에 따라 청소년, 아동, 보육 등 돌봄 관련 업무가 확대(기존 복지청소년과 업무)되었으나,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능력개발팀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여성을 위한 정책은 축소됨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됨. 또한 제주시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성별영향평가조례('18.10.11)와 성인지예산조례('21.4.14)를 모두 마련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지방의회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음('19.7.10)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임. 이런 점에서 제주시정의 성평등정책은 도정을 넘어 도의회 및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요컨대,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담당 인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성평등가족정책 전체 인력의 변화 없이 기존의 여성가족과 인력이 성평등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권익과 가족정책 인력이 축소됨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협의조정기구 및 젠더거버넌스
 - 양성평등 정책 관련 협의조정기구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음.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2018년 4월)부터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권고제’를 시행하고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및가족친화분과)를 운영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는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성평등협의회는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경찰청,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공동으로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 연구기관 및 여성단체
 - 제주지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2014년에 출범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사업 이외에도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음. 지자체 수탁기관으로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21년 7월 기준, 총 16개이며 소속 회원 수는 12,950명임.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적지 않으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성 주류화 관련 활동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그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 YWCA 등의 단체 소속 활동가 및 회원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성 주류화 관련된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강경숙·이해웅, 2018)

2.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영역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등 추진체계 강화에 따라 많은 정책적 시도와 성과를 도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정책 전국단위 우수 평가를 받고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먼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 기획 및 추진,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등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이 강화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관광 콘텐츠 및 축제,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다각화하여 추진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하였고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 아울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자체 최초 지역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교육의 체계화와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9월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향후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은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여성친화도시팀) 및 인력 등 추진기반을 확보하였고, 성인지적 안전 및 젠더폭력 관련 사업이 강화되었음. 전담부서 구성 이후 기존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서 ‘협의체 및 도민참

여단 구성·운영’, ‘시설 및 조성사업 발굴’,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사업 등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업무를 추진하게 됨

- 또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등의 긴급대응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020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2019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2021년),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2021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2021)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었음. 특히 도 특화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도민대상의 폭력예방교육사업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 인식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등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여성들의 생활안전 환경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테드) 사업,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여성안심 3중세트 지원 사업 등 여성 안전분야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의 지원 사업 등 사각지대 대상의 성인지적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사업을 기획 중에 있음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의 개선 과제로는 우선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권익팀) 양 조직에 업무가 분산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 강화, 코로나19와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성인지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생애주기별 사업과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 일·생활균형

- 민선7기의 가족정책은 민선6기에 이어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름으로써 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

민선7기의 가족영역의 사업들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사업, 돌봄 및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출산장려금 및 둘째아 양육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등이 계획추진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자녀돌봄 서비스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 및 도민홍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확산을 위하여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사업 운영,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사업 등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은 종합적인 목표나 실행계획 없이 업무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동력으로서 가족정책 담당기구 구축·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반영한 사회적 돌봄을 발굴·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전체 사업체의 93.4%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해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육아부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기업주와 남성대상 일·생활 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 여성 일자리 정책,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일자리로드맵에 포함된 여성 일자리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 과제’의 세부과제로 1개 과제가 포함되는 것에 그쳐,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내의 성별 일자리 성과 파악 한계 및 여성일자리 대책 미약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연계하여 49개 과제(33,095백만원)를 제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방식·영역 대응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한 예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민선6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인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총 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이는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창업 지원 등의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선8기에는 도 전반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의 성 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정책 기획, 추진, 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과 전담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안이 국회 통과(2021.11.11.)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지역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주의 산업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그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이 필요함

3. 소결 및 시사점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성 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시책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반해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큰 변화가 없으며, 여성인권 관련 업무의 이원화, 여성 일자리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의 축소 등의 문제가 나타남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음.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강화됨.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연구가 강화되었으며, 부서별 양성평등 담당관제 운영, 주요 정책의 사전 성인지 검토제 실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등 지역 차원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의 조직 위상이 낮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권익 및 가족정책 관련 인력과 업무의 축소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확대 수준은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우선, 이원화된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성평등정책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기능 강화(조직 위상, 인력, 예산 등) 및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 본 의견조사는 제주 도내·외 행정,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양성평등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의 양성평등정책 참여 경험 및 인식을 통하여,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이루어짐

- 조사방법은 크게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타지역⁴⁾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서면의견조사 2가지로 이루어짐

<표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① 도내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조사 목적 및 내용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성과 분석 및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도내 공공기관,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영역의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37명
	조사 기간	- 2021.9.24. ~ 9.30.
	조사 방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등에서 집단 면접 실시(7회)
② 타지역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조사 목적 및 내용	- 각 지역 민선7기 양성평등 정책 사례 조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대구 및 대전 지역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5명 (대전지역 3인, 대구지역 2인)
	조사 기간	- 2021.10.19. ~ 10.25.
	조사 방법	- 개방형 질적 질문으로 구성하여 서면 조사 실시

2. 제주지역 조사 결과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는 운영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참여자들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4) 대전과 대구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제주도가 참모형 조직 또는 계선형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할 시 각 조직 형태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타지역 사례 조사지로 선정함. 대전광역시는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도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로 참모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으나(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 단위조직을 국 단위로, 부서장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한 지역임(장윤선 외, 2019)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개편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조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실국’ 신설 또는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 등이 제시됨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의 목적 및 역할 등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단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젠더거버넌스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여성가족연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통합적 수립·운영이 필요함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의 개선 과제
 - 제주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평등교육문화 진흥 체계 및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지역의 가부장제 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민 체감형 성평등 아젠다 형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민관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공무원 전달체계가 이원화된 느낌이며, 성평등정책관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위상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정책의 개선 과제
 - 여성인권 의식 향상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등 여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장애인, 이주여성 등) 및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등) 중심에서 일반 여성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범죄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자연적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여성안전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1인 가구 여성 또는 농어촌 지역 등 취약계층 여성 안전시설 강화가 필요함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실질적인 가족정책, 특히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이 미약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량에 따라 가족 지원 사업들을 운영해왔음.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지역 기반 가족정책 개발과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센터로 개편한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한 조직 개편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아동청소년국 신설 또는 여성과 가족을 포함하는 성평등국 신설 등 조직 위상 강화가 필요함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정책의 개선 과제

- 가족정책 전담부서와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며, ‘가족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로 ‘사회적가족지원조례’(가칭)가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으로 가족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가족센터’의 제도적·정책적 통합과 지역 기반 체계적 운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영세기업, 자영업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족과 돌봄 관련 지역협의체(마을 주민의 돌봄협의체) 및 도와 교육청의 협력 기반 구축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과제

-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정책의 개선 과제

-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이나, 제주도만의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미약하여 향후 제주 특성을 반영한 여성 일자리정책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IT 등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 미진출 분야의 진입 지원 필요함. 이를 위해 디지털 사회,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며, 공간, 마케팅,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여성 창업, 여성 기업 지원 정책과 여성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 기업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직업훈련 기관 지원 강화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3. 타지역 조사 결과 :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개선 방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인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며, 향후 지속발전을 위한 조직 위상과 여성들의 참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성평등)과 가족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 성 주류화정책이 주요부서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양성평등담당관제의 내실화를 위해 부서장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함

○ 도정 및 지역사회 성평등 확산

- 도정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중요함
- 지역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발굴·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제주지역 특화 정책 제안

- 제주여성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 사업 강화 및 확산이 필요함
- 성인지적 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안전 관광 정책 개발이 필요함

4. 소결 및 시사점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양성평등담당관제, 양성평등위원회 등)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안전과 인권 업무의 이원화(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조직의 부재, 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의 담당 조직 위상 미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도·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지역과 타지역 전문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전문가의 경우 2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첫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을 ‘실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둘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를 크게 여성(성평등)과 가족으로 분리하고 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임
 - 타지역 전문가의 경우, 제주지역의 성평등정책관 신설에 대해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평등정책관의 안착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였음. 그리고 여성(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전제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제5장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 여건 변화 전망
 - 종합 전망
 - 첫째, 성평등 인식에 있어 성별, 세대별, 출신 지역 등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 강화 및 정책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둘째,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 등의 환경 변화와 제주도민의 낮은 안전 체감도를

- 고려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족·돌봄정책의 다각화 및 지자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함
- － 환경 분석(SWOT 분석)

<표 2>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제고 ○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활동 참여 활성화 ○ 지역 여성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력, 예산, 협업 네트워크 등 성평등 – 가족정책의 기반 미약 ○ 성평등 네트워크 및 단체 활동 미흡 ○ 지역 공동체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규범 ○ 여성 경제활동 기반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2031)」 「여성·가족친화」 전략 신설로 도 중장기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예상 ○ 여성가족관련 연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강화 및 연계 운영 요구 증대 ○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광객 및 도민의 욕구 상승 ○ 돌봄, 가족,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제주 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지도 ○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및 역차별 인식 ○ 개발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만연 ○ 청년과 정착주민의 지역 유출

○ 비전과 목표

-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이주배경, 장애유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로 설정함

- － 이와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평등하게 일하는 제주’, ‘함께 돌보는 제주’ 3대 목표를 수립하였음

비전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	------------------------------

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평등하게 일하는 제주	함께 돌보는 제주
-----------	--------------------	--------------------	------------------

정책 영역 (방향)	여성인권 · 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다양한 가족 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전략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 성인지적 안전 환경 조성 · 여성의 건강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정책 기반 강화 · 여성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 돌봄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및 전략 강화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 지역 성평등교육 연구 기반 강화

○ 추진 방향

-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정책영역(방향)과 14개의 전략과제,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함

<표 3>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전략 및 과제)

정책 영역	추진전략	과제
1. 여성인권 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확대
	성인지적 안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 성인지적 도민 안전 역량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여성의 건강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 및 강화
2.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일자리정책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일자리정책 전담팀 및 인력 확충 • 고용평등 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직업교육훈련 개발 • 여성 직업훈련기관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여성창업지원 공간 확충
	제주형 여성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제주 가치를 담은 여성 일자리 개발 • 워라밸 일터 조성 지원
3. 다양한 가족 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제주가족친화지원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돌봄·가족 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추진체계 강화 • 도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생활균형 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영세사업체·여성 집중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
4.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성인지정책 업무 지원체계 강화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운영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 NGO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강화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균형구성 목표관리 • 마을자치단위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 제주여성인재DB 활용 강화
	지역 성평등교육·연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 여성가족연구기관 기능 강화: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 제주양성평등교육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3.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민선8기(2022년~2026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민선7기(2018년~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⁵⁾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안 및 과제 마련을 위해 이루어짐
-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추진되거나 중앙의 시책 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음(김혜정 외, 2018; 장운선 외, 2019).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중장기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⁶⁾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책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 여성정책 계획의 시행 및 제주도의 특성화된 정책 계획 마련을 위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차~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왔음(고지영 외, 2014)
- 아울러 민선6기인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 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이 추진되기에 이름(제주특별자치도, 2015). 또한 민선7기에는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을 연이어 추진 중에 있음
- 이 같은 배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양성평등 관련 현안 해결 과제를 핵심시책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017년,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 과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 프로젝트의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정책(여성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인 'Gender Equality(젠더평등)'를 의미함. 궁극적인 의미는 생물학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나 제도로써 젠더 관계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임. 한국의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인지 성평등정책인지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6)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각 지역 양성평등 기본조례 근거)

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를 추진하였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19), 그 결과 다수의 제안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음.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18.8월)과 ‘제주양성평등 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20.9월) 등이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는 민선7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사례(장윤선 외, 2019)로서, 2020년 양성평등 진흥을 통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음⁷⁾
- 이와 같이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은 추진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의 사례는 정책의 실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추진체계 등 기반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올해는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추진기반 및 주요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내용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선7기(2018. 7월) 이후부터 민선8기(2022~2026)까지임
- 민선7기 기간 중 출범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지난 3년간의 양성평등 정책성적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은 민선8기 출범부터 임기 종료시기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

7) 뉴시스, 2020.9.18., “성평등정책관 신설 제주도 ‘양성평등 추진’ 총리표창 수상”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8_0001170929&cID=10813&pID=10800)

□ 공간적 범위 및 정책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⁸⁾로, 양 조직에서 추진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정책 영역 분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영역⁹⁾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영역 분류 기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분야 및 대과제	「더제주처럼(2019~2022)」 정책 영역	본 연구의 정책 영역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여성대표성)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여성 대표성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여성친화환경 조성	안전, 인권, 건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돌봄, 일·생활균형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일자리 활성화	여성 일자리 및 노동

8) 장운선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모델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계선조직(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과 참모조직(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혼합된 형태라고 분석함.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계선조직은 보조기관, 참모조직은 보좌기관에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좌기관은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 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가 있으며, 행정부지사 직속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정부부지사 직속 공보관이 있으며, 보조기관은 기획조정실 등 실국을 의미함(「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9)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2017,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정책 영역을 ‘돌봄과 여성가족복지’, ‘여성일자리’, ‘성인지역량’ 3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안전, 인권’ 분야의 정책 발굴이 취약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전, 인권, 건강’ 영역을 별도로 구성, 총 4개 정책영역으로 확대구성함

나. 연구 내용

- 앞의 연구 범위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 법적 기반 및 예산 규모
 - 추진체계(추진부서 및 인력, 협의 조정 기구, 거버넌스 등)
 - 협력 기관(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 정책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여성 안전·인권·건강
 -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 － 정책영역별 추진기반 구축·운영 성과 및 개선 과제
 - － 정책영역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여건 변화 전망
 - －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3. 연구 방법과 절차

가.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양성평등정책 분야 선행 연구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자료 분석(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더제주처럼」, 통계자료 등)
-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2019)」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2020)」의 도민·공무원 정책 수요 자료 분석 및 활용

□ 전문가 및 관계자 FGI

- 조사대상 : 정책 영역별 민·관·학·의·화·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 영역 1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영역 2 : 여성 안전·인권·건강
 - 영역 3 : 가족·돌봄·일-생활 균형
 - 영역 4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조사내용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전반 및 영역별 정책성과 평가, 민선8기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타지역 조사

- 조사대상 : 대전, 대구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선지역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 ※ 대전과 대구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 지역¹⁰⁾으로, 제주도가 참모형 조직 또는 계선형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할 시 각 조직 형태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타지역 사례 조사지로 선정함

10) 대전광역시시는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로 참모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으나(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 단위조직을 국 단위로, 부서장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한 지역임(장윤선 외, 2019)

○ 조사내용 : 해당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제주지역 시사점 등

○ 조사방법 : 서면조사(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2회)

○ 연구 설계 및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연구결과 지역 확산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실시(12월)

나. 연구 절차

○ 연구수행 절차는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 계획 마련 및 착수 보고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2단계	정책 환경 및 성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배경 및 변화 분석 민선7기 정책성과 평가(주요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3단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영역별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FGI를 통한 의견 수렴(7회, 37명) 대구, 대전 등 타지역 관계자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5명)
4단계	민선8기 정책방향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방향 수립 및 과제 도출
5단계	결과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보고서 작성 및 최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배경 및 변화

1.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3.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4.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5. 소결 및 시사점

1.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국제사회의 양성평등정책(여성정책) 패러다임은 발전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논의 속에서 발전해 왔음. 1970년대 ‘여성과 발전’(WID : Women in Development), 1980년대 ‘젠더와 발전’(GAD : Gender and Development), 1990년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 국제사회는 1947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창설 이후 여성정책을 독립적인 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유엔은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문제가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이재경 외, 2010). 이 회의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고려하는 ‘여성과 발전’(WID) 접근을 채택하게 됨
 - 1970년~1980년대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인 ‘여성과 발전’(WID)과 ‘젠더와 발전’(GAD)의 관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 WID와 GAD의 비교

구분	WID	GAD
접근	발전 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의 부재를 주된 문제로 인식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와 그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을 주된 문제로 인식
초점	여성	특히 여성의 예측에 대한 고심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승인되며 존속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
문제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배제 발전 자원의 절반 인구의 손실을 이 배제의 결과로 강조	공평한 발전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목표	여성을 포함하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전	여성과 남성 모두를 결정 과정에서 완전한 참여자로 포함하는 공평한 발전
해결책	여성을 기존의 발전과정에 통합	취약 집단과 여성의 세력화 및 불평등한 관계의 변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사업과 여성의 요소가 통합된 사업 주목 • 여성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 • 여성의 가계 관리 능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 불평등과 지구적 불평등을 고려한 발전 과정의 재개념화 • 여성과 남성이 결정한 실질적인 욕구를 확인하고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조건의 개선과 동시에 여성의 전략적 이해 제시 • 사람 중심의 발전을 통한 빈민의 전략적 이해 제시

자료: Parpart, Connelly and Barriteau(2000, 141), 시린 M.라이(2015:139)에서 재인용

-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은 ‘젠더와 발전’(GAD) 관점을 확대·발전시킨 개념임.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 대회에서 ‘젠더와 발전’ 접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젠더관점을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이재경 외, 2010)
- 같은 맥락에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로 선언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¹¹⁾

<그림 2-1> 지속가능한발전 17개 주요 목표



자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홈페이지

- 성 주류화란 “성평등 관점에서의 행정개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성평등 전략을 의미함(여성가족부, 2016). 성 주류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강경숙, 2016)

11)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합의문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16년 9월 제 71차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총 241개 지표가 확정되었고, 유엔은 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매 4년마다 글로벌 SDGs 이행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강희영, 2020)

- 첫째, 여성의 주류화로 모든 분야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특히 여성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임
 - 둘째, 젠더 관점의 주류화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경험의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이 성별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임
 - 셋째, 주류를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
- 성 주류화 전략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 도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및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등이 있으며, 각 정책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여성가족부, 2021)
 -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행정안전부, 2021)
 - 성인지통계(gender statistics) 및 성별분리통계(sex-disaggregated data)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로, 예를 들어 성별 경제활동참여율과 같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 성인지교육(gender training)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임(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 한편, 오늘날 코로나19로 건강, 돌봄, 노동 등 주요 영역의 성불평등 이슈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성인지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음¹²⁾
- 첫째, 성별분리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성별로 분

리된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성별분리데이터는 팬데믹이 여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취약성이 어떤 측면에서 더 높은지, 난민이나 이주여성은 어떠한 상황인지, 사회적 격리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이 폭력의 위협에 더 노출되는지 등을 보여 줄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분류된 수치들은 증거기반 대응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Data2X, 2020.3.23, 장은하김희(2020) 재인용)

- 둘째, 여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은 여성 경험의 특수성과 정책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여성의 손실을 심화시키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남녀 간 권력 격차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Data2X, 2020.3.23, 장은하김희(2020) 재인용)
- 셋째, 교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모든 대응에 있어서 성별 이외에도, 연령, 장애, 인종, 거주지역, 이민자, 사회 내 계층, 거주지 및 고용 상황, 그리고 정치적, 환경적 압박 요인 등의 다양한 교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성별은 이러한 포괄적인 불평등 내에서 교차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러한 교차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과 권력 구조를 밝혀주기 때문이며,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임(The University of Melbourne, 2020, 장은하김희(2020) 재인용)

2. 한국사회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운동과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음. 한국

12) 장은하김희(2020),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제 54호, 7-8P.

의 여성운동은 일제 강점기 민족 운동과 여성교육 운동으로 거슬러 갈 수 있으나,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단체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함.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여민회 등 여성운동을 목표로 활동함. 이후 고용과 가족, 섹슈얼리티 등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나타남
- 구체적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4년 성폭력방지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 2008년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을 시행(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적법 대체), 2019년 여성폭력방지법 등 다수의 법이 제정됨

○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과거 소외계층 여성과 일부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녀행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1980년 초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

-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정책 업무가 독립적으로 시행됨
-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여성정책 업무가 추진됨.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됨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정책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였음을 명문화함
-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동등’이란 남성 중심의 법·제도·규범·문화의 변화를 통한 결과의 평등을 의미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시행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 정책이 시행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각 정책의 추진 근거와 시행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2005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음. 이후 2011년에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 근거가 강화됨
 - 성인지예산은 여성단체의 예산운동 일환으로 출발하여 2006년 「국가재정법」에 법제화되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고,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정부에서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통계와 관련하여,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가 매년 발간되어왔으며, 2008년부터 「한국의 성인지통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발간되고 있음(고지영, 2017)
- 2001년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출범에 따라, 한국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가 구축 강화되고 여성정책의 범위가 일반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 여성부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청소년, 가족업무 포함)로 존재하고 있음¹³⁾
 -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과 폐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왔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거나 고유 업무가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등의 공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중앙부처¹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부처 내 양성평등 정책 기획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여성가족부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젠더 이슈인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하여 여

13)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는 총 97개국임(여성가족부)

14)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임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의 젠더폭력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음

-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통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업무 관련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3.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변화¹⁵⁾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변화와 연동하여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 왔음

1) 민선1기~3기(1995~2006)

: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정책)로 변화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이 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이전 1990년대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변화가 나타남
- 민선1기(1995.7월~1998.6월) 제주도의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는 기존 부녀복지에서 여성정책으로 개편됨
 - 1996년 사회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짐(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보육계)
- 민선2기~3기(1998.7월~2006.6월)에 이르러, 제주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됨
 - 민선2기~3기 제주도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기구는 민선1기 사회복지여성국 소속이었던 여성정책과에서 1998년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로 개편됨

15) 강경숙(2019),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와 향후과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포럼 및 제2차 성평등포럼 -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포럼 자료집 참고.

- 민선2기인 2000년에 양성평등정책의 협의조정기구인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0년~2015년)’가 구성됨.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는 타 위원회와 같이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 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2000년대 제주여성사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다수 구축하였음¹⁶⁾

2) 민선4기~5기(2006~2014)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 2006년 7월,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방향으로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이 강화됨
- 민선4기(2006.7월~2010.6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출발하면서 행정체계, 연구기관,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남
 - 민선4기의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는 민선3기의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정책과로 개편(2008년)되었고, 주무팀인 여성정책계가 양성평등정책계로 변경됨
 - 주목할 점은, ‘도지사 직속 여성정책특보(2006년~2010년)’를 임명하여 운영하였으며, 2005년 ‘제주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 설치·운영(2005년~2014년)’, 2007년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2007.1월), 2010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운영(2010.1월~현재) 등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임
- 민선5기(2010.7월~2014.6월)는 국가의 성 주류화 전략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 설치 등 인프라가 강화됨
 - 민선5기의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는 2008년 양성평등정책과로 개편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계)로 변경됨
 -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2011.12월~현재)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16)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는 임기 2년제로 제1기(2000년~2011년)부터 제8기(2014.2.1~2016.1.31)까지 구성·운영되었음. 제4기(2006년~2007년)까지 연간 1억 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연구 기능이 점차 약화됨(정영태 외, 2010)

하여 제주도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2012.4월)되었음.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법 제정(2011년)에 따라 2012년부터 제주연구원 내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운영(2012년~2014년)됨

- 이외에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으로 제주지역의 독립적인 여성가족 연구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2014.3월)되면서, 기존 제주연구원 내 여성정책 연구센터의 업무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이관됨

3) 민선6기~7기(2014~2022)

: 「더/제주처럼」 및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 지자체 차원의 양성평등정책 강화

- 민선6기(2014.7월~2018.6월)는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근거 법령이 제정되고, 제주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이 추진됨
 - 민선6기의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정책계)에서 2016년 여성가족과(양성평등계)로 변경되었고, 지자체 최초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이 추진되었고,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마련(2015.12월) 및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운영됨(2016.4월~현재)
 - 성별영향평가법 제정(2011년)에 따라 제주도성별영향평가조례 제정(2014.8월) 및 제주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2014.12월)되었음. 이에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게 됨
- 민선7기(2018.7월~2022.6월)는 민선6기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민선6기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인 「제주처럼(2015년~2018년)」에 이어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을 추진하고,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2018.7월) 및 부

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2020.9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 및 시책을 강화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2019.7월)하고 제주도의회의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2019.7월)하는 등 제주도정의 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넘어 예산 부서와 지방의회의 성 주류화 정책 기반을 확장해 나갔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의 전략과제에 ‘여성·가족친화’영역을 처음으로 신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임

- ‘여성·가족친화’부분의 주요 정책 과제는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②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 평등 환경 조성, ③ 일·생활 균형 및 아동·가족친화 환경 조성, ④ 도정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 ⑤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 제고, ⑥ 여성 안전 및 인권 증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됨

4.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함께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이 있음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더제주처럼」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매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민선6기인 2015년부터 프로젝트성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2018)」과 「더제주처럼(2019~2022)」을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인 4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¹⁷⁾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의 정책 과제는 아래 표와 같음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②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④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⑥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특화 사업’이 있음
- 「더제주처럼」의 주요정책영역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과제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들로 기획되어 있음. 주요 사업은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 개요

구 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
기간	2018년~2022년(5개년)	2019년~2022(4개년)
비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사회 실현
목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예산*	'18: 58,197백만원 '19: 74,970백만원 '20: 72,579백만원 '21: 60,854백만원 총 266,600백만원	'19: 6,829백만원 '20: 14,541백만원 '21: 15,482백만원 '22: 11,239백만원 총 42,745백만원

17)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차~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왔으나, 민선6기인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지역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이 추진되기에 이름(제주특별자치도, 2015).

구 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
주요 사업	6대 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

자료: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 「더제주처럼」(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21)

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더제주처럼」의 정책 과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더제주처럼」	
대과제	중과제	정책영역	시행과제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1. 제주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운영 2.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강화 3. 생활 속 성평등 확산사업 4. 도민 성평등 교육 실효성 강화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여성일자리 활성화	1. 청년여성 쉼터 지원센터 운영 2.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3.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4.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2. 국제협력 여성 네트워크 확대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 근로자의 모 부성권 보장 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수놓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안정화 2.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설치·운영 3. 다양한 가족지원 4. 가족친화인증 확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여성친화 환경 조성	1. 도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2. 여성친화(성평등) 마을 조성 건설사업 지원 3. 제주여성 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4. 제주 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1.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셉테드) 2.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3.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4. 여성 힐링공간 설치·운영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성 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1. 주요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화 2. 양성평등담당관 지정·운영 3. 성인지 정책 내실화 강화 4. 현장 맞춤형 성평등 정책 방안 마련

-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국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외에 「제주처럼(2015년~2018년)」과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민선6기와 민선7기에 연이어 시행된 ‘제주처럼 프로젝트’는 제주도 자체적인 양성평등 실현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및 지역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더제주처럼」의 후속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현 단계에서 국가 정책 기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본계획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소결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국내·외 양성평등정책의 배경 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방향을 정리하였음. 이를 통해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의 흐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을 위치시키고, 향후 민선8기 양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 국제사회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은 1970년대 ‘여성과 발전’(WID : Women in Development), 1980년대 ‘젠더와 발전’(GAD : Gender and Development), 1990년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으로 변화하였음.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은 ‘젠더와 발전’(GAD) 관점을 확대·발전시킨 개념으로, 1995년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운동과 국제사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음. 1980년대부터 한국 여성단체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1980년 후반부터 고용과 가족, 섹슈얼리티 등 많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나타남.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과

거 소외계층 여성과 일부 부녀를 대상으로 하는 ‘부녀행정’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1980년 초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본격적인 여성정책 업무가 추진됨.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정책에서 성 주류화 전략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였음을 명문화함. 2001년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출범에 따라, 한국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가 구축·강화되고 여성정책의 범위가 일반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여성부는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청소년, 가족업무 포함)로 존재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지역사회 변화와 연동하여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 왔음
 - 지방자치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선1기~3기(1995~2006)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은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임. 1996년 최초로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졌으며, 2000년에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가 출범함. 여성특별위원회는 당시 제주지역에 여성가족 관련 연구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 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제주여성사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토대를 강화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민선4기~5기(2006~2014)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연동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한 시기임. 특히, 민선4기(2006.7월~2010.6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출발하면서 행정체계, 연구기관,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남. 당시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지속적인 정책 요구도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러한 기조는 민선5기까지 이어짐
 - 민선7기는 민선6기 도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양성평등정책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제주지역에 특화된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년~2018년)」과 「더/제주처럼(2019~2022)」이 추진되었고,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7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 등 성평등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감. 이러한 흐름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로 이어졌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의 전략으로 ‘여성·가족친화’ 영역을 최초 반영하는 성과를 도출함. 이러한 과정은 제주지역의 독립적인 여성가족 연구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2014.3월)과 민선6기에 이은 7기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소수이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적인 여성단체 및 활동가와의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여성정책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실현을 목적으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을 정책 도구로 채택하여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성평등정책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지속되고 있음. 특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할당제 폐지, 역차별의 논란 속에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성평등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의 전략과 정책과제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성과는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단체(활동가)와 도정의 성평등 전문 행정가 그리고 여성가족연구기관의 협업의 결과임.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방향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2. 정책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3. 소결 및 시사점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가. 법적 기반 및 예산

1) 법적 기반

-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기존 「제주여성발전기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5.7.1. 시행)됨에 따라, 「제주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2015.12.31. 시행)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제정 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 1월 13일 전부개정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상위법령의 주요 조항들이 반영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이 구축됨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양성평등위원회, (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등), 양성평등촉진 정책(경제활동 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한 가족, 성인지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성차별 금지, 젠더폭력 예방 및 방지, 복지 및 건강증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공공·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도민참여 등), 양성평등기금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이외에도 성별영향평가조례('14.8.20,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예산조례('19.11.20, 예산담당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12.4.6, 성평등정책관) 등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별영향평가조례('18.10.11)와 성인지예산조례('21.4.14)를 모두 마련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지방의회 최초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음('19.7.10)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조례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임.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은 도정을 넘어 도의회 및 교육청 등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여성권익 및 젠더폭력 그리고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관련하여 다수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이를 부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음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관련 조례(성평등정책관 및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구분	조례명
성평등정책관	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6.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여성가족청소년과	1.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17.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20.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2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24.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구분	조례명
	27. 제주특별자치도 조순가정 지원 조례
	2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3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
	3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3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3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35.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3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3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38.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3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4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4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4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4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4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2) 예산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양성평등 정책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사업 영역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양성평등정책의 예산 규모는 도전체 예산의 약 0.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⁸⁾
 - 민선6기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총 9,015백만원으로 도전체 예산의 0.2%이었으나, 민선7기 도청이 출범한 2018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전년도보다 151.38% 증가한 22,662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이후로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0.35%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과 함께 여성가족정책 분야에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18) 양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 이외에도 타 부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 주처럼(2019~2022)」의 총 예산은 42,745백만원임('19: 6,829백만원, '20: 14,541백만원, '21: 15,482백만원, '22: 11,239백만원)

<표 3-2>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예산(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도 전체 예산	성평등/여성가족정책			
		예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2017	4,449,308	9,015	0.20%	1,214	15.56%
2018	5,343,404	22,662	0.43%	13,647	151.38%
2019	5,285,111	19,555	0.37%	△3,107	△13.71%
2020	5,822,869	19,615	0.34%	60	0.31%
2021	5,829,868	20,221	0.35%	606	3.09%

자료: 각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2018년의 경우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7월 신설됨에 따라 2차 추경예산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을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표 3-3>)

- 민선7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2018년에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됨.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해인 2018년 예산액은 452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 중 0.01% 수준이며 현재는 0.03% 수준으로 나타남
- 같은 해,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경우 양성평등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에 있던 보육, 청소년, 아동 업무가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6.37% 증가하였음

<표 3-3>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현황(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도 전체 예산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예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2017	4,449,308	-	-	-	-	9,015	0.20%	1,214	15.56%
2018	5,343,404	452	0.01%	0	0.00%	22,210	0.42%	13,195	146.37%
2019	5,285,111	940	0.02%	490	108.79%	18,615	0.35%	△3,595	△16.18%
2020	5,822,869	1,176	0.02%	236	25.06%	18,439	0.32%	△176	△0.94%
2021	5,829,868	1,603	0.03%	427	36.33%	18,618	0.32%	179	0.97%

자료: 각 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2018년의 경우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7월 신설됨에 따라 2차 추경예산서 활용)

주: 2017년의 양성평등정책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임

- 한편, 타지역과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은 도본청뿐만 아니라 하부행정조직인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까지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관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현황(<표 3-4>)을 살펴보면 행정시를 포함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5.7%로, 도본청(0.35%)보다 제주시청(3.6%)과 서귀포시청(1.8%)의 예산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3-4>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별 양성평등정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도 전체 예산	양성평등 정책 예산	도본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합계	성평등 정책관	여성가족 청산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5,829,868	334,841	20,221	1,603	18,618	209,825	104,795
100%	5.7%	0.35%	0.03%	0.32%	3.6%	1.8%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그러나 이를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표 3-5>), ‘성평등 및 여성 권익’ 0.17%, ‘청소년’ 0.3%, ‘가족’ 0.32%, ‘보육, 아동, 어린이’ 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 및 여성, 가족정책의 예산은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이 보육, 아동, 어린이 관련 정책 예산임을 알 수 있음

<표 3-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도 전체 예산	양성평등정책 예산					
	전체	성평등, 여성권익	가족	보육, 아동, 어린이	청소년	기타 (경비)
5,829,868	334,841	10,330	19,119	285,849	18,837	806
100%	5.7(100)	0.17(3.1)	0.32(5.7)	4.9(85.4)	0.3(5.6)	0.01(0.2)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이를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예산 중 ‘성평등 및 여성권익’ 예산은 도본청(<표 3-6>)의 경우 48.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시청(<표 3-7>)과 서귀포시청(<표 3-8>)의 경우 각각 0.2%, 0.1%로, 행정시의 경우 성평등 및 여성권익 관련 예산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가족, 보육, 어린이, 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나타남

<표 3-6>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합계	1. 성평등 정책관	2. 여성가족청소녀과						
		총액	여성 권익	가족 친화	청소년	보육	아동 친화	기타 (경비)
20,221	1,603	18,618	8,139	2,129	3,262	2,146	2,303	639
100%	7.9%	92.1%	40.3%	10.5%	16.1%	10.6%	11.4%	3.2%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표 3-7> 2021년 제주시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여성가족과 소관)

(단위 : 백만원, %)

합계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및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및 청소년수련관	기타 (경비)
209,825	460	11,118	188,907	9,388	52
100%	0.2	5.3	90.0	4.5	0.02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주: 제주시 아동정책은 주민복지과 소관임

<표 3-8> 2021년 서귀포시청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여성가족과 소관)

(단위 : 백만원, %)

합계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및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아동지원 및 보호	기타 (경비)
104,795	128	5,872	69,215	6,187	23,278	115
100%	0.1	5.6	66.0	5.9	22.2	0.1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의 변화가 일어난 도본청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35% 수준으로 조직체계 변화에 비해 예산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단일 행정체제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시 예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의 5.7%로 도본청 보다 양 행정시에 대부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라고 할 수 있음¹⁹⁾ 또한 정책영역별로 보면 ‘성평등 및 여성’ 0.17%, ‘청소년’ 0.3%, ‘가족’ 0.32%, ‘보육, 아동, 어린이’ 4.9% 순으로 나타나, 성평등 및 여성, 가족정책의 예산은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이 보육, 아동, 어린이 관련 정책 예산으로 나타남

□ 성인지예산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예산은 2018년 도 전체 예산의 4.3%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래로 가장 많았고, 2019년 3.3%, 2020년 2.5%, 2021년 3.0%로 2~4%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제도 시행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성인지예산이 도 예산 총액의 약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임²⁰⁾

<표 3-9>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규모(2018~2021)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총액	성인지예산 총액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
2018년	5,029,743	215,465	4.3
2019년	5,285,111	175,096	3.3
2020년	5,822,869	144,503	2.5
2021년	5,829,868	172,199	3.0

자료: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각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전국적인 상황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계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회계사업은 소수 추진 중에 있음

19) 2019년 기준, 타 지역의 경우 보육업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우 전체예산의 7~1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장윤선 외, 2019). 2019년 시도별 여성·성평등정책 추진기구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0.5% 이하인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제주도), 0.5%~1% 이하인 지역(부산, 대구, 대전), 1%~10% 이하인 지역(울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0%~11%인 지역(광주, 세종, 경남)으로 나타남.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 행정체제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시 예산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 2013년~201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의 예산규모는 '13년 59,838백만원(1.8%), '14년 54,564(1.5%), '15년 36,972백만원(1.0%), '16년 62,718백만원(1.5%), '17년 145,375백만원(3.3%)임

<표 3-10>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추이(2018~2021)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총계	244	2,155	274	1,751	238	1,445	259	1,7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회계	237	1,252	269	1,516	231	1,305	252	1,555
	97.1	58.1	98.2	86.6	97.1	90.3	97.3	90.3
기타특별회계	7	903	5	235	3	123	3	158
	2.9	41.9	1.8	13.4	1.3	8.5	1.2	9.2
기금	0	0	0	0	4	17	4	9
	0	0	0	0	1.7	1.2	1.5	0.5

자료: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²¹⁾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걸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연계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임

<표 3-11>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2018~2021)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		2020년		2121년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총 계	244	2,155	274	1,751	238	1,445	259	1,7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양성평등정책사업	18	205	25	435	30	498	45	683
	7.4	9.5	9.1	24.8	12.6	34.5	17.4	39.7
성별영향평가사업	186	1,777	226	1,281	183	900	201	1,006
	76.2	82.5	82.5	73.1	76.9	62.3	77.6	58.4
자치단체특화사업	40	173	23	35	25	47	13	33
	16.4	8.0	8.4	2.0	10.5	3.3	5.0	1.9

자료: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서

21) 지방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유형은 3가지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하,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하, 자치단체특화사업)’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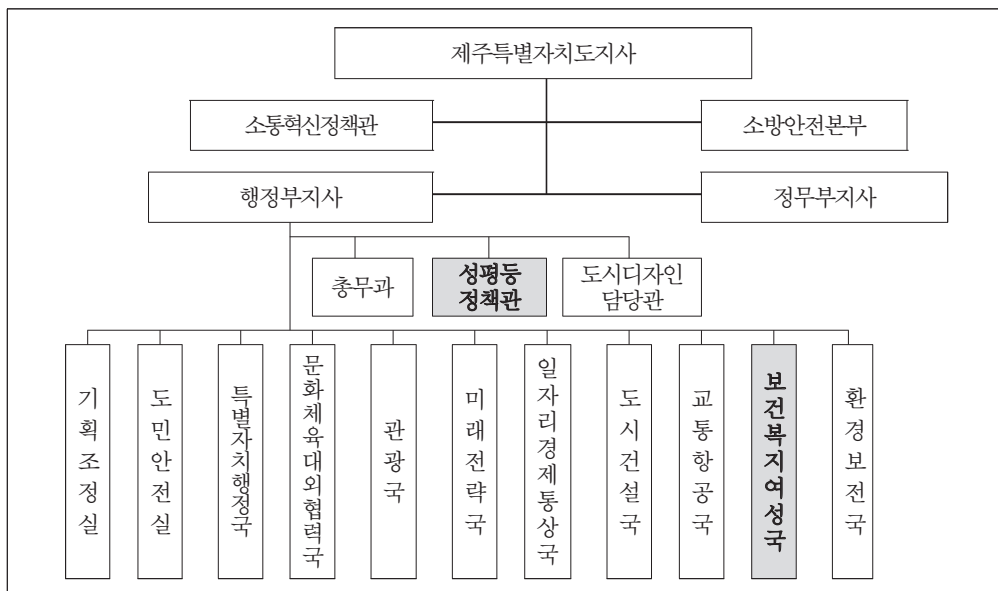
나. 추진체계

1) 담당조직 및 인력

□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변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음. 기존에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강경숙 외, 2016; 강경숙 외, 2017; 정여진 외, 2017 등)되었으나,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민선7기에 이르러서임
-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강화됨
- 그 결과 계선조직(보조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참모조직(보좌기관)인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병합된 형태로 이원화된 추진체계가 구축됨(<그림 3-1>)

<그림 3-1>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직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2021. 11월 현재)

주: 정무부지사 산하 조직으로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공보관이 있음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표 3-12>)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기존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팀이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확대됨(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그리고 기존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개편됨에 따라 청소년, 아동, 보육 등 돌봄 관련 업무가 확대(기존 복지청소년과 업무)되었으며,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능력개발팀이 폐지되는 등 사실상 기존의 여성권익 관련 정책은 축소됨
- 또한 여성친화도시팀(성평등정책관), 여성권익팀(여성가족청소년과)이 양 조직에 분산되어 있어 여성권익과 안전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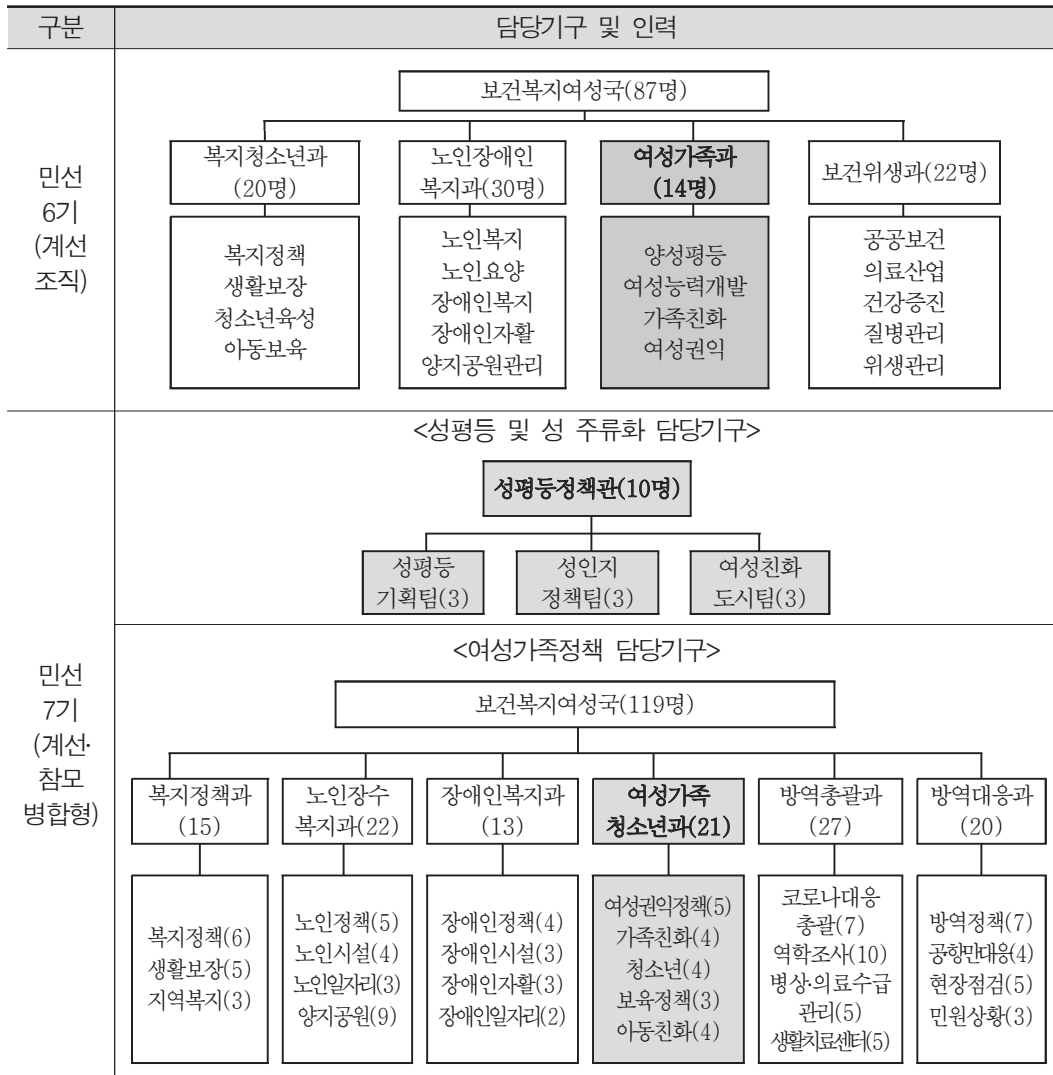
<표 3-12>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조직의 변화

구분	주요 변화
신설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18.8월)
이관	•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팀 → 성평등정책관(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 아동보육팀 →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유지	• 가족친화팀 • 여성권익(정책)팀
폐지	• 여성능력개발팀

○ 민선6기와 민선7기의 양성평등정책 담당 조직 및 인력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선7기 제주도청의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은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에 비해 담당 인력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민선6기 성평등·가족정책(여성가족과)의 인력은 14명이고 민선7기 성평등·가족정책(성평등정책관, 여성권익팀, 가족친화팀)의 인력은 19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평등·가족정책 전체 인력의 변화 없이 기존의 여성가족과 인력이 성평등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여성권익과 가족정책 인력이 축소됨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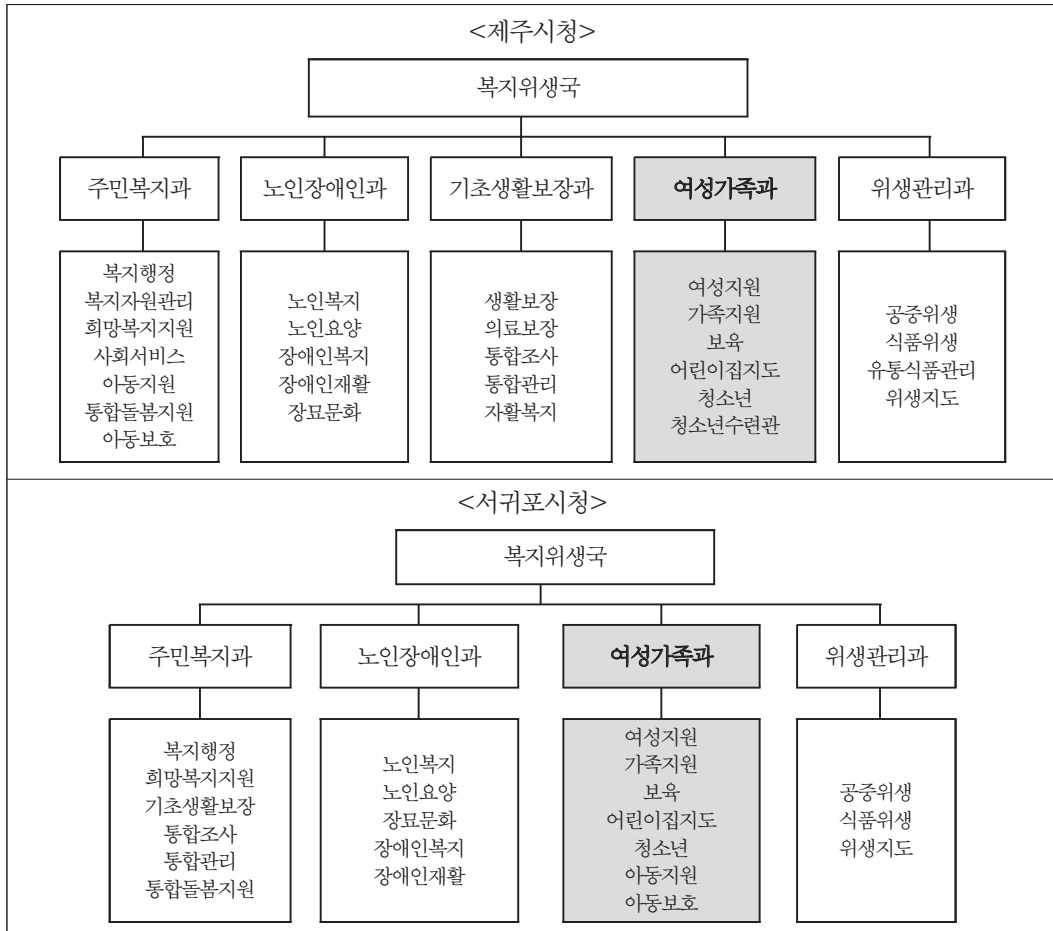
<그림 3-2> 민선6기와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인력) 비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2021.11월 현재)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본청과 별도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하부 행정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본청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의 여성가족과를 포함하여 살펴 보아야 함. 민선7기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민선6기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음

<그림 3-3> 민선7기 제주시청 및 서귀포시청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2021.1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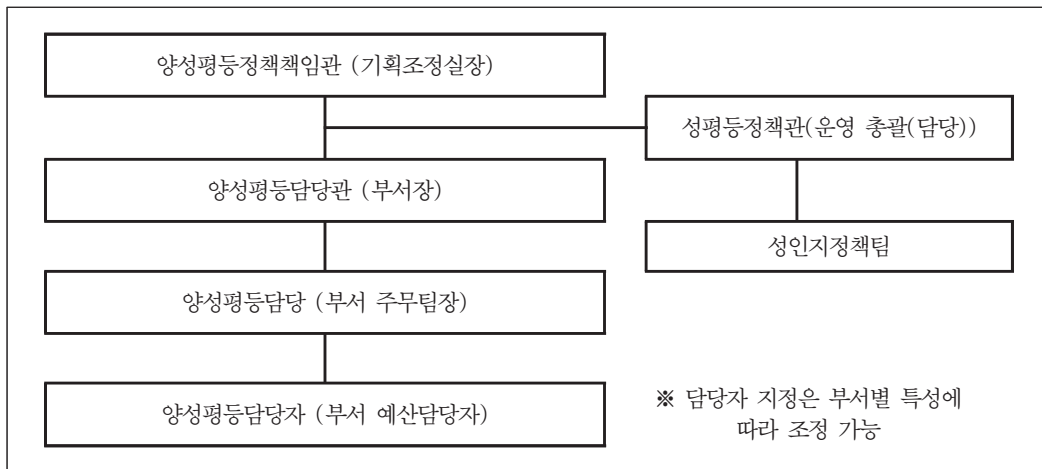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실시함으로써, 단일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하부 행정기관인 양 행정시와 읍면동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06년 7월, 단일 행정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시와 군이 통합·폐지됨.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와의 협업 및 각 행정시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강경숙 외, 2018, 강경숙 외 2020 등)

- 이러한 맥락에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는 도본청뿐만 아니라 하부행정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주요하게는 제주지역의 성인지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양성평등담당관제의 운영 체계는 아래와 같음²²⁾

<그림 3-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체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2021. 7월 현재)

- 양성평등담당관제는 2019년 도본청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2021년 읍면동으로 확대 지정하였고, 2021년 8월 현재 총 205개 부서에 양성평등담당관 지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담당관제는 부서별로 양성평등담당관(과장), 양성평등담당(주무팀장), 양성평등담당자(예산담당)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양성평등 관련 네트워크 및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임. 양성평등담당관의 담당자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음

2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총괄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며, 세부운영은 성평등정책관이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3-13>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의 주요 업무

구 분	직 책	업무 수행 내용
양성평등 담 당 관	부서장	- 부서내 양성평등업무 총괄 - 양성평등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사항 전달
양성평등 담 당	부서 주무팀장	-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성별분리통계 관리 - 성인지예산 및 결산 - 부서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제출 - 성인지 교육 우선참여 및 관련내용 부서 전파 등
양성평등 담 당 자	부서 예산담당자	- 양성평등 담당을 보좌하여 부서내 양성평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2021. 7월 현재)

□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운영 성과와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성평등정책 담당조직(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 주류화 정책과 여성가족정책을 이원화한 모델로, 이는 기존 여성정책 내 성 주류화 전략이 주변화되는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공식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강경숙 외, 2018)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동안 제주지역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전문 역량을 지닌 총괄기구 및 전담인력이 없다는 점이 관련 제도 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강경숙 외, 2016; 강경숙 외, 2017; 정여진 외, 2017 등)되어 왔음. 그러나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전문 인력이 확충²³⁾됨으로써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었고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되었음
 -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연구가 강화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남. 대표적으로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등 성평등정책의 기반이 강화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관광 콘텐츠 및 축제,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성 주

23) 성평등정책관과 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임

류화 정책이 다각화하여 추진됨

- 또한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도지사 공역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양성평등교육 기반을 구축·강화하였음

- 그러나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통해 이루어진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의 위상이 낮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여성능력개발팀의 폐지 및 여성권익과 가족정책 인력이 축소됨에 따른 여성가족 업무 과부화의 문제, 그리고 여성권익과 안전 관련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통합적인 업무 추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의 개선 방향 논의는 다음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원화된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성평등정책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기능 강화(조직 위상, 인력, 예산 등) 및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양성평등담당관 운영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양성평등담당의 총괄 업무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세부운영은 성평등정책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 2항)되어 있는데, 총괄과 운영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협의조정기구 및 젠더거버넌스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관련 협의조정기구는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음
-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2018년 4월)부터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권고제’를 시행하고 분과위원회(성평등

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및가족친화분과)²⁴⁾를 운영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정책권고제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의2(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 권고)²⁵⁾)

-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조례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및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있음

<표 3-14>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관련 협의 조정 기구

구 분	출범시기	구성	주요 기능
양성평등위원회	2016. 4월	위원장(도지사)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상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관련 사항 등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014. 12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표적인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성평등협의회는 제주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경찰청,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도모를 목적

24) 법률로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음. 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 성 주류화 정책,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젠더폭력예방인권 분과위원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등 정책 제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언 및 개선 등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분과위원회))

25) 2021년 10월 현재, 9개 부서에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6건 시행 중에 있음(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성평등 가치 반영, 양성평등 우수출자출연기관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성폭력예방 온라인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정비,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 편성 운영(농업기술원 등 5개 부서), 여성친화도시 기반 공공시설물 컨설팅 실시 등)

으로 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공동으로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는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음

- 이외에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²⁶⁾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정책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15년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컨설턴트 20여 명²⁷⁾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민간 컨설턴트들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 정책 대상과제 선정 및 이행성과 모니터링 등 주요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행정-지원기관-민간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젠더거버넌스는 소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행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영역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와 민관+의회+언론 등 확장형 네트워크로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연구기관 및 여성단체

1) 연구기관

- 제주지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2014년에 출범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²⁸⁾이 있음

26)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1)

27)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들은 지역사회에서 성인지정책 관련하여 대부분 3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에 9인의 컨설턴트를 신규 위촉함으로써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팅단의 규모가 확대됨

28) 2005년 5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내에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연구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열악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 증원과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2013.9.25)」가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재단법인 형태 독립된 여성정책연구 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하기에 이룸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사업 이외에도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 수탁기관으로는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2016년~)’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2020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지역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을 계기로 양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체계가 강화됨
- 대표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017년,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더제주처럼(2019년~2022년)」프로젝트의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음.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 총괄 추진체계인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18.8월)과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20.9월) 등이 있음
 - 또한 민선7기 제주도정의 양성평등정책 강화 기조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관련 수탁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특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등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연구 및 젠더 폭력 및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 연구 등 여성인권 및 안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이외에도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및 온라인 성인지 통계 구축 사업 등 성 주류화 정책 기반강화 사업이 도 수탁으로 추진되었으며, 성평등정책관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과 도의회 등으로 위탁기관을 다각화하였음
- 이와 같이 제주를 포함하여 17개 시·도 중 대전·세종과 전북을 제외하고 14개 지역에서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17개 지역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되어 수탁·운영하고 있음²⁹⁾
- 각 지자체의 연구기관은 지역의 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선7기인 2019

29) 이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됨(장윤선 외, 2019)

년 기준 인력 및 예산 등의 규모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가장 크고, 다음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장운선 외, 2019)

- 전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대부분 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단 형태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14개 중 8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네트워크,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각 지자체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15> 각 지자체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 유형

재단(8개)	연구원(6개)	부설 기관(2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충북여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여성 문화 및 교육, 연구, 자료 구축 등에 관한 추진체계 정립을 위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³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여성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21년 7월 기준, 총 16개이며 소속 회원 수는 12,950명임³¹⁾

30) 민선4기인 2010년 1월 도 사업소로 설치됨.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신은 여성교육문화센터(2008년 인재개발원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로 그 명맥을 이어 여성계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지역은 여성 관련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 있었으며 당시 관련 논의와 조직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오신정, 2012), 이에 따라 이후에도 제주여성가족 연구, 교육, 문화 등의 기관 설립 추진 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역할 및 중복성 여부 등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31)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s://jeju.go.kr/wel/woman/womanEducation.htm>)

- 제주지역의 여성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로, 소속 회원단체 9개³²⁾, 총 회원 수는 9,427명임
 - 이외 여성단체로는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여약사회’,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여성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 7개 단체이며, 총 회원 수는 3,523명임
-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적지 않으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성 주류화 관련 활동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YWCA 등의 단체 소속 활동가 및 회원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성 주류화 관련된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강경숙·이해웅, 2018)
- 한편,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관련 활동과 정책 참여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젠더거버넌스 실행 주체로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참여가 미흡하고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 방안 및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정책 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더제주처럼’ 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크게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실행력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대표성 제고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32)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대한간호협회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여성회, 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에너지와 여성 제주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안내사협회

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실행력 강화

□ 정책 추진체계 및 성 주류화 전략 강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제주 자체적으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 기획 및 추진, 주요 정책의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제 실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 성 주류화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이 강화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남. 그 결과 성평등정책 전국단위 우수 평가를 받고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실시
 - 정책수립 단계부터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사전 검토 협의
 - :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 검토 통보 → 검토의견 반영 → 이행여부 관리
 - ('20) 사전 검토제 매뉴얼 제작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지정·운영
 - 양성평등담당관제 단계적 확대 : ('19) 도 → ('20) 행정시 → ('21) 읍면동

<표 3-16>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지정·운영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도(83개 부서)	제주시(42개 부서)	서귀포시(37개 부서)	읍면동(43개)
과담당관(60) 직속기관(9) 사업소(12) 합의제(2)	살과(34) 도서관(2) 사무소(3) 보건소(3)	살과(30) 소(1) 사무소(3) 보건소(3)	제주시(26) 서귀포시(1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
 -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 ('19) 226개, ('20) 86개, ('21) 160개
 - 우수 개선사례 발굴 : 총 32개 발굴(2019년~2021년)) 및 우수부서 포상(12개)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19) 관광 정책 및 관광 콘텐츠, ('20) 축제, 홍보물(2건), ('21) 자치법규
 - 공무원 성인지교육의 다각화
 - 온라인 문화공연형 젠더토크 콘서트 및 성인지 사이버교육 등 추진
-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전략 강화를 위해 선도적인 제도들의 정착 수준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과 총괄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위상 제고가 필요함. 특히,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가족, 돌봄, 일자리, 안전, 인권 등 도 양성평등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평등 거버넌스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젠더거버넌스는 양성평등정책의 협의조정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제’ 실시
 -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 및 가족 친화분과)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신규 정책 발굴을 강화함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조정·이행, 점검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권고제 실시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평가 → 환류 기능 수행

<표 3-17> 정책개선 사항 발굴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추진 실적

부서명	권 고 사 항	추진실적
계		9개 부서 6건
정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성평등 가치 반영	(반영) 전략3.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강화 - 주요정책과제 :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중간보고회: (1차) '20. 9월, (2차): '21. 5월 계 획 고 사: '21. 7월
예산 담당관	양성평등 우수출자출연기관 인센티브 제공	○ 경영평가 양성평등 균형유지 반영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 : '20. 10. 14 관련기관 의견수렴 : '20. 12. 10 경영평가에 관련 지표 반영: '21. 5월 중

부서명	권 고 사 항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디지털 성폭력예방 온라인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제주 디지털성범죄상담소 개소: '21.3.3 상담소와 협업 통한 사업추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위한 조례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21. 5월중 － 주요내용: 시행계획 수립, 피해지원사업(의료 법률지원,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농업기술원 등 5부서	교육과정에 양성평등교육 편성 운영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1-4시간 성평등교육 편성	(농업기술원) 귀농창업활성화 창업기본-심화교육: 폭력 예방 통합교육 편성운영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1기 설문대여성학교 기본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 편성(8회)
진 부서 (공공이용 시설조성 부서)	여성친화도시 기반 공공시설물 컨설팅 － 1건당 5천만원 초과하는 공공 시설물 공사 및 용역 등	(서귀포시 도시과) 영천동 나비생태체험관 신축공사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

－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 확대 및 협력 강화

- 참여기관 확대(24개 → 31개) : 도(1), 공기업(10),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언론(1)
- 찾아가는 성평등포럼 운영 및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9건) 기관 공유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내 공공기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고 도정 전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행정 및 공공기관을 넘어 시민단체, 언론, 의회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 필요함. 그리고 NGO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뿌리 여성단체 및 성평등 활동 역량강화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큰 성과

는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양성평등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음

- ('20) 센터장 등 3인 인력 확충, 제주형 교육콘텐츠 개발(4종), 기본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
- ('21) 신규 1인 확충,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등 추진

○ 또한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 내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 및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함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3개 분야, 14개 과제) : '21. 6월
 - *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성평등 공직문화 기반 구축,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기관장 포함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2회)

○ 이외에도 도 성평등정책관은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 보도물 발굴 지원 등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 언어 개선, 성평등 청년네트워크 사업 및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성평등 미디어상 제정 운영을 통한 성평등 인식 고취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19) 제주CBS, 한라일보사
 - ('20) TBN제주교통방송 '스튜디오 1055 '제주양성평등 제주만들기'
- 성평등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새로운 주체 발굴
 - ('20) 페미니즘 책모임 '페이지기' 운영, SNS채널 운영

○ 한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인력 및 예산 등 인프라 및 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센터의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제주지역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다양한 도민 참여 및 홍보 강화, 학교 교육 및 시민 교육과의 양성평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 여성 문화유산 재조명 및 계승과 보존

- 성평등정책관을 중심으로 제주여성항일운동, 해녀, 김만덕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 발굴과 재조명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4·3 여성 구술채록사업 및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방영 등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 － 제주4·3여성생존자, 여성선각자, 문화예술인 등 인물 발굴 및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 제주4·3연구에서 소외된 고령의 제주여성 발굴 및 단계적 채록 실시(50여 명)
 - 제주 미술 속 허스토리 : 제주 문화예술가의 눈으로 보는 문화 속 성평등 비전 실현 : 문화예술 성평등 포럼,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 제작 방영(10명, 제주MBC)
 -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격변기 제주사회를 이끈 제주선각 여성인물 발굴 : 여성독립운동가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 등
 - －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추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 제주여성문화 재조명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초자료 구축 강화를 위하여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연구기반 및 아카이브 구축 등 인프라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해녀박물관, 김만덕기념관 등 관련 기관 간의 상호 협업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 여성 안전, 인권, 건강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안전, 인권, 건강분야 정책은 「더제주처럼」의 ‘여성친화환경 조성’³³⁾과 ‘여성안전 및 건강증진’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도민참여 활성화와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등 4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33) 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및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본 영역보다는 ‘성평등문화 확산’ 영역에서 지속 추진 필요

-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관련 사업으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여성안심 서비스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1년~현재)과 여성폭력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2021년~현재)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은 4개 목표, 8대 정책과제, 7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향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며,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임

1) 여성친화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³⁴⁾

-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여성친화도시팀) 및 인력 등 추진기반을 확보하였음. 전담부서 구성 이후 기존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서 ‘협의체 및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시설 및 조성사업 발굴’,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사업 등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이해웅·강경숙·윤금이, 2020)
-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대표적인 추진 성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도민참여단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44명) 구성 및 성평등 마을 조성 컨설팅 사업을 통한 성평등 마을 지정 운영 사업 등이 있음
-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차별을 감소시키고 마을규약을 재정비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성평등 표준 마을 규약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조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관련 사업이 없으며, 「더제주처럼」의 여성친화환경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이외에도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함
 -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확대 추진(3종 → 4종, 200가구)
 - * 안심 4종세트: 무선 동작 감지기, 가정용CCTV(홈캠), 문열림 센서, 호신벨
 - 여성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 합동 여성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2022~2026, 여성가족부)을 위한 과제가 놓여 있으며,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임. 내용적으로는 전담 주무부서와 전담인력이 구성된 만큼, 기존과 같이 개별적 사업과제보다는 제주도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 사업이 필요함 (이해웅·강경숙·윤금이, 2020)

2)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
- 기존 여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020년),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속 운영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2019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2021년),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2021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2021) 등으로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었음
 - 24시간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핫라인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대응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와 경찰, 1366제주센터의 가정폭력 대응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음
 - 폭력피해 여성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통한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환경개선이 기대됨
 -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를 강화하고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내 의료원과 경찰서, 장애인상담소 등 10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도 특화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도민대상의 폭력예방 교육사업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 인식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등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및 센터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보다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20, 12)하였고 향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예방교육의 효과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교육 시행 방법 강구와 성폭력예방교육과 성인권·성평등교육에 치중돼 있는 현행 여성폭력예방교육을 향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양성평등 등 다양한 여성폭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여성 안전, 건강권 강화

- 여성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제주지역 안전 분야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최근 약간 상승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여성들의 생활안전 환경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테드)사업,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 등 여성 안전 분야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특히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안내 확대(2019년 스마트관제시스템 최초 도입), 밤길 안전을 위한 가로등 정비 확대, 2020년 신규로 추진한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와 여성 안심 3종세트(동작 감지기, 창문열림경보기, 호신벨) 지원

사업 등에서 생활형 안전 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여성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기존의 1366제주센터에 아동·여성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주여성공공안심관 8명을 채용 (2020)하여 도민들의 공중화장실 사용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도내 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매년 이를 확대하고 있음
- ※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설치 현황 (2020년 8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12개소 설치 예정)
- 향후 개선 과제로는 기존에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어플 업그레이드(신규가입) 불가 등 운영 효율성 저하로 2020년 6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환경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여성의 생활안전 환경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자연재해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안전교육 및 활동 참여 활성화 등 사고나 재난으로부터의 성인지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취약계층 여성건강 증진 기반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의 지원 사업 등 사각지대 대상의 성인지적 건강증진 사업이 지속 운영되었음
-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힐링공간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여성의 정서적 건강과 쉼은 물론 힐링과 행복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정서적 치유와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 향후 임신·출산 외 다양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생애주기별 사업을 모색할 필요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 여성 지원을 타지역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 사업 등에서도 생애주기별 육

구가 반영되어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음

다.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계획)’³⁵⁾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더제주처럼’ 등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크게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여성대표성 제고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³⁶⁾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강화
 - 민선7기의 가족정책은 민선6기에 이어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지역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름으로써 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 민선6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직장 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을 한 기관에서 총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주가족친화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였음
 - ‘제주처럼(2015~2018)’은 체감형 양성평등계획으로 ‘사회적 돌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환경 조성 면에서 가족정책 추진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고,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마을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르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 ‘수놓음육아나눔터’와 같이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줌
 - 민선7기의 가족 영역의 사업들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사업, 중앙정부를 비롯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정책으로 추진하는 돌봄 및

35)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둘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셋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넷째,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임

36) 민선7기 <더 제주처럼>의 비전은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이며,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등 3대 목표로 제시되었는데, 가족 개념이 들어가 있어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목표를 하위 제목으로 달았음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출산장려금 및 둘째아 양육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청소년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등이 계획·추진되었으나 종합적인 가족정책 목표나 실행계획 없이 업무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음

- 따라서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동력으로서 가족정책 담당기구 구축·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성평등정책과 연계한 가족정책 및 가족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정책 설계 강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변화는 있었으나,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응하는 보편적 가족정책과 예방적 가족정책은 미약하였음
- 향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 설계와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 ‘가족다양성 포용’으로의 정책 전환 그리고 성평등 및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정책 수립이 필요함

○ 지역 특성과 욕구 수립에 기초한 가족정책 설계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자녀의 학업을 위한 이주 가족, 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 실현을 위해 이주한 가족이 겪는 가족생활문제 등은 양성평등정책에서 주변화된 상태임. 향후 지역의 특성이 만들어내는 가족형태나 가족의 삶을 담아내는 가족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기관 연계, 좋은 프로그램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함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제주형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자녀돌봄 서비스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24

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 및 도민홍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확대·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 2018년 15개소, 2019년 36개소, 2020년 42개소, 2021년 4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 2019년 62개팀, 2020년 68개팀, 2021년 75개팀으로 발굴해 운영하고 있음

－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2021년 8월말)

- 6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 학대·분리 아동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전담요원배치: 2020년 2명, 2021년 8명으로 확대
- 행정시 별 아동학대 전담 조직 신설('21.7.2.)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11명)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강화 : 위탁가정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지원(월 5만원 정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확대(3년 이내 → 5년 이내),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발굴·양성(7가구)함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했으며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했음.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더 신축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 2020년 118개소, 2021년 123개소로 확대 운영함
- 2021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92.1%(전국 1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9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보전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처우개선 및 운영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음

－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2020년 720시간, 2021년 840시간으로 증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이행 지원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확대 : 한부모 및 조손(52% → 60%), 청소년 한부모((60% → 7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확대로 양육부담 경감

<표 3-1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연령 확대(연령 미만)			금액 인상(월 지원액)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한부모(조손)	만18세	만14세	만13세	20	13	12
청소년한부모				35	18	17

- 아동 양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수혜대상: 38,920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 및 도민홍보 추진(2021년 8월 말)
 -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연 200만원/5년 1천만원) 지원 : 667명 지원
 - 출산여성 한약지원(675명), 난임치료 지원(11명), 육아용품 대여(5,830건)
 - 저출산 극복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홍보 추진: 방송캠페인, 버스광고 등 추진

□ 가족돌봄 서비스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공립노인요양시설 확충 : 2019년 주간보호 2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확충함
- 그동안 제주지역의 돌봄 정책은 아동·노인 돌봄에 집중되어있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토대로 돌봄·배움·일·쉼·노후 등을 포괄

하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반영한 사회적 돌봄을 발굴·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확산

□ 근로자의 모·부성권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사업으로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사업 운영,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 업무대행자 지원 : 업무대행수당 지급(매월 200천원)
 -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 향후 남성 육아휴직의 범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단계적 남성 육아휴직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확산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생활 및 개인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임금노동자로서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책임자로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국에서 경제활동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지역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기관 대상 일·생활 균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가족친화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 2008년~2015년 11개, 2016년~2019년 64개,

2020년 85개, 2021년 92개소로 확대됨

- 2020년 전국과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규모별 추이

<표 3-19> 전국과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규모별 추이

구 분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신규인증 기업
		총 계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전국	2020년	4,340(100.0)	2,839(65.4)	456(10.5)	1,045(24.1)	859
제주	2020년	85(100.0)	56(66.0)	4(6.3)	23(35.9)	24
	2019년	64(100.0)	37(57.8)	4(6.3)	23(35.9)	11
	2018년	53(100.0)	27(50.9)	3(5.7)	23(43.4)	17
	2017년	36(100.0)	13(36.0)	3(8.0)	20(56.0)	16
	2016년	20(100.0)	6(30.0)	2(10.0)	12(60.0)	8
	2014년	12(100.0)	2(16.6)	2(16.6)	8(66.8)	5
	2013년	7(100.0)	—	1(14.3)	6(85.7)	4
	2012년	3(100.0)	—	1(33.3)	2(66.7)	2
	2008년	1(100.0)	—	—	1(100.0)	1

자료:「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서」(2021.9),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가족친화경영가이드라인」

※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업종별 분포: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부문, 전기/가스/수도사업 순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과반수가 4개 업종에 집중됨. 숙박/음식점업/농어업/임업 분야는 아직 가족친화기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³⁷⁾

- 가족친화경영 단계별 컨설팅·직장교육 지원: 2021년 23개사 23회를 지원함
- 인센티브 확대: 2021년 13개사 지원함(2021.8.)
-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가족친화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추진: 우수기업 포상 5개사

37)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슈브리프(2021년)「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방안」(이연화·장신옥)에서 재인용

-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추진: 가족사랑의 날, 초과근무총량제 운영, 홍보 5개사업

- 향후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전체 사업체의 93.4%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해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육아부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기업주와 남성대상 일·생활 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라.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 여성 일자리 정책,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 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로드맵과 여성 일자리 정책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로드맵(2017.10)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자리 과제와 연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일자리 자체 과제를 발굴·수립하기 위하여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이하 제주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음
- 제주 일자리 로드맵(2018~2022년)의 중점과제와 실천과제
 - 제주 일자리 로드맵은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5천개(명)(매년 5천개) 창출, 재정지원 일자리 110천개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8대 중점 과제, 70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총 투자 예산은 28,367억원임

<표 3-20>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의 중점·실천과제

분야		중점과제(8)	실천과제(70)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	14개
일자리 창출	공공	②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8개
	민간	③ 공공 일자리 확대	6개
		④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8개
		⑤ 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조성	12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일자리 질 개선		⑦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5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⑧ 청년·여성·신증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1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

○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내 여성 일자리 과제

- 제주 일자리로드맵에 포함된 여성 일자리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 과제’의 세부과제로 1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고, 예산은 93억원으로 전체 5년 일자리로드맵 투자예산 계획의 0.3%에 그침

- 경력단절여성 특화 상담, 직업·창업훈련, 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확대, 여성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확대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설계 및 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지원 (3개소)
- * '18 ~'22년 / 투자액 93억원, 인력양성 2,700명, 취업알선 12,000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8~2022년)」.

○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내의 성별 일자리 성과 파악 한계 및 여성일자리 대책 미약

-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민선7기 도정의 일자리정책으로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왔지만 일자리정책의 여성 참여 등, 정책의 성별 성과에 대한 실적을 파악할 수 없고, 여성 일자리 정책은 전체 예산의 0.3%에 그치며 자체적인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도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기반 강화 필요)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이 예고되고, 민선8기 새로운 도정 수립을 앞두고 제주지역에 특화된 여성 일자리정책 기반 강화, 도정 일자리정책의 성 주류화 등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함

2) 제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시책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함.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20~2024)이 운영 중에 있음
 - －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일하는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여성의 경력유지체계 강화, 30대·40대 경력단절여성 특성 및 일자리 다양성을 반영한 특화된 지원체계 개편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내실화, 일하는 방식 및 영역 다양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돌봄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둠
-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해왔고, 2021년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연계하여 49개 과제(33,095백만원)를 제출하여 시행 중임. 세부과제 중 ‘여성 일자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표 3-2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 주요 시책(2021)

정부 정책과제	주요 세부 사업	비고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 제주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등 	30개 사업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일자리지원(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5개 사업
다변화되는 일방식 영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등 	3개 사업
돌봄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운영 • 수놓음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등 	11개 사업

자료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21.4.).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2021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방식영역 대응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가)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여성 직업훈련기관 운영 지원

-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강화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직업훈련, 여성인턴사업, 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설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4개의 여성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총 1,745백만원(국비 899, 도비 400, 자체 446)임

<표 3-22>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직업훈련 인프라(4개소)

구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일센터	서귀포여성새일센터	한라여성새일센터
운영주체	제주 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 YWCA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소재지	제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종사자	8명	9명	9명 *취업상담사(1명)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	7명
지정일	1998.04.07.	2009.02.01.	2009.07.01.	2016.05.2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 제주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국비, 연간 10~11개 과정), 직접 일자리사업인 새일여성인턴사업, 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설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연간 취창업건수는 2018년 1,731명, 2019년 1,689명,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1,725명의 성과를 내었고, 2021년 9월 기준 1,262명의 성과를 나타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연간 예산은 2021년 기준 약 14억원임

<표 3-23> 제주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성과(2018~2021)

연도	취·창업건수	직업훈련(국비) (교육과정/교육인원)	새 일 여성인턴	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설계
2021	1,262	9개과정/163명	61	205명	152건/1,224명
2020	1,725	10개과정/189명	78명	328명	105건/2,015명
2019	1,689	11개과정/222명	86명	403명	229건/4,688명
2018	1,731	11개과정/226명	105명	444명	225건/7,295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2021.9월 기준)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 취·창업 교육워크숍 등의 지원 사업 및 상담 등과 더불어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700~800여명의 여성 취·창업 알선 지원을 하고 있음

<표 3-2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성과(2018~2021)

연도	취·창업 건수	직업훈련 (과정·운영·인원)	취·창업지원사업 (교육, 워크숍등)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과정·운영·인원)	취·창업자 상담
2021	416	30개과정·38회·504명	686명	25개과정·36회·379명	13,859명
2020	756	37개과정·72회·1,166명	3,875명	43개과정·55회·577명	18,713명
2019	843	37개과정·66회·1,100명	788명	50개과정·59회·673명	10,332명
2018	739	36개과정·67회·1,059명	2,394명	43개과정·54회·567명	11,146명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2021.9월 기준)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도민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2016년 5월부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추진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은 가족친화적 인식 및 기업 문화 확산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컨설팅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추진현황) 2016년 20개 기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 85개 사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었음.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과반을 이루었으나 인증기업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65.9%, 공공기관 29.4%, 대기업 4.7%로 중소기업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성으로 변화되었음
- 제주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 사업체의 93.4%인 제주지역의 영세한 기업 구조로 인해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산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인증 기업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디지털정보화전문가 양성과정(1기, 2기), 스마트폰사진인화 소자본창업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 2018년~2021년 간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 사업을 통해 360명이 교육 수료하고, 2020년까지 55~65%대의 비교적 양호한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5>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성과(2018~2021)

연도	교육과정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21	디지털정보화전문가양성 소자본창업과정 등 3개 과정	60	60	100.00	20	33.33
2020	디지털카페창업과정 외 4개과정	98	94	95.62	52	55.30
2019	방과후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외 4개과정	108	104	96.30	62	62.50
2018	피지컬컴퓨터로봇강사 외 4개과정	115	102	88.70	67	65.6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2021.9월 기준)

다) 다변화되어가는 일 방식·영역 대응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 정책 강화

- 다변화되어가는 일 방식과 영역에 대응한 새로운 취·창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 내에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발맞추어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제주도 자체 시책을 개발하여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여성 창업 및 기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음

□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2016~)

-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민선6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인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총 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 사업목적 : 여성공동체(도내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여성 5인 이상 구성)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 기초설계(교육, 창업팀 구성)부터 예비창업 등록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창업관련 아이템개발, 컨설팅 및 교육, 자문, 인프라구축비
 - ※ 창업보육비 15백만원 이내 지원, 기자재구입 40%이내 지원
- 주요성과
 - 협동조합 설립: 26개 팀·170명
 - 사회적기업가 육성 선정 7팀('17년/2팀, '18년/3팀, '19년/2팀)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6팀('16년/1팀, '17년/2팀, '18년/2팀, '19년/1팀)
-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제주의 공동체 문화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정책 수단 활용, 제주로 이주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의 구성과 참여, 여성들이 강점을 가지는 교육, 문화, 예술,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과 활동을 중심으로 창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현재 6년째 접어들고 있는 동 사업은 제주도의 특화된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사업이라 할 수 있고, 향후 보완점 등의 수요 파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기업 육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 의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여성 창업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안기업과)

는 여성기업 디자인 제작 지원, 전사박람회 참가 지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지원 및 포럼·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표 3-2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성과(2018~2021)

(단위: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비	추진 실적
2018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사업	90	- 여성기업 전사박람회 참가 지원 : 11업체 - 여성기업 디자인 제작지원 : 11업체 - 여성 CEO경영연수 및 포럼 : 8회, 716명
2019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사업	95	- 전사박람회 참가 및 참관 지원 : 10업체 - 디자인 제작 지원 : 11업체 - 여성경제인 포럼 및 워크숍 개최 2회
2020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3개사업	108	- 여성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중('20.4~10) - 전사박람회 참가지원 : 3개업체 - 디자인 제작지원 : 9개업체, 워크숍: 1회
2021	여성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100	- 여성기업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여성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65	-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 10업체 - 홍보마케팅 : 2업체 - 전문성강화 교육 : 2업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내부자료.

3) 향후 과제

○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기반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창업 지원 등의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 제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데에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의무가 약화된 데에도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주 도정 내에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여성 일자리 추진 기반이 취약(여성일자리 전담팀 부재 등)한 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보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설치되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되었는데, 여성 일자리 관련 시행계획은 지난 4년간 거의 변화 없이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15개 내외의 동일한 사업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 중 지자체의 자체적인 특수 시책은 여성 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극히 일부에 그침. 또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인 「더 제주처럼」에 4개의 여성일자리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 2개 정책(청년여성챌린지지원센터 운영,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추진되지 않았고, 두 개 정책(여성 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수요맞춤형 여성 일자리 지원)은 추진되었음
- 민선8기에는 도 전반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의 성 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정책 기획, 추진, 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과 전담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에 대한 대응 필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안이 국회 통과(2021.11.11.)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지역의 대응이 필요함
- 법 개정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대상이 미취업경력단절 여성에서 취업 여성을 포함하는 전체 여성으로 확대, 정책의 방향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서 예방 기능 강화, 구인구직 정보 수집 의무화, 여성경제활동 백서 발간,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지원을 위한 기관 지원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 여성 일자리 전략과 과제 개발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제주지역에 특화된 여성 일자리 시책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임
- 현재 노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노동시장과 노동의 디지털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일·생활 균형 및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 여성 고용과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제주는 산업 기반이 약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특성을 지니지만, 환경, 관광, 공동체 문화, 지역

- 과 가족경제에 기여한 여성 노동의 역사, 이주민 증가 등 자연적, 사회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제주의 산업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그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동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

3. 소결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정책영역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음.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와 과제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에 있음. 2018년 8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기존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에 있던 양성평등 정책 기획과 성 주류화 전략 정책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이관·강화됨. 이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 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및 연구가 강화되었으며, 부서별 양성평등담당 관제 운영, 주요 정책의 사전 성인지 검토제 실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등 지역 차원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의 조직 위상이 낮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구성이 기존 여성가족과의 여성권익 및 가족정책 관련 인력과 업무의 축소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았을 때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확대 수준은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우선, 이원화된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기능 강화(조직 위상, 인력, 예산 등) 및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양성평등정책 영역별 추진 성과와 과제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영역은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전문 인력 충원 등 추진체계 강화에 따라 많은 정책적 시도와 성과를 도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정책 전국단위 우수 평가를 받고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먼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제주처럼(2019~2022)」 기획 및 추진,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실행력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등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이 강화되었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관광 콘텐츠 및 축제,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다각화하여 추진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권고’ 기능을 강화하였고 제주도내 2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 아울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지자체 최초 지역 차원에서 양성평등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성평등교육의 체계화와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음.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9월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향후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강화,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한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은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함께 여성친화도

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여성친화도시팀) 및 인력 등 추진기반을 확보하였고, 성인지적 안전 및 젠더폭력 관련 사업이 강화되었음. 전담부서 구성 이후 기존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에서 ‘협의체 및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시설 및 조성사업 발굴’,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사업 등 구체적이고 다각화된 업무를 추진하게 됨

- 또한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등의 긴급대응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020년),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설치(2019년),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2021년),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운영(2021년),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2021)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되었음. 특히 도 특화사업인 공공기관 및 도민대상의 폭력예방교육사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 인식강화를 위한 고충상담원 교육과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등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여성들의 생활안전 환경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테드) 사업,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확대, 여성안심 3종세트 지원 사업 등 여성안전분야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및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의 지원 사업 등 사각지대 대상의 성인지적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사업을 기획 중에 있음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정책 영역의 개선 과제로는 우선 성평등정책관(여성친화도시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여성권익팀) 양 조직에 업무가 분산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 강화, 코로나19와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성인지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그리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생애주기별 사업과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 및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민선7기의 가족정책은 민선6기에 이어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지역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름으로써 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음. 민선7기의 가족영역의 사업들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자립지원사업, 돌봄 및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문화 확산 관련 사업, 출산장려금 및 둘째아 양육 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등이 계획·추진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자녀돌봄 서비스는 ‘제주형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아동지원 서비스 강화 및 아동권리 보장 추진’,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 및 도민홍보 추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 확산을 위하여 남성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 사업 운영, 남성공무원 휴직업무대행자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업무대행수당을 지급 등 근로자의 모·부성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확대,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정시퇴근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사업 등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은 종합적인 목표나 실행계획 없이 업무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동력으로서 가족정책 담당기구 구축·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반영한 사회적 돌봄을 발굴·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제주도내 전체 사업체의 93.4%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의 사업을 확대해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 조성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육아부담,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직장문화 등 기업주와 남성대상 일·생활 균형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등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지자체의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내에 여성 일자리 정책, 정부의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내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로드맵,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일자리로드맵에 포함된 여성 일자리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 과제’의 세부과제로 1개 과제가 포함되는 것에 그쳐,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 내의 성별 일자리 성과 파악 한계 및 여성일자리 대책 미약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시행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5대 정책과제 중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연계하여 49개 과제(33,095 백만원)를 제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방식·영역 대응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한 예로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인 “제주 여성공동체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민선6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인 「제주처럼」의 일환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총 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이는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여성 창업 지원 등의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은 미약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선8기에는 도 전반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의 성 주류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 정책 기획, 추진, 관리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과 전담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안이 국회 통과(2021.11.11.)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지역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주의 산업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그 특징을 반영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과 시책 개발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 1. 조사 개요
- 2. 제주지역 조사 결과
- 3. 타지역 조사 결과
- 4.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가.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조사 개요

- 본 의견조사는 제주 도내·외 행정,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양성평등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의 양성평등정책 참여 경험 및 인식을 통하여,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이루어짐
- 조사 방법은 크게 도내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타지역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서면의견조사 2가지로 이루어짐
 - 먼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경우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시간씩 7회 이루어졌고 1회당 연구진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하였음
 - 타지역 조사³⁸⁾는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 2개 지역의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서면방법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전과 대구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제주도가 참모형 조직 또는 계선형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할 시 각 조직 형태의 장단점 및 고려 사항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타지역 사례 조사지로 선정하였음
- 의견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1>과 같음

<표 4-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Ⅰ 도내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조사 목적 및 내용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성과 분석 및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도내 공공기관,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영역의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37명

38) 대전광역시는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개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획조정실 라인으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대구광역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부서로 참모형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었으나(여성가족정책관) 담당 부서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과 단위조직을 국 단위로, 부서장의 직급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한 지역임(장윤선 외, 2019)

구분		내용
	조사 기간	- 2021.9.24. ~ 9.30
	조사 방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의실 등에서 집단 면접 실시(7회)
② 타지역 전문가 서면 의견조사	조사 목적 및 내용	- 각 지역 민선7기 양성평등 정책 사례 조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과제 개발
	조사 대상	- 대구 및 대전 지역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5명 (대전지역 3인, 대구지역 2인)
	조사 기간	- 2021.10.19. ~ 10.25
	조사 방법	- 개방형 질적 질문으로 구성하여 서면 조사 실시

나. 조사 참여자의 특성

- 본 연구의 조사 참여자는 제주도내·외 39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42명임
 - 제주지역의 전문가 의견조사 : 공공기관, NGO, 학계, 의회, 언론 등 영역별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 37명
 - 타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 대전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의 행정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NGO 활동가 등 5명
- 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 성별 : 조사 참여자 42명 중 여성 35명(83.3%), 남성 7명(16.7%)임
 - 소속 및 활동영역 : 학계 12명(28.6%), NGO 12명(28.6%), 공공기관 12명(28.6%), 의회 2명(4.8%), 언론 2명(4.8%), 행정 2명(4.8%)³⁹⁾ 등의 종사자 순임. 학계, NGO, 공공기관 종사자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소수이지만 도의회 의원과 언론사 기자, 타 지역 공무원이 참여함

39) 행정 영역 종사자 2인은 모두 타 지역 공무원으로, 제주지역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별도의 대면 회의와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짐

<표 4-2> 조사 참여자의 특성

사례	성별	소속 및 활동영역	비 고
1	여성	NGO	도내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분야
2	여성	NGO	
3	여성	공공기관	
4	남성	학계	
5	여성	언론	
6	여성	NGO	
7	여성	NGO	
8	남성	학계	
9	여성	의회	
10	여성	의회	
11	여성	언론	
12	여성	학계	도내 여성 인권, 안전, 건강 분야
13	여성	NGO	
14	여성	NGO	
15	여성	NGO	
16	여성	학계	
17	여성	학계	
18	남성	공공기관	
19	여성	NGO	
20	여성	학계	
21	여성	학계	
22	여성	학계	도내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분야
23	여성	공공기관	
24	여성	공공기관	
25	여성	공공기관	
26	여성	공공기관	
27	여성	학계	
28	여성	학계	
29	남성	공공기관	
30	여성	NGO	
31	여성	공공기관	
32	여성	공공기관	
33	남성	공공기관	도내 여성 일자리 및 노동 분야
34	남성	학계	
35	여성	NGO	
36	여성	NGO	
37	남성	학계	
38	여성	행정	타 지역 (대전, 대구)
39	여성	공공기관	
40	여성	행정	
41	여성	공공기관	
42	여성	NGO	

2. 제주지역 조사 결과

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영역의 전문가 FGI는 총 2회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학계, NGO, 의회, 언론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등 추진기반 및 성 주류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통합적 운영 및 위상 강화 필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조직체계는 운영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참여자들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개편과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 민선7기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 등 조직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었으나, 예산 및 인력 등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체감이 낮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그러나 이는 예산과 인력을 포함하여 조직 위상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드러낼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사례 2, 4>)
- 또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권고제,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과 연동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주도적 역할(컨트롤타워)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관 조직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사례 1, 2, 4>)

성평등정책관을 만든 것은 정말 잘한 거 같음. 그다음 점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양성평등담당관을 만든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음,, 그러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없는 듯함.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인력확보도 큰 변화 없는 것 같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함	【사례 2】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임. 기존에 보육, 청소년, 아동정책 예산들이 마치 성인지를 위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쓰인다고 나와 있음. 그런데 홍보할 때는 전국적으로도 성평등에 앞서가는 제주도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미한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성평등, 성 주류화 정책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	【사례 4】

<p>나, 너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예산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 ... 예산 또는 권력의 문제 등 성평등정책관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현재와 같은 병렬구조(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평등정책관실의 위상이나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205개의 부서 담당관들을 컨트롤 하면서 성평등을 위해서 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지 궁금함.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까지 생각해 본다면 성평등정책관이 좀 더 여성정책과 관련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함. 정책권고제 운영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이런 제주도의 성 주류화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높아졌으면 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어야 함</p>	<p>【사례 1】</p>

□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강화 방안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평등정책관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개편 및 강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첫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을 ‘실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둘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성평등정책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임
- ‘실국’으로 위상 강화 :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성평등정책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의 방향은 성평등정책관의 업무와 양성평등정책이 주요 업무가 되는 실국 형태의 위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제안되었음(<사례 3, 8>)
- 성평등정책관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각 조직의 역할 정리를 통하여 아동, 보육, 청소년, 가족 업무와 성평등정책관 업무를 구분하고, 성 주류화 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정책관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사례 10>). 또한 여성단체 지원 및 거버넌스, 공무원 교육, 일자리 지원 등 팀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사례 8>). 한편, 이외에도 젠더부지사를 만들어서 부지사급에서 젠더업무를 총괄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사례 9>)

<p>두 조직 간 겹치는 교집합의 사업들이 있음. 예를 들어,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관련된 시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정책관실 사업임.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는 것임.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가면 어떨까. 국의 모양새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랑 서로 전혀 다른 조직에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임.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도 통합형의 형태로 가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됨. 조직이나 사업이나 한 지붕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임</p>	<p>【사례 3】</p>
<p>두 개의 행정조직이 자리매김이 잘 안되어 있음. 아동, 보육, 청소년, 가족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두고 나머지는 성평등정책관에서 다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 함. 성평등정책관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주셨는데 의회든 교육청이든 많은 영향을 줬음. 그런 부분에는 성과를 내지 않았나. 무엇을 더 넣고 더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주류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주류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안하고 있음. 성인지예산이 확대가 됐다 하면 전 부서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성인지예산만큼이나 성 주류화를 어떻게 전 부서에 녹여야 하는지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음. 요거에 초점을 맞추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함</p>	<p>【사례 10】</p>
<p>성평등정책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 공무원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성평등이나 성인지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성평등정책관에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연결하는 업무로 팀 하나가 존재했으면 함. 성인지정책팀의 역할을 3가지 정도로 고정시키고 공무원 대상 교육이나 여성단체들과 만나서 지원 방안이나 덧붙여서 일자리 문제 등 팀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떨까. 교육과 거버넌스 쪽으로 팀 하나를 만들자... 저는 실국의 위치보다는 위에 있으면서(부지사직속) 직급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p>	<p>【사례 8】</p>
<p>만약 여성국이라는 이름 하에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조직이나 예산) 고민을 해줘야 함. 차라리 국장이 아니라 정무부지사 라인에 예를 들어 부지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쪽은 경제와 환경을 맡은 부지사, 한쪽은 젠더 등을 맡는 부지사 해서, 부지사급으로 젠더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도 필요할 수도 있음. 국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지사 급으로 젠더이슈를 올려서 경제 환경부지사 하듯이 젠더부지사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하자.</p>	<p>【사례 9】</p>

□ 양성평등담당관의 목적 및 역할 등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 향후에는 양성평등담당관제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가시화 작업이 중요하며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사례 6, 11>)
- 또한 해당 기관 및 지역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사례 2, 6>)

양성평등담당관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운영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음. 무엇을 할 것인지, 양성평등담당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역할 규정이 필요함	【사례 6】
양성평등담당관제 같은 경우 205개 부서에 두고 있음. 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양성평등담당관제는 결국은 예산담당관에게서 각 부서로 최종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올리는 역할도 중요한데 양성평등의 시각을 갖고서 이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함. 얼마 전 모 행정시 고위간부의 성범죄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양성평등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사례 11】
지역 특색을 살려 성평등정책관의 성인지/성평등교육을 확장시켜야 할 듯함.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함. 어떻게 변화시켜야할지는 (양성평등)담당관들이 지역에 배치되어있으니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사례 2】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필요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조직과의 관계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상이 높은 위원회인 만큼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사례 9>), 정책권고제에 대한 성과 확산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사례 11>)는 의견이 제시됨

아쉬운 것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을 지금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의문임. 우리가 성평등정책관의 위상보다 더 높은 양성평등위원회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음	【사례 9】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권고제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음. 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어야 위상도 강화됨.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어떨까.	【사례 11】

□ 여성단체 지원 및 젠더거버넌스 강화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성평등 주체로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민관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음(<사례 2, 6, 7, 9, 10>)
- 지역의 성별화된 문화로 인해 제주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 및 단체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사례 7>)는 점에 대해 공유하였고, 아울러 여성단체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전문 역량의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음
- 구체적으로 도정이 여성단체에 지속적인 정책 공유와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며(<사례 2>), 여성/시민단체 역량·협력 강화 사업 및 여성단체 사무실 등 공간 지원(<사례 6>), 언론을 포함한 성평등 아젠다 형성 네트워크(<사례 5>), 젠더거버넌스 체계 운영(<사례 6>) 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안됨. 또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 활성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사례 9>)

제주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족들의 눈치도 보이고 답답한 상황임. 익명성 보장도 안 되고 친척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사례 7】
여성단체 대표로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기도 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음.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정책 공유가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부분도 여성단체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음. 이런 논의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여성단체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모니터링이나 평가도 억지로라도 해봐라 라고 시민단체에 던져주는 것도 좋을 듯... 발전을 위해 뭔가 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좋을 것임	【사례 2】
성평등정책관이 생기고 성평등 관련 아젠다를 개발하거나 논의하는 자리, 간담회나 그런 걸 바랐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음	【사례 5】
성평등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와 협력체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단체의 조직력 강화나 리더십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함. 이 연구에서 정책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단체를 발굴하고 단체와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함. 단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음. 이런 것들을	【사례 6】

지원하는 것 자체가 조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이런 것을 조성해주는 것 자체가 먼저 필요함	
단체들이(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 단체 거버넌스를 잘 조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잘 설계해야 함. 기존에 (도와 공모사업 등) 같이 하면서 양성평등 관련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 활동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역량을 떠나서 참여도도 다르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큰 방향성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생각은 적음. 거버넌스 안에서 뭔가 다른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시키든 뭔가 목소리를 모으든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사례 6】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여성단체들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음	【사례 10】
민선6기, 7기 거쳐 오면서 지난 10년간 풀뿌리 여성단체의 역량이 과연 그 전보다 좋아졌을까? 그건 아닌 듯함. 풀뿌리 여성단체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듦. 젠더 이슈로 모인 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 등 제각각 활동하지만, 그 역량을 전체적으로 총괄시켜서 여성문제와 풀뿌리단체들의 역할이 잘 소통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결국은 풀뿌리 여성단체들을 미래비전과 연동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슈별로 지역 정책과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여러 역할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함	【사례 9】

□ 여성가족연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확대·강화 필요성이 다수 제안되었음
- 구체적으로 기존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재단 형태로 운영 시,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고려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사례 3, 9>). 같은 맥락에서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타 지역 여성가족재단의 사례에서 정책 함의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사례 6>), 이외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사례 10>)
- 또한 지역여성가족연구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그 방안에서 제주학연구센터 등의 기존 기관에서 젠더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기관 설립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사례 4>)

현재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재단의 형태로 간다면, 이와 연동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제주여성가족재단이 있다고 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그렇다면 재단 안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사례 3】
현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재단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재단화하려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통합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조직 개편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사례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성평등협력사업팀이 있어서 여성단체 지원과 풀뿌리 조직 지원을 함. 거기서 단체 역량 강화나 시민협력단도 운영함.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시사점이 있을 것임	【사례 6】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참 애매한 상황임. 정말 중요한 센터이기도 하고, (사업소로) 여성가족청소년과와 떨어져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음. 과 부설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연계 속에서 관련 교육들이 더 잘 이루어지면 좋겠음	【사례 10】
제주여성역사문화 관련 연구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있지만 거기도 결국은 제주연구원의 부설기관이다 보니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음. 1차 자료는 둘째치고 2차 자료도 너무 없어서 말로는 여성을 많이 파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봤을 때 관련 기관이 없는 것 같음. 중추적인 기관이 분명히 필요함. 기존 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에서 할당해서 이 연구가 중요하니 하라고 제언할 수도 있을 것임	【사례 4】

□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통합적 수립·운영 필요

- 현재, 국가의 양성평등기본계획과 도지사 임기에 맞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로 관계 설정이 애매하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이루어졌고, 향후 국가와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통합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었음(<사례 9, 10, 11>)

‘더제주처럼’과 같이 제주만의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이 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서로 제각각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듦	【사례 9】
국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지자체는 4년 동안 정책을 따로 만들면, 이게 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사례 10】

말에 공감함. 예를 들어,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도정의 계획은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음. 제주처럼, 더제주처럼, 다음에는 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선8기처럼 도정의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음	
국가 기본계획에 어긋남이 있어도 안 되지만, 제주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 필요함	【사례 11】

2)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지역 성평등교육문화 진흥 체계 및 인프라 강화 필요

- 가부장적 문화가 공고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성평등교육 운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됨
-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성평등교육 실시, 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관심 제고와 담당부서인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사례 1>),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 및 성평등교육 이수 성과 관리 반영(<사례 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민간단체나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사례 6, 9>)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육대상) 발굴뿐 아니라 교육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큰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함. 이러한 교육 분야의 축진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사례 6】
제주도가 가부장적 사고가 아주 견고하다고 이야기됨. 이를 깨부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음. 성평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 성평등정책관 실의 위상이 높아져야 함. 전 도에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사례 1】

있는, 그만큼의 위상이 되었으면 좋겠음. 제주여민회에서 도민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데, 제주시장을 찾아가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 전에 무조건 성평등교육 1시간 정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었음	
현재 성인지교육은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총괄하고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는 공무원 교육은 담당하지 않고 있음. 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도 성평등정책관실 사업임. 교육센터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 조례에 양평교육센터 주요활동 하나가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나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도와 분리를 어떻게 할지는 의논이 필요함.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 성과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성평등 관련 교육은 포함이 안 됨.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조례에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나와 있는 하나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봄. ... 교육센터의 운영방안은 매우 고민됨. 교육센터가 교육에 한정되면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양성평등지원센터로 간다거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함	【사례 3】
여성대표성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함. 여성 리더십 교육과 별도로 역량강화 지원 중요함. 교육은 당연히 하고 제주에선 아직 공공영역에서만 중간관리자급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됨. 민간이나 단체에 들어온 적이 없음. 민간이나 단체를 포함하면 여성대표성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은 물론이고, 여성대표성을 실행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사례 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젠더이슈만 아니라 풀뿌리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잃어버린 조직의 방향을 꿈꾸면서, 리더들을 교육센터에서 교육시켜서 그 단체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도 교육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함. 양평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단체들이 우리에게 도움도 되네? 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방식의 접근 노력이 필요함	【사례 9】

□ 도민 체감형 성평등 아젠다 형성 및 다양한 민관네트워크 운영 필요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지역의 가부장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체감형 정책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이를 위해 지역사회 성평등 아젠다 형성을 위한 다양한 민관네트워크가 중요한 의견이 제시됨(<사례 4, 5>)

제주도의 가부장제의 벽은 정말 견고함. 주변에 성인지관점을 가진 분들도 결국 집에 가서는 다르지 않음. 마을에 가면 더 심함. 특히, 이장님들, 노인회	【사례 4】
--	--------

회장님들.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를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지역 보다는 훨씬 더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제주의) 벌초문화만 보더라도 제가 자란 곳에서는 20~3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음. 공고히 뿌리박힌 것이 가부장제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얘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현장이 바뀌어야 되고 마을이 바뀌어야 되고 도민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문가, 공직, 여성단체, 현장의 논의들 간에는 차이가 큰 것 같음	
일반 도민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와 닿는 정책 개발이 중요함. 예를 들어, 마을 규약 중 불평등한 요소를 개선한 사업 그런 게 더 와 닿았음. 성평등 정책관이 기존의 것들에서 성 불평등한 요소를 발견해 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사례 5】

나. 여성 안전, 인권, 건강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분야의 전문가 FGI는 2회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학계, NGO 등의 전문가 10명이 참여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공무원 전달체계 이원화

-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후 도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할 때 감독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편리함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감지됨(<사례 13>, <사례 15>)
- 이는 성평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이 도민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체감되는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과 예산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기도 함(<사례 19>)

실무적인 것을 왜 두 기관에 알리는 불편함이 있음, 성평등정책관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사례 13】
사업에 따라 보고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 사실 편하지 않음, 보고체계가 두 곳이라는 것이 많이 알고 더 활동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산이 되면 이야기가 잘 모아지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을 것임	【사례 15】

여성과 관련된 친화적 사업을 해보고자 성평등정책관이 생긴 건데 더 거리가 생긴 느낌임. 공무원의 지도 감독 체계가 하나 더 생긴 느낌	【사례 19】
--	---------

□ 성평등정책관의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위상 강화

- 성평등정책관 신설의 긍정적인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운 이유는 정책관이 실행기관이 아닌 다른 부서들의 중심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부족한 데서 원인이 있음(<사례 13>)
- 성평등정책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양성평등 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복지나 보건 등 업무와 조직을 합치는 등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도 중요함(<사례 16>)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실행기관이지만 크게 봐야 하는 건 성평등정책관이 중심이 되어야 함. 성평등정책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이 되지 못함	【사례 13】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고, 우리가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보건, 복지, 여성이 어느 날 하나로 합쳐진 것, 원래 보건복지국이고, 여성이 따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있음	【사례 16】

2)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개선 및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여성인권 의식 향상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서는 그동안 기존의 여성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활동을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사례 13>)
- 청년세대의 여성폭력이나 인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다양한 형태로 학생과의 접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사례 15>)
-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여성단체 활동을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마련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함(<사례 12>)

모니터링단을 여협이나 여성단체에 주기보다는 젊은 여성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그들)과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여성 인권 부분에서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가 되면 좋을 것임	【사례 13】
학생들의 경우, (여기 제시된) 서비스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가장 많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애들인데, 예기치 못한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봄. 거버넌스 만드는 것에 대해 20대 젊은 학생들과 같이 모니터링단을 만들든,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연계(참여)가 되면 좋을 것임	【사례 12】
젊은 세대가 여성인권에 일단 관심이 없음. 이런 게 있다는 걸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심어줘야 함. 학교와 연계해서 사회복지학과나 사회학과 수업 중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일부 시간에 대학생들 만났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야 함	【사례 15】

□ 여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장애인, 이주여성 등) 및 홍보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사례 13>)
-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그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전염병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1인 1실(최소한 2인 1실)의 시설 정비가 필요함. 이는 그동안 폭력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를 꺼리는 현상에 대하여 시설 정비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사례 13>)
- 또한 결혼이주민과 장애인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취약계층 폭력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을 나와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필요성과 함께 자립기반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거나 결혼이주여성 등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도 필요함(<사례 13>, <사례 14>)

쉼터 운영의 경우, 공동체 운영 방식은 지양해야 함.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개인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집단으로 운영되고 향후 쉼터의 기능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고 2인 1조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준비를 해야 함	【사례 13】
---	---------

긴피(긴급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 서귀포에 있기는 하지만, 긴피는 그냥 1366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장애 있으신 분들 오시면 모시기 어려운 이유가 턱이 있어서 휠체어 타고 오기가 힘들. 장애인 피난처 필요함	【사례 15】
이주 쉼터 같은 경우 피해여성들이 들어오면 오래 있게 됨. 나가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케어하는 게 힘들. 자립을 시켜야 하는데 어려움. 장애인 쉼터의 경우에도 중학교 때 들어가면 성인까지 보호해 주지만, 자립을 위한 정책 개발도 필요함	【사례 14】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함.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은 대부분 법무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된 면이 있음. 가정폭력이 여성과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관련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사례 19>)
- 또한 디지털 성범죄나 데이트폭력과 같은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폭력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폭력 방지 및 대응에 관한 홍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 공감하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물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사례 16>)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도 2019년도부터 법무부로부터 일부 예산이 이관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으쌔으쌔 해서 절반이라도 가져왔는데, 제주도 배정된 예산이 타 도시보다 엄청 줄었음. 70대 30으로 제주도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자체 예산 부담에 대한 의지가 없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강을 해주는데 제주도는 하지 못함.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안 생김	【사례 19】
데이트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대면 자료를 개발하고 전광판에 걸고 광고하는 방법도 있음. 중요한 건 아젠다를 어떻게 던져주는가 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련 단체) 선생님들 대표로 몇 분 참여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동영상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임	【사례 16】
정책적으로도 너무 성 쪽으로만 가니까 가정폭력은 살인자가 생겨도 그냥 그때 잠깐일 뿐이고, 관심이 없음. 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화가 늦게 된 영향도 있지만 (교육 의뢰) 들어오는 것마다 ‘성폭력’ 쪽이지,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해달라는 데가 없음. 학교 교과목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각 마을, 리에도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	【사례 19】

업비 받으려면 인센티브로 가정폭력 관련 교육 몇 명(을) 받아야 된단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임

□ 여성 건강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대

- 민선7기의 여성 건강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의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향후 일반 여성 전체를 위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사례 21>)
- 이를 위하여 공공 의료기관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간단한 여성 질환에 대한 무료검진이나 상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사례 16>)
-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비만이나 성인병 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세밀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사례 16>, <사례 21>)

공공의료기관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나 여성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금 핫이슈라고 하면 여성들이 건강(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면 좋을 것임. 체중 3kg 줄이고 비만도(BMI) 줄이면 5만원 주는 제도가 있음. 요가 프로그램 이용했다 하면 상품권/인센티브로 주든지 해서 건강 해피 마일리지/여성해피 마일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도 챙기고,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봄

【사례 16】

신체 활동 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떨어짐, 현재의 정책은 너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임, 임산부, 장애인 중 임산부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걸 제한해야 함. 건강검진의 경우도 제주지역이 수검률이 떨어짐. 비수기 때 오시면 지원금을 좀 드린다던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도민들이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시면 여성 건강을 엄청 높일 수 있다고 봄

【사례 21】

□ 여성안전 교육훈련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 안전시설 강화

-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민선7기 도정에서는 여성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을 비롯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음

- 무인택배시설이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1인 가구 안전시설 지원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사례 18>)
- 향후 범죄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자연적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재난전문가 양성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피소 운영 등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함(<사례 20>)
- 아울러 1인 가구 여성이나 취약계층 여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환경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해야 함(<사례 17>, <사례 18>)

타지역의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여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방법창을 지원해준다든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음. 원룸용 동작감시센서 등은 침입자 확인 용도로는 좋는데 처음부터 범죄 계획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음	【사례 18】
농·어촌 지역에 ‘안전부스’를 만들어,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절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안전벨 있고, 경찰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가 있음, 이런 시설 많이 설치해야 함	【사례 17】
응급처치의 경우에도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 놓이면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 훈련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례 20】

다.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분야의 전문가 FGI는 2회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학계, NGO 등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1) 가족분야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가족정책’ 개발 미약, 가족정책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필요

- 민선7기의 경우 실질적인 가족정책, 특히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 개발은 거의 없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량에 따라 가족 지원 사업들을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음.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성과를 가져나가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지역 기반 가족정책 개발과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사례 32>, <사례 29>)
- 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이 대등해야 하느냐 아니면 가족이 성평등정책 부분으로 속해야 하느냐 추진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가족들의 정책 수요와 정부부처의 정책 변화에 부응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민선7기가 양성평등정책 안에 ‘가족’을 담아 양성평등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면, 민선8기에는 가족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함(<사례 29>)

<p>행정지사나 조직 안에서 떨어져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전남, 충남, 대전임. 충남은 ‘여성가족정책관’이라고 있고, 대전에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있고 전남은 ‘여성가족정책팀’이 있음. 그런데 그 모든 팀마다 일종의 계선조직이 아니라 참모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모든 정책관 안에 가족정책팀이 있음. 이와 관련해 전남, 충남, 그리고 대전은 어떻게 부처와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 성평등정책관에서 정책이 어느 정도 입안이 되었고 실질적인 가족정책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음. 민선6기에는 가족정책 자체는 있었으나 민선7기 들어서면서 거의 없어짐. 가족 관점에서, 타 지자체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가족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족정책팀’이 조직될 필요가 있음. 민선6기, 7기에 수행된 제주도 가족정책 관련 연구는 정여진 외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인 ‘제주처럼’과 ‘더 제주처럼’을 대상으로 가족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민선7기 가족정책 부재 문제를 드러냈고 향후 과제를 던져줌</p>	<p>【사례 32】</p>
<p>가족 업무에 양성평등, 성평등정책 자체가 여성 영역 전반에 조금씩 들어가 있으나 세부 정책 면에서 가족정책이나 사업으로서 취약한 면이 있음. 가족, 돌봄 영역만 보더라도 성평등정책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또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 필요한 욕구들에 대한 세부 정책이나 사업은 취약함.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할 체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p>	<p>【사례 29】</p>

□ 추진체계 일원화는 필요, ‘양성평등국’ (가칭) 명칭은 재고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를 통합한 일원화된 추진체계 필요함(<사례 28>, <사례 30>, <사례 32>)
-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때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부서에 전달될 수 있는 ‘정책팀’이 필요하고, 산하 부서(국, 팀 등) 명칭은 여러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함(<사례 28>)

<p>일원화된 하나의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명칭의 문제도 고민해야 함. ‘양성평등국’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움. ‘양성평등국(가칭)’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임. 추진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양성평등국’ 보다는 여러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가면서 추진체계를 잡아가야 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가족’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므로 ‘양성평등가족국’ 혹은 다른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 산하 과와 팀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성평등정책관실 하에 성평등기획, 성인지정책팀이 필요한데, 민선7기에 이러한 팀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들과 다름. 예를 들어, 대전시의 경우 성인지정책담당관 산하에 양성평등 정책팀이 있고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있는데, 여성정책기획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음. 그러나 민선7기의 ‘성평등정책관’과 ‘국’을 8기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정책팀’이 별도로 조직되어야 함.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관’만 조직되어 있다 보니 정책 기획이나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민선8기에 ‘성평등정책관’이 ‘국’ 안에 ‘성평등정책’ 팀으로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성평등정책관’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 산하에 ‘정책팀’이 필요함. 민선8기 추진체계 제안 시 1안, 2안, 3안 등으로 제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p>	【사례 28】
<p>여성 시설, 인권 상담실에서 볼 때도 성평등정책관실과 여성가족청소년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 한쪽으로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음. 이제는 여성이 역할을 잘하게끔 지원해주는 것,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여성 친화적인 사업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때라고 봄. 그러므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은 동의함</p>	【사례 30】
<p>일원화된 추진체계의 명칭은 그 조직이 참모조직일 때와 라인조직일 때의 차이가 있음. 참모조직일 때는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부서에 전달되어야 해서 민선7기에 ‘성평등정책관실’로 명칭을 붙였으나 라인조직이 되면 ‘보건복지여성국’ 명칭이 될 것임.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로 명칭을 붙인 것처럼, 성평등 가치를 하나의 ‘실’이나 ‘국’에만 넣을 수 없기 때문임.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을 담아 ‘실’이라 ‘국’ 명칭을 붙인 지방자치단</p>	【사례 32】

체는 없음. 라인조직으로 간다면, 인구, 저출산, 여성, 가족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 건가·다가센터 등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필요

- 현재 가족정책 기본계획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등이 없이 서비스 전달체계만 작동되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약칭 ‘건가·다가센터’)'가 된 상황에서 직원 처우나 보수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가족부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센터로 개편한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이에 ‘가족센터’가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려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 특히 제주도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함(<사례 31>, <사례 29>)
- 가족정책 업무 기관이 생긴다면 가족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만이라도 통일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종사자 처우가 같은 기관에서 각자의 업무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천차만별임. 통합 운영 이후에도 종사자들 간 보수 차이가 두드러짐. 획일화된 조직안에서 기관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제시되어야 함. 틀이 없어 직원들 간의 격차가 생겨서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음. 건가와 다가가 통합이 되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어떤 부서별로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효율성 있게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을 많이 고민하는 해였음. 센터의 통합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기회가 되었다고는 생각함.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재편해 한쪽에 쏠려 있는 사업을 펼쳐서 기능별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례 31】

민선7기에 ‘건가·다가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사업 운영 시스템, 인력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웠음. 민선8기에는 추진 조직과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정책 방안을 수립해 어떤 기조와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사례 29】

(2)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

- 국제·국내 이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들을 기획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제주도 ‘가족정책기본계획’(가칭)이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야 함(<사례 32>)

‘가족정책기본계획’과 정책 수립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큰 틀 안에서 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보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자잘하게 되고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담부서 및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런 게 없다는 게 문제임	【사례 32】
‘가족’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나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해체된 가족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정책을 기획하는 전문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사례 28】

□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필요

- 생활공동체 지원을 할 때, 생애주기별로 가는데 아동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돌봄과 교육임. 예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됨. 도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 부모교육도 들어갈 수 있음. 잠재적인 노년층을 고려하여 특화된 조손 가정 프로그램도 필요함.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가족 기능별 지원도 하나의 방안임(<사례 27>, <사례 32>)

다양한 가족들이 구성원들과 또 너무 다양한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담아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족정책 부서가 필요함	【사례 32】
앞으로는 이제 가족 지원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과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가야 함. 가족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딘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가야 하며, 그렇게 될 때 중노년 대상 정책도 특화될 수 있음	【사례 27】

□ ‘가족센터’의 제도적·정책적 통합과 지역 기반 체계적 운영 로드맵 필요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과 함께 ‘가족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해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여성가족부, 2021).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기본계획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사례 32>)
- 이주여성 스스로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고 ‘가족센터’를 통해서든 시민단체를 통해서든 자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순환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사례 30>)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인데, 제주의 경우는 가족정책 대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었고, 문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 그래서 종사자 임금이나 처우 등에 대한 매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재편해서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는 사업을 쪽 펼쳐서 가족 기능별로 지원을 하는 가족적 관점, 가족정책적 입장에서 정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담당 인력으로는 사업을 늘릴 상황도 아님	【사례 32】
이주여성 스스로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또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찾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든 어떤 민간단체를 통해서더라도 자기 역량을 강화하면서 또 한국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했으면 함	【사례 30】

□ 지역협의체 및 가족관계 지원 상담소 필요

- 가족 구성원 내에서 관계 만들기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즉 가족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안에서 부부간 혹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담받을 기회를 쉽게 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사례 30>)

현 가족센터(건가·다가지원센터)의 여건과 인력으로는 가족 관련 사업 모든 걸 할 수 없음. 따라서 지역 차원의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가동 되어야만 힘이 발휘돼 지역에서 가족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이 될 수 있음	【사례 32】
가족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를 회복할 수 있게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함. 제주는 특히 알코올 의존증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아픔도 많은 곳이기에 이를 조금이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함	【사례 30】

□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체계 필요

- 지역 단위 돌봄에 대한 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초등 돌봄의 경우 학교와 마을공동체 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 간 협력과 상생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는 마을학교 혹은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청 단독으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와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 하에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계승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과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사례 27>, <사례 28>)

아이들만 놓고 보더라도 유아나 초등이나 돌봄이 아까 학교 중심의 돌봄이랑 마을 단위의 돌봄이 굉장히 이게 쉽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어 안타까움. 도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 영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추진체계 일원화를 한다면, 그 산하에 협력 부서를 조직하는 방안이 있음	【사례 28】
민선7기 현재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가 없는 건 사실임. 가정 내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돌봄과 보육이고 청소년에 관한 관심은 부족함. 학교와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래야 부모교육이나 중년이나 노년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도와 교육청의 협력은 중요함	【사례 27】

2) 돌봄, 일·생활 균형 분야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추진체계 개선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민선7기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 과중을 언급하면서 조직의 개편이 민선8기 도정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함(<사례 23>, <사례

25>, <사례 26>).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국 신설 또는 여성과 가족을 포함하는 성평등국 신설을 제안함(<사례 23>)

아동청소년국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가족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성평등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에 부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으로 세분화돼 있어도 좋다고 생각함	【사례 23】
통합적인 가족지원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다문화 영역, 영유아 영역 등 각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력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면 함	【사례 25】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기 때문에 제주도와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경기도만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국이라고 하는 걸로 두고 거기에 대상자 틈을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과는 별개로 두면서까지 정책 대상을 더 특화해가지고 집중하고 있음. 지금도 여성가족청소년과가 과부화 상태임.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이런 추진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됨	【사례 26】

(2) 돌봄, 일·생활 균형 정책 평가와 과제

□ 영세기업, 자영업까지 육아휴직 사용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제주도는 영세소상공인 기업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특히 자영업이나 농어촌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육아휴직과 대체인력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사례 22>)

제주도에서 육아휴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 많지 않고, 영세기업들, 자영업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일을 하지 못하고 양육을 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체인력 등이 마련되어야 함. 공무원이나 학교도 남자들 쓸 순 있지만, 짧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쉽지 않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 업체에서도 자유롭게 보내는 상황 만들어야 함. 아버지들도 본인이 써야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함	【사례 22】
--	---------

□ 장애아동 돌봄 전문가육성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장애 아동대상 아이돌보미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이들의 방과 후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진단함(<사례 23>)

장애 아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실제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특히 방과 후 지원체계가 너무나 부족함	【사례 23】
--	---------

- 조사 참여자들은 장애아동의 유형이 다양하고 특수성에 맞추어 장애유형에 맞는 활동 보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장애아 돌봄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사례 22>, <사례 24>, <사례 23>)

제주도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이 없어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함. 장애아동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인이 돌봄이나 교육, 양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지만 단순히 이동보조에 머무르는 부분, 장애아동의 유형 다양하고 특수성에 맞춰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함. 장애아동은 의료적인 부분이 제주도에서 해결이 안 되어 육지로 왔다갔다하는 시간,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므로 지원이 필요함, 교통비가 지원되긴 하지만 경제권에 따라 지원을 하다 보니 경계선 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지원도 못 받고 일도 못하고 단절 기간이 길게 됨	【사례 22】
장애아동 돌봄 인력이 부족하니 최우선으로 해야 함. 제주도는 장애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함	【사례 24】
지원센터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활동보조에서도 마찬가지임	【사례 23】

□ 조기 발달장애인 발견 제도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의 경우 아동기에 조기 발견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대상 교육을 통하여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사례 22>, <사례 23>)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듯. 실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 해서 치료까지 연계되는 사례도 많이 있음. 어린이집 선생님 대상으로 교육할 때 넣거나 일 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임기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듯함	【사례 22】
장애라는 게 이렇게 발견된 직후부터 평생을 치료나 지원들이 필요로 하는데, 지원센터에 와서 뒤늦게 장애가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미	【사례 23】

시기가 늦기도 했지만 밀려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치료 체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

□ 부모 대상 아이를 돌보는 방법 및 양육 상담 지원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필요하며 도에서 놀이치료나 양육 상담도 지원해 언제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필요함. 도 자체에서 놀이치료나 양육 상담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양육 상담을 하는 것도 회사에 얘기하면 언제든 다녀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함

【사례 24】

□ 돌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마을 중심의 돌봄협의체 구성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마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에서 기존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한 돌봄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함. 8기 도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며 그것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마을 주민들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이후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사례 26>)
- 또한 다문화 영역, 영유아 영역 등 각 영역을 담당하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사례 25>)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는 추진체계에 대한 제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에 대한 거는 기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부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기 도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그것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함. 정책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상위에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짐. 그러면 아마 작은 단위로 가려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함. 그러려면 인력에 대한 양성이 필요함.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더 보강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함

【사례 26】

통합적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서 다문화 영역, 영유아 영역 등

【사례 25】

각 영역을 담당하는 조직력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함
--

□ 도청과 교육청과의 유기적 연대 기반구축 필요

- 조사 참여자들은 돌봄정책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연대가 중요하며 중앙정부는 돌봄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청과 도청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유도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제주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함(<사례 25>)

제주도에서 돌봄협의체라고 교육청과 도청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기구를 중앙에서 만들었는데 모임이 안 됨. 다른 타지방 같은 경우 직원들이 들어와서 함께 협력하는 아이돌봄과 이런 것이 만들어졌음. 전국 사례를 보니 제주도는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도청과 교육청은 서로 탓을 하고 있음	【사례 25】
--	----------------

- 아울러 향후 세종시를 참고해 현재 세종시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교육공무원을 파견해 적극적 연대를 하고 있어 제주도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사례 26>)

세종시의 예도 너무 좋은데. 세종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제주시 인구 정도밖에 안 됨. 그러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도와 유사하게 가는 것을 제안하되, 지금 세종시가 교육청과 그 다음에 시청이 연대해가지고 아동이라고 하는 정책 대상을 지원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미해 가면 좋을 것 같음	【사례 26】
--	----------------

라. 여성 일자리 및 노동

- 여성 일자리·노동 분야의 전문가 FGI는 1회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학계, NGO 등의 전문가 5명이 참여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일자리 정책 성과와 개선점 및 향후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음

1) 여성 일자리 및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 제주지역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인턴십 등 종합적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3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데에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음

□ 여성 일자리 정책 취약, 제주 특성을 반영한 여성 일자리정책 개발 필요

- (여성일자리 정책 미약) 전문가들은 순수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기획된 여성 취·창업 지원 등의 일자리 정책은 “여성 공동체 창업” 사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제주도만의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부족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사례 35>)
-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기반 미약) 특히 한 전문가는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 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사례 35>)

청년정책도 나오고 청년센터도 있는데 여성일자리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지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국가에서 제도로 지원하는 돈이 내려오니까 진행하는 부분하고... 제주도 예산 100프로를 하는 여성 창업 공동체 그것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듬

【사례 35】

- 민선8기를 앞두고 향후 4~5년 안에 운영할 여성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5년 뒤에도 현재와 똑같이 여성 일자리 정책 부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임. 따라서 향후 5년 이내에 추진할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한 참여자는 강조함(<사례 35>)

민선8기에도 또 이런 성과 평가[여성일자리정책 부재]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 몇 개라도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짧게 5년 안에 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서 진행하면 좋겠음

【사례 35】

□ 전반적인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 (전반적인 양성평등정책 강화 필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서 우선 양성평등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강화가 대전제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 40% 확보 등 양성평등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치적 비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키우도록 내실화되지 않았다고 한 전문가는 피력함. 나아가 여성 일자리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남성 주도적이었던 사회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어느 정도 대등하게 되는 상태로 갈 수 있음. 역차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남성 주도의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춤하지 말고 여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함(<사례 34>)
- (사회, 직업, 직장에서의 성별 분리 문화 타파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제주에서 직업에 대한 성별 분리가 사라지지 않고 청년층에서조차 성별 고정관념이 강하게 존재함. 전반적인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이 필요하고, 성별 고정관념 타파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사례 34>)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주춤할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어야 남녀의 일자리에 대한 [불평등] 부분이 사라질 것임. 피크를 찍고 더 확실하게 역차별되는 느낌이 정확하게 봤을 때 비로소 한 쪽 내리고 한쪽 올리고 해서 평등이 되는 것임.

【사례 34】

2)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 미진출 분야의 진입 지원 필요

-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타파, 여성 진입 위한 제도정책 필요) 디지털, IT 등의 분야는 도전적이고 고부가가치 분야이지만 여대생들은 이 분야가 ‘남성’ 위주의 업종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고 전공, 직업 선택 경향이 낮음. 남성이 다수인 분야에 여성이 진

입하고 경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사례 34>)

- (생계형 직업훈련에서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변화) 그동안 여성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은 생계형 직업을 위한 취약 여성 대상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음. 디지털 사회 등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고, 여성들의 니즈도 다양하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사례 35>)

디지털 분야에서 30년 넘게 가르쳤는데, 여성들이 잘할 것 같다 싶은데 오지 않음. 왜인지 생각을 해 보면 도전하고 경쟁하는 것이 많이 약화된 것 같음. 디지털 분야도 하나의 사회 현상인 듯함. 여성의 진출이 약함. 부모들도 남성과의 경쟁이 적은 쪽으로 보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 쪽이 훨씬 좋고, 여성 디지털 전문 과정을 만들어야 함	【사례 34】
제주의 고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새일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취업한 여성들은 전문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취약한 여성들이 더 많음. 도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싶고, 전문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사례 35】

□ 디지털 사회, 미래 사회 대응한 여성 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

-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 경력단절 여성을 기업에서 고용할 때, 컴퓨터나 디지털 역량이 대체로 낮아 전문적인 업무 배치가 어려울 때가 많음. 디지털 사회에서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사례 35>)
- (전문 과정) 디지털 교육은 일반 과정보다는 자격증과 연동되는 전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함(비전공자에게 교육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딧 사업 참조). 일시적인 직업훈련보다는 단계적으로 훈련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식의 교육훈련이 중요하고, 제주도지사 인증 자격증 과정 등의 제도 마련도 권할 만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사례 34>)
 - 전문 교육과정 개발 : 빅데이터, 드론 분야의 전문 과정 필요하지만 전문 교육기관은 없음. 자격증과 연동된 전문 과정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진입이 가능한 분야임
 - 제주도 인증 부여 : 빅데이터, 드론 분야 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제주도지사 ‘인증’ 부여 제도 마련 필요

강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디지털 분야 전문 과정을 하면 좋겠음. 직업훈련 센터나 대학에서 하는 비슷비슷한 일반 과정들은 좀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음.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농업분야에서부터 보안, 안전,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많고 취업 못 할 데가 없지만 전문가가 없고 교육기관도 없음. 도지사 인증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전문가를 길러내면 좋겠음

【사례 34】

- (경력단절 여성의 디지털 교육에 청년층 활용) 한편, 최근 ‘지역공헌’, ‘지역특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학생, 청년들이 초·중·고등학교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청년들을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음(<사례 37>)

□ 여성 창업, 여성 기업 지원 정책 필요 : 공간, 마케팅,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의 이루어졌음. 창업 공간,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서 여성 직업훈련기관의 프로그램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여성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타격 극심) 본인이 직접 기업운동을 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여성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관광, 서비스업에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타격이 매우 큼.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사례 36>)
- (공간 지원) 창업 공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자신감 고취를 위한 여성 공간 필요) 여성들은 보육,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신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사례 37>)
 - (창업 지원 정책 정보 공유, 네트워킹 공간 필요) 제주도내에서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좋은 아이템들이 많고, 창업형태는 아니어도 이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함. 한편, 기존에 창업보육 공간들이 있지만 여성일자리정책 전문가에게도 문턱이 높은 경우가 많음. 여성들에게 정보 공유, 네트워킹, 정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창업 지원 공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에게 일정 비율을 할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사례 35>, <사례 36>, <사례 34>)

제주도 여성들이 알음알음 창업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간이 라든가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있더라도 [직업훈련 전문가] 찾아가기에 문턱이 높음. 여성 창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음	【사례 35】
여성이 사업하는 게 환경적으로 열악함. 남성들은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화 한통만으로 네트워킹이 됨. 여성들은 관에 진출한 비율도 적고,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관을 뚫기가 힘들.	【사례 36】
스타트업의 경우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데 정책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음. 육지는 전문가가 있어서 제안서, 자금, 지원을 잘 받음.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퍼센티지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음	【사례 34】

- (마케팅 지원) 공간 외에 마케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자체 예산 지원(소상공인·기업과)으로 여성 경제인들을 위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호응이 매우 좋음. 섬 지역 특성상 택배비, 물류비가 비싸고, 여성기업인들이 판로를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현재 구축한 온라인 마켓 플랫폼이 활성화되도록 디지털 마케팅 교육, 운송에 대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도내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향후 정책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됨(<사례 36>)
- (창업 교육 기관 확대, 경력자 위주 정책 필요) 창업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청년 위주가 아니라 경력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취업교육 기관들에 창업 교육이 훨씬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고령화 시대에 “경력자-청년” 매칭 창업 공동체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히 디지털 분야 등의 벤처 창업의 경우 경력자는 경영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본을 소유하고, 청년은 기술을 보유하므로 시너지가 좋음. 여성 공동체 창업 정책에 이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임(<사례 35>, <사례 34>)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그런 교육 기관에 창업의 기능이 더 없어져서 조금 더 지원하고 공간을 더 할애해주고 하는 게 좀 지원이 되면 좋겠음	【사례 35】
예전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친구들이 동업해서 창업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요즘 보면 60대분이 디지털 창업을 하는데, 젊은 청년과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됨. 제도, 예산, 회계, 마케팅 등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분과 젊은 층의 기술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것임. 젊은	【사례 34】

사람들은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경험자와 매칭하면
 좋음.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여성 공동체 창업, 4~5명이 함
 께 하는 창업지원도 매우 좋은 전략임

□ 여성 고용 장려를 위한 제도, 기업 인식 개선 등 필요

- (여성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필요) 청년 고용 정책, 디지털 인력 지원 등의 정책들에 비해 여성 고용이나 인턴십 제도들의 고용 지원 정책은 인센티브가 턱없이 낮아서 기업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여성 고용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타 정책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사례 33>)
-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조례 필요) 일자리정책, 창업정책들은 남성 중심 기업 구조에 기반한 정책들이라 볼 수 있음. 여성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예컨대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기업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정책 기반이 제도로서 구축·강화되어야 함(<사례 34>)

□ 워라벨 일자리 확산 필요

-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워라벨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도 개발 필요) 새일센터의 경우 단기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기업에서는 고용보험 지급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사례 35>)
- (여성 일자리, 유연한 일자리, 정책 지원 필요) 여성 일자리라고 했을 때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봄.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한 일의 형태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니즈와 상충됨.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워라벨 일자리 정책을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음(<사례 33>)
-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고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기업에 지방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 확산 필요함(<사례 33>, <사례 37>)

<p>지금의 일자리 정책은 여성 일자리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음.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의 고용 정책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음. 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많고 기업 인센티브도 많음.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성 채용을 꺼리게 됨. 여성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전략도 필요함</p>	<p>【사례 33】</p>
--	----------------

□ 여성 직업훈련 기관 지원 강화,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필요

- (여성 일자리 기관 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새일센터보다 뒤늦게 출발한 조직에 비해 종사자 처우나 업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많음. 여성의 전문성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공간적 제약 등 어려움이 많음.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 직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사례 35>)
- (세대별 맞춤형 직업훈련, 수요-공급 매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청년직원은 젊은 이직, 경력 보유 여성은 육아 문제, 경력단절 여성은 업무 능력 부족(컴퓨터, 디지털 역량 등) 등의 문제로 고용난, 인력난이 극심함. 기업 수요와 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세대별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지원이 필요함(<사례 36>)
- (상시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디지털 교육, 빅데이터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 교수 등의 전문 강사 매칭을 위해 방학 등 특정 시기에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연중 상시 전문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사례 35>)

<p>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말은 센터이지만 사업단위로서, 기능과 처우가 열악해서 이직이 많음. 여성의 전문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교육수요도 높는데, 교육기관의 공간 부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연계 어려움, 전문강사 매칭 어려움 등 어려움이 많음. 여성일자리지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지원이 필요함</p>	<p>【사례 33】</p>
---	----------------

3. 타지역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민선7기에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를 개편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한 지역으로,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음

가. 타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운영 현황

1) 대전광역시

- 민선7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의 개편은 지역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음. 그동안 성 주류화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여성’정책, ‘양성평등’은 여성관련 부서가 담당한다.”라는 오랜 편견을 없애고, 성평등을 전 부서로 확장하고 나아가 타 부서가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 시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 직속 기관인 기획조정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새로 만들게 되었음. 따라서 기존 여성가족과의 성평등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성인지정책담당관실로, 다른 가족 관련 사안은 가족돌봄과에 남게 됨(<사례 39>)
- 대전광역시는 민선7기에 기획조정실내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양성평등정책팀, 성인지팀, 여성권익팀, 3팀 14명)하여, 시정전반 성인지관점 반영 및 성 주류화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하였고 3명의 젠더전문가를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였음.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생활 속 평등문화 확산 및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 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 주류화의 내실화,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여성가족청소년·보육관련 업무는 청년가족국의 가족돌봄과와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사례 38>)
-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 양성평등담당관제 본격 운영으로 성 주류화 확산하고 있음(실, 국, 본부 주무부서 과장 17명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관리, 성 주류화제도 추진점검(연 2회 정례회의와 별도 워크숍 개최)(<사례 38>)

2) 대구광역시

- 민선7기 대구광역시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는 부시장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에서

2019년 여성청소년교육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팀(현재)으로 개편됨. 현재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부서는 교육협력정책관,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 순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내에서 여성가족과(여성정책팀, 가족다문화팀, 양성평등팀, 여성권익팀, 성괴롭힘대책팀)와 양성평등팀의 위상은 높지 않은 상황임(<사례 41>)

- 코로나19 이후 대구시의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어지고 교육청과의 업무가 우선인 여성청소년교육국이 되었음. 여성정책 담당 구조는 여성가족과로 축소됨(<사례 42>)

나.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개선 방안

1)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는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며, 향후 지속발전을 위한 조직 위상과 여성들의 참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타 지역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 모델에 대해 제주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추진체계 기반 마련에 중요한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어렵게 만들어 가는 성과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사례 38>, <사례 39>, <사례 41>)
 - 특히 제주지역은 성평등 및 성 주류화 담당기구로서 성평등정책관을 두고 성평등기획, 성인지정책,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기존 여성가족정책을 수행토록 이원화하고 있어 성평등정책의 진전으로 평가되며, 성평등정책은 전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평등 개입과 중재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관의 위상 강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함(<사례 41>)
 - 성평등정책관의 경우 고위직, 개방형 임명도 필요하지만, 실제 5~6급의 경우 전문적인 실무자가 필요하며(<사례 40>), 전문 인력의 경우 행정 내부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 필요성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사례 39>)
 -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주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이나, 정책이 제주 여성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주 여성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고 모니터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사례 42>)

○ 여성(성평등)과 가족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특히 성 주류화 정책이 주요부서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제주의 양성평등정책 담당기구를 ‘실(국)’ 형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전의 보건복지여성국 형태로 성평등정책의 후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음(<사례 39>)

- 또한 아직도 성평등정책을 여성정책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실국으로 개편하는 것은 성평등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평등정책관을 격상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실국 안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음(<사례 41>)

- 성평등정책관이 있고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 아래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있는 구조는 자칫 양성평등정책과 실제 제주 여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거대 구조 속에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은 머리는 거대한데 손발이 매우 작은 구조가 될 수 있음. 이에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담당국으로 하고 현행 3팀에 여성권익과의 정책을 합하는 구조를 제안함. 여성과 가족, 청소년을 합하는 구조가 지자체에 일반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양육과 가족 강화 정책을 여성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임. 여성정책은 생애주기별 여성정책 개발과 집행,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 강화와 일자리 확보 등 현재 여성들이 겪는 문제 중심으로 부서가 만들어지고 담당자가 정해져야 함(<사례 42>)

- 같은 맥락에서 만약 실국으로 개편할 경우에는 성 주류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주무과가 되어야 힘을 발휘하며 통합적 시각에서 업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사례 38>)

- 양성평등담당관제의 내실화를 위해 부서장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함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평등담당관인 부서장이 ‘양성평등’ 업무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제도와 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음(<사례 39>)

2) 도정 및 지역사회 성평등 확산

- 도정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중요함
 - 성인지정책 업무는 일시적 성과보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해 가야 하는 업무이므로 젠더전문가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 정책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사례 38>)
- 지역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발굴·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양성평등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다양한 단체나 개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자원 즉,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대전의 경우에도 다양한 청년여성 단체들이 생성되고 있지만, 독자적 생존의 어려움이 있음. 이들 청년여성의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젠더거버넌스의 단단한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보임(<사례 39>)
 - 제주의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함. 또한 거버넌스 구조에 2030여성, 여성농민 등 제주지역 여성정책의 주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사례 42>)
 - 정책 영역별로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과 정책피드백의 체감형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내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권함. 대전시의 경우 양성평등위원회 내 성평등교육, 젠더폭력, 젠더환경, 성평등노동 4개 분야에 기획단과 소위원

회 구성하였음(기획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기획 → 소위원회에서 핵심과제 정책개선 방안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책총괄, 심의, 조정, 정책권고). 또한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권익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은 담당자별 사업을 기획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과 사전 간담회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음(<사례 38>)

3) 제주지역 특화 정책 제안

○ 제주여성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 사업 강화 및 확산이 필요함

- 여성문화유산재조명 및 계승과 보존 사업은 제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화의 보고인 제주의 특장점을 살려 여성신화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행정력 투입이 필요함. 향후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 연구의 과정에서 제주의 로컬문화에 대한 자부심, 문화 콘텐츠의 개발, 세대 간 공감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봄(<사례 42>)

○ 성인지적 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안전 관광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관광객이 많은 제주의 특성상, 관광 관련 인력에 대한 성평등 교육 및 관광홍보 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점검 강화가 필요함(<사례 39>)
- 제주가 관광도시임을 고려할 때, 제주 거주 여성뿐 아니라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사례 41>)
- 제주의 안전과 인권 정책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제주의 여성안전정책으로 표기 되어 있음. 제주는 여성들이 혼자서 여행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함. 몇 건의 극악한 사건으로 제주로 여행가는 여성들에게는 매력적이나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고 있음. 도내 여성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이미 제주는 자치경찰제도를 미리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예방의무가 자치경찰의 사무로 들어와 있으니 경찰행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의지 천명 등이 필요함(<사례 42>)

4. 소결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제주 도내·외 행정, 학계, NGO,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의 양성평등정책 전문가 및 관계자의 양성평등정책 참여 경험 및 인식을 통하여,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민선8기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음.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운영 현황과 성과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양성평등담당관제, 양성평등위원회 등)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안전과 인권 업무의 이원화(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조직의 부재, 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의 담당 조직 위상 미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선7기에 추진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주요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점검 등 도정의 성 주류화 확산 전략 강화를 위하여 성평등정책관 조직의 인력 및 예산 위상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한 역할 강화,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양성평등정책 계획의 통합적 수립·운영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안전, 인권 등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종사자들은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이원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관이 양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위상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가족정책 전담부서(실 또는 과)와 보육 및 아동청소년지원과 관련하여 담당 조직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

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 추진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개선 방안

- 제주도·내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제주지역과 타지역 전문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전문가의 경우 2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모두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첫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를 통합하여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을 ‘실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둘째,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를 크게 여성(성평등)과 가족으로 분리하고 각 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그것임
- 타지역 전문가의 경우, 제주지역의 성평등정책관 신설에 대해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평등정책관의 안착과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였음. 그리고 여성(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하여 실국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성 주류화 전략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전제되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음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조직 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영역별 개선 방안

- 성 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 가부장적 문화가 공고한 제주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평등 교육, 거버넌스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성평등교육문화 진흥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아젠다 형성을 위한 다양한 민관네트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함
 - － 특히, 지역에서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단체의 공간 지원 및 활동 역량 강화가 필요함. 민간단체나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역할이 중요함

- 또한 제주지역의 여성가족연구 및 교육·문화 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재단 형태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교육문화 기관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타지역 전문가의 경우 제주지역 특화사업으로 신화의 보고인 제주의 특·장점을 살려 여성신화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여성 안전, 인권, 건강 증진 사업

- 여성인권 의식 향상 및 양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인권 관련 단체들의 청년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및 거버넌스 운영 사업 등이 필요함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 보호 시설의 1인 1실(최소한 2인 1실) 시설 정비가 필요함. 또한 결혼이주민과 장애인 폭력피해자에 대한 시설 추가 설치 및 자립 지원 방안이 필요함.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일반 여성 전체를 위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공공 의료기관에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간단한 여성 질환에 대한 무료검진이나 상담,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범죄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자연적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 재난전문가 양성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대피소 운영 등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며, 아울러 1인 가구 여성이나 취약계층 여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환경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해야 함
- 타지역 전문가 다수가 제주지역의 특화 정책으로 성인지적 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안전 관광 정책 개발 필요성을 제안함. 특히 자치경찰단과 행정이 함께 연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가족, 돌봄, 일·생활 균형 사업

- 국제·국내 이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들을 기획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제주도 ‘가족정책기본계획’(가칭)이 수립되고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야 함. 이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가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해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센터로 개편한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 기본계획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또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관계 만들기를 위한 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지역협의체 및 가족관계 지원 상담소, 부모 대상 양육 상담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함
- 가족과 돌봄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그것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질 필요 있음
- 장애아동 돌봄 전문가 육성 및 발달장애아 조기 발견 제도 마련 등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함
- 제주도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영세기업들, 자영업이나 농어촌 지역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 디지털, IT 등 남성 위주의 업종이라는 직업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 타파, 여성 진입 위한 제도·정책 필요하며, 디지털 사회 등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고 여성들의 니즈도 다양하므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이 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전문 기술 및 친환경 일자리 관련 교육 및 직종 개발 및 디지털 사회 및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 관광, 서비스업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지원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하고, 창업 관련 정보 및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등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함
- 여성 고용 장려 제도 개선 및 기업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여성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제주 양성평등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시간제 일자리 고용보험 지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확산이 필요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처우 개선, 직업 안전화 지원이 필요함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

- 1. 여건 변화 전망
- 2. 정책 비전과 방향
- 3. 정책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1. 여건 변화 전망

가. 종합 전망

- 첫째, 성평등 인식에 있어 성별, 세대별, 출신 지역 등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 강화 및 정책 실효성 강화 필요가 필요함
 - 최근 성폭력 피해에 대항하는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 그리고 젠더 갈등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고, 이와 같은 세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계층에 따른 성평등 인식 차이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젠더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제주 지역의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남녀 도민 모두 제주사회가 성불평등하다는 인식이 6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통 및 인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성별, 세대별 파트너십 강화 등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제주도민 67.0% '제주사회는 성평등하지 않다'고 응답(여성 80.4%, 남성 53.3%)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2019)
 - 또한 내년 대선과 민선8기 제주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 정책과 지역 사회 확산을 위한 체감형 성평등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둘째,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 등의 환경 변화와 제주도민의 낮은 안전 체감도를 고려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상의 성범죄 증가, 특히 청소년,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수법에 의한 성 착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변화된 환경과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에 관한 정책마련을 위한 현황 조사 필요함
 - 또한 지속적으로 제주지역 여성의 야간보행 불안감이 높고 폭력피해 여성 비율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일상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강화가 필요함
(제주도민 53.2%(전국 50.8%)가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여성(58.1%)이 남성(48.1%)보다 10%p 높음.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39.6%)은 전국(36.5%)

보다 높고, 여성(50.5%)이 남성(28.7%)보다 22.4%p 높음(「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 셋째,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족·돌봄정책의 다각화 및 지자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만혼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 등 가족구성 지연 및 생애주기 다각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근거한 ‘가족의 정의’를 개정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배제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을과 지역이 함께 돌보는 가족·돌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 관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2020.12.31.)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노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동 돌봄 종사자 등 여성 필수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개발, 나아가 취업취약계층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정책 대응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 및 도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청정 제주의 비전을 반영한 그린 일자리 등 미래 지향적 여성일자리 창출 요구 증대가 예상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반영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 플랫폼 노동 등 국내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아울러 제주도내 창업지원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친화적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정책 모색이 필요함

나. 환경 분석

1) 강점(Strength)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강점 요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임.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성 주류화 총괄 조직인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하부행정기관까지 아우르는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운영 등을 통해 강화되었음
- 둘째, 성평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임. 성별, 세대별, 지역출신별 등 차이로 인하여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증대되었음. 특히,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론화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음
- 셋째, 지역 여성단체들이 도정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넷째, 제주해녀(문화), 설문대 할망 등 여신, 김만덕 등 지역 여성역사문화 자원과 치유, 힐링 등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함. 이는 성평등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및 관광,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약점 요인은 첫째, 조직, 인력, 예산, 협업 네트워크 등 성평등-가족정책의 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임.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었으나 전체적인 양성평등정책의 틀에서 볼 때 정책 기반을 구축하거나 안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둘째,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및 단체 활동이 미흡함. 지역 여성단체들이 도정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단체의 인적, 물적 역량 및 관련 민관네트워크는 미약한 수준임
- 셋째, 지역 공동체의 공고한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규범임. 이는 여성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영역 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족 및 돌봄 등 사적 영역 참여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넷째, 여성 경제활동 기반이 미흡함. 영세형 기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가족친화 및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3) 기회(Opportunity)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기회 요인은 첫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여성·가족친화’ 전략 신설로, 중장기적인 양성평등 정책 반영이 예상된다는 점임.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 정책에 성 주류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여성가족관련 연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강화 및 연계 운영 요구 증대임. 여성가족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평등교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의 강화 및 통합적 연계 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셋째,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문제 및 미투운동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광객 및 도민의 욕구가 상승함
- 넷째, 코로나19와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한 돌봄, 가족,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요구 증대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과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요구됨
- 다섯째, 제주 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 증대됨. 코로나19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4) 위협(Threat)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위협 요인은 첫째,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지도임.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다양한 정책 영역 중에서도 양성평등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낮아 정책 강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 둘째,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및 역차별 인식임. 이는 다양한 계층 간에 사회적 현안 문제에 있어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성평등정책 형성 과정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셋째, 개발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만연한 상황으로, 이는 돌봄과 가족친화, 환경 보호 등 성평등하고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넷째, 청년과 정착주민의 지역 유출 문제임. 이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주민 구성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5-1>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을 반영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제고 ○ 지역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활동 참여 활성화 ○ 지역 여성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력, 예산, 협업 네트워크 등 성평등-가족정책의 기반 미약 ○ 성평등 네트워크 및 단체 활동 미흡 ○ 지역 공동체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역할 규범 ○ 여성 경제활동 기반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여성·가족친화」 전략 신설로 도 중장기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예상 ○ 여성가족관련 연구, 교육, 문화 등 인프라 강화 및 연계 운영 요구 증대 ○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광객 및 도민의 욕구 상승 ○ 돌봄, 가족,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제주 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지도 ○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및 역차별 인식 ○ 개발과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만연 ○ 청년과 정착주민의 지역 유출

2. 정책 비전과 방향

가. 비전과 목표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의 비전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이주배경, 장애유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로 설정함
- 이와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평등하게 일하는 제주’, ‘함께 돌보는 제주’ 3대 목표를 수립하였음



나. 추진 방향

- 본 연구는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4개의 정책영역(방향)과 14개의 전략과제,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함

<표 5-2>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방향(전략 및 과제)

정책 영역	추진전략	과제
1. 여성인권 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확대
	성인지적 안전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경찰위원회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성인지적 도민 안전 역량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여성의 건강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 및 강화
2.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일자리정책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일자리정책 전담팀 및 인력 확충 고용평등 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직업교육훈련 개발 여성 직업훈련기관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여성창업지원 공간 확충
	제주형 여성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제주 가치를 담은 여성 일자리 개발 위라밸 일터 조성 지원
3. 다양한 가족 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주가족친화지원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돌봄·가족 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중심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추진체계 강화 도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생활균형 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영세사업체·여성 집중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
4.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인지정책 업무 지원체계 강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운영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젠더거버넌스 구축 운영 NGO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강화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균형구성 목표관리 마을자치단위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제주여성인재DB 활용 강화
	지역 성평등교육 연구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여성가족연구기관 기능 강화: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제주양성평등교육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3. 정책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가. 여성 인권·안전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 강화

1) 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1-1-1

젠더폭력에 대한 다각적 대응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젠더폭력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어, 제주 실정에 맞게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기반을 내실화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 모니터링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에서는 올해 전 동거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친부의 두 자녀 상습 성폭력 사건, 상습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받던 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 국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으로 집계됨(한국여성위원회, 2020). 이는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폭력 사건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임
- 제주지역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가해자의 처벌강화(39.8%)와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21.6%), 가해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18.7%) 순으로 나타나(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2020),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제주 상황에 맞는 보호 체계의 전환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아울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전통적 유형의 젠더폭력을 벗어나 데이트폭력,

- 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가 요구됨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2020) 결과,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하며 남성보다 대응 인식이 저조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29.4%)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남성(66.7%)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데이트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신체적 피해, 불법영상촬영 피해 외 경제적 폭력,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폭력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낮으며, 데이트 폭력 경험 이후 외부적 조치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51.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사업 내용

①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 및 긴급피난처 확대 운영

- 사업목표 : 제주도 전역의 위기여성을 24시간 긴급하게 상담하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서귀포 권역의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
- 추진내용 :
 - 서귀포 권역의 1366제주센터 분원 설치의 필요성 조사 연구
 - 서귀포 권역 내 유관 상담소는 존재하나 24시간 긴급피난처 역할 수행하는 기관 부재
 - 서귀포 권역의 긴급피난처 추가 설치 및 운영 확대
 - 현재 제주 도내 긴급피난처 역할을 1366제주센터가 담당하는 상황으로 서귀포 권역의 피해 여성을 긴급하게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적, 물리적 제약 발생
 - 서귀포 권역에 분원이 설치될 경우, 긴급 상황에 맞는 신속 피난 지원 가능

②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원 확대

- 사업목표 : 여성폭력 현장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핫라인 대응시스템(경찰, 1366센터, 상담기관의 합동 대응)의 지원 확대로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 추진내용 :
 - 핫라인 대응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및 피해 최소화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속 모니터링 지원 강화
 - 20년 실적 : 연계 71건, 모니터링 744건
- 피해자 맞춤 보호 지원
- 여성폭력 피해 발생 시 경찰 출동 및 상담원 동행 지원 서비스 지속 지원

③ 보호시설의 입소자 1인 1실 확보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 사업목표 : 보호시설 내 입소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영위되도록 1인 1실 개인별 또는 가족별 사용 공간으로 단계적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추진내용 :
 - 보호시설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 대상의 욕구 조사 연구
 -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적 추진 수립
 - 이주여성보호시설의 가족보호시설 확장 전환 모색
 - 기존 제주이주여성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 초과 및 학령기 남아 동반의 피해자 입소 불가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④ 장애인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설치

- 사업목표 :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 여성의 맞춤형 케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보호시설 신규 설치
- 추진내용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1개소 설치
 - 장애 특성에 맞는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환경과 인력 배치를 맞춤형으로 지원
 - ※ 운영현황 : 전국의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0. 6. 30. 기준 광주 1개소, 경기 1개소 총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피해자의 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
-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⑤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지원 강화

- 사업목표 : 폭력피해 여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확대 지원, 통합적 자립지원 시스템 및 지원 제도 마련

○ 추진내용 :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 보호시설에 입소한 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퇴소 후에도 관리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 보호시설의 집단생활에 대한 거부감, 개인의 직장 상황 등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 자립 지원정책 마련
- 주거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등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 제도나 인적, 물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접근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제주도내 보호시설 폭력피해여성 대상 욕구조사에서, 시설에서 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공했으면 하는 서비스로 1순위 주택지원(88.78%), 2순위 취업알선 등 구직지원(50.0%), 3순위로는 아동학습 및 상담지원(27.5%)으로 나타나(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7), 폭력피해여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특히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 있음

⑥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기능 강화

- 사업목표 : 맞춤형 피해자 지원 서비스(심층 상담, 수사 기관 동행, 의료지원 등) 및 전문적인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추진내용 :

-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비 편성
 - 현재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는 의료비가 보조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에 연계 의뢰하여야 가능한 상황으로 이마저도 의뢰기관의 자체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아 원활한 피해자 회복 지원에 한계 발생
-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 지원할 수 있는 기능 강화
 - 현재 불법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유 및 실행 권한이 중앙디지털성범죄상담소와 경찰청에만 부여돼, 피해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삭제 지원·대응하는데 한계 발생
 - 디지털성범죄상담소의 상징적 기능인 ‘직접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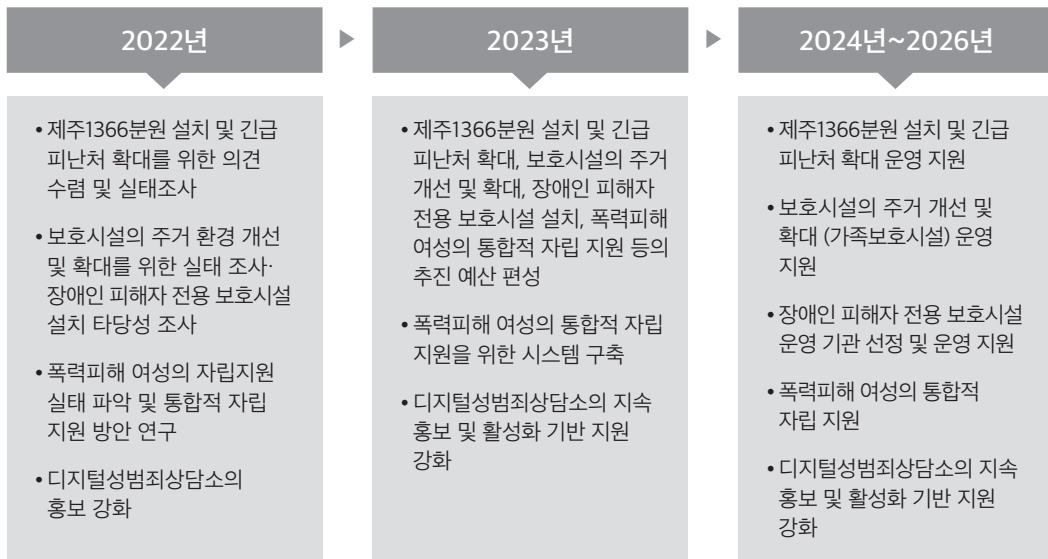
－ 추가 인력 배정

- 현재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 배정된 2명의 인력으로 피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상담, 수사 기관 법원 동행,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운영, 각종 예방 및 연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배정 필요
-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성범죄상담소를 시범 운영 계획 수립하면서 명시한 주요 기능

-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상담 및 초기 긴급 삭제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불법영상물 등 유포 및 삭제 지원 현황 모니터링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 수사기관 법원 동행, 무료 법률 연계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제공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위탁 관리 센터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향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여성 폭력·인권 지원 관련 유관기관

1-1-2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지원 확대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도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도민 성평등 교육(일반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일반도민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변수로 전년도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여, 상황·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방법의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 지원이 필요함
-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학교 내 교육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그 이후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체계적인 교육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청년 대상의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청년들이 젠더폭력과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 향상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시행 확대 및 다양한 참여 체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2020) 결과, 폭력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유경험 비율은 74.5%로 비교적 높았으나, 디지털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도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하였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신체적 폭력 피해,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하여는 높은 폭력 인식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 폭력, 언어폭력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도를 나타냄. 향후 다양한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균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 근절과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운영되었지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의 주체, 효과성 등의 논란을 거듭하며 점점 예산 지원이 감액되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제주도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조사 연구가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청년세대 성인권 인식개선 지원 확대

○ 사업목표 : 청년세대가 폭력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 및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인권 향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

- 지역 내 대학생들이 성폭력예방교육, 데이트폭력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 다양한 젠더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자체와 도내 대학교 간 공동 추진체계 구성 및 예산 지원
- 청년들이 여성 인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성
 - 각종 정책 거버넌스, 모니터링단의 청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년 활동가 육성 및 기반 지원
- 청년들이 여성 인권 향상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 마련
 - 다양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니터링단 등에 청년할당제·비례제 운영으로 청년들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

②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사업목표 :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행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추진내용 :

- 비의무대상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의 의무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하는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제주도 예산 지원으로 실시되는 비의무대상의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야별, 직군별 다양한 비의무대상의 균형적인 젠더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데이트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및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비의무대상의 젠더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 정책과의 연계형 모색
 - 마을 단위의 사업비 지원 시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 이수 인원 등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특전 제공하여 비의무대상의 교육 참여도 향상 방안 마련
 - 지역 내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의 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의 차별화 또는 기본 수당 외 추가 쿠폰(공영 관광지 관람권, 제주 경제 활성화 연계형 꾸러미 등) 지원

③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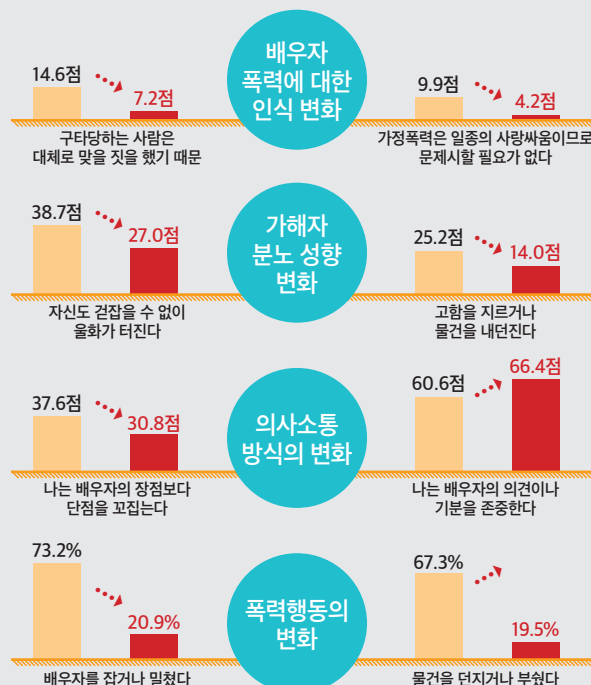
- 사업목표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색

○ 추진내용 :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조사 연구 실시
 - 제주도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대상자 효과성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가정폭력상담소)을 확대 지정하고 예산 지원 강화

※ 참고
2020년도 경기도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 가정폭력행위자의 폭
력에 대한 인식·성향에
변화를 이끌어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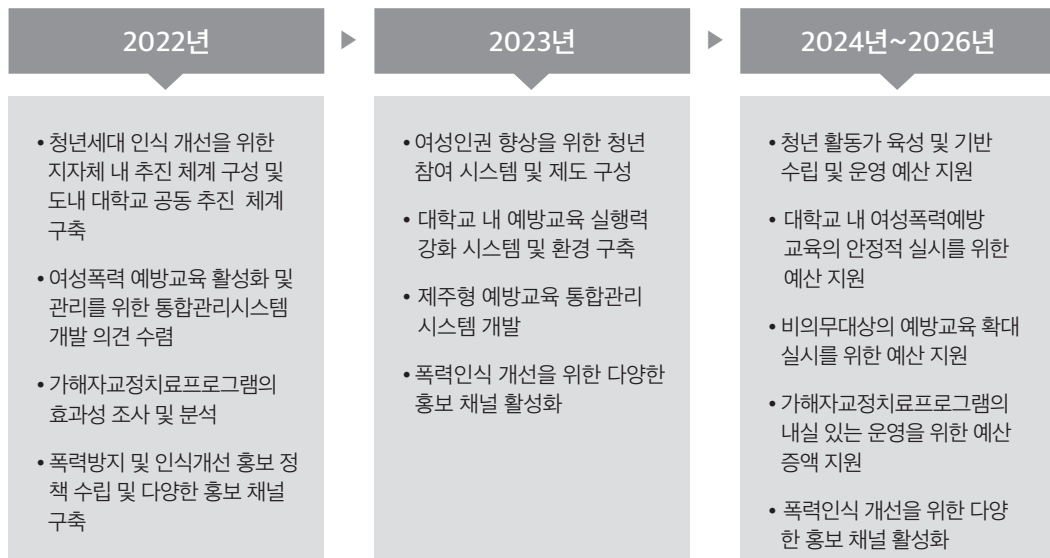
④ 젠더폭력 방지 및 대응 홍보 강화

○ 사업목표 : 다양한 젠더폭력 발생을 방지하고 폭력 발생의 구조적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 추진내용 :

- 관 주도형 홍보 추진
 - 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의 각종 행사,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강연회 등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인식개선 부스 운영 의무화 또는 사업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민·관 협력 체계형 홍보 추진
 -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참여 인원 50명 이상 규모의 행사, 사업 진행 시 폭력 인식개선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활동 의무화 또는 사업평가 시 가산점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 지원
 -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남성의 선호율이 더 높고, 밴드, 카카오톡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는 여성의 선호율이 더 높음(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019)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교육 지원 관련 유관기관, 여성폭력상담소

2) 성인지적 안전 환경 조성

1-2-1

자치경찰위원회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안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사무분담에 있어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를 고려하여 상호존중과 협력을 극대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청소년 분야 실무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하는 성평등정책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여성을 포함한 생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 분야 내부자료, 2021)
- 자치경찰위원회의 양성평등 관점의 안전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자치경찰위원회의 성인지적 행정 강화
 - 여성·청소년 분야 실무협의회에 도 성평등정책관 및 성평등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 * 현재, 여가가족청소년과, 도 교육청, 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위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 주요 관광지 여성안전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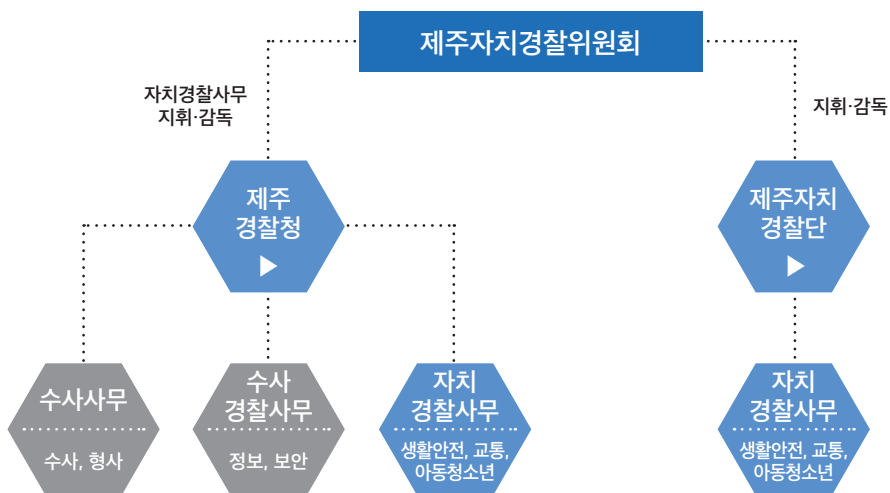
- 여성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내 화장실 및 안전시설 점검 및 범죄 예방활동 강화
- 도내 공영 관광지를 선정하여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탐지활동 및 안심비상벨 추가설치 및 점검, 홍보 강화
- 불법촬영기기 관련 예방 홍보물 부착(여성안심 화장실 인증 등)

○ 자율방범단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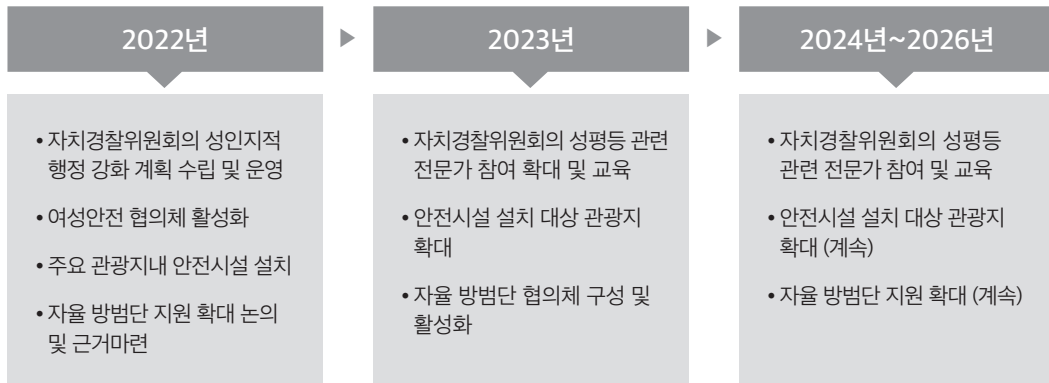
- 지역단위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마을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마을의 자연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율방범단의 기능 강화와 지원 확대
- 지역의 부녀회와 녹색부모회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권장
- 여성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제3조 2항, 조직 및 구성)

현행	개정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및 자치경찰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1-2-2

성인지적 도민 안전 역량 강화

□ 사업배경 및 목적

- 안전장비 사용(소화기 사용, 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이나 재난 발생 시 (대피소 인지, 생존수용, 응급처치, 위기대처법) 등 재난대응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제주특별자치도, 2021). 여성에 대한 생활안전뿐 아니라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안전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개 영역(생활안전,交通安全, 자연재난, 범죄안전, 보건안전) 44개 세부영역에 걸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등 여성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및 실적에 대한 성별분석이 전무하고 도민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지원이 부족함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목표를 연 인원 400명으로 정하고 있어 교육인원 목표 상향 조정 및 여성참여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여성 활동가와 전문 강사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활동가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특별자치도, 2021) 여성 활동가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역량강화를 통하여 모범을 보이고 안전 관련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주지역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등 활동을 위한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이 구성되어, 4개 분과위원회(성평등분과, 경제활동분과, 도시공간분과, 가족친화분과)가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 2개 분과만이 활동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비 우리 생활안전 길라잡이」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징하는 표현이 발견되어 제주 지역의 재난안전 매뉴얼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재난안전 활동가 과정 개설을 통한 여성 안전전문 활동가 양성

- 교육목적 : 재난 발생 시 지역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
- 교육강사 : 여성안전 활동가(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및 전문가 활용한 교육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및 대피방법, 지역 내 재난대피소 위치,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생활안전 수칙 등
- 교육대상 : 각 마을단위 부녀회, 여성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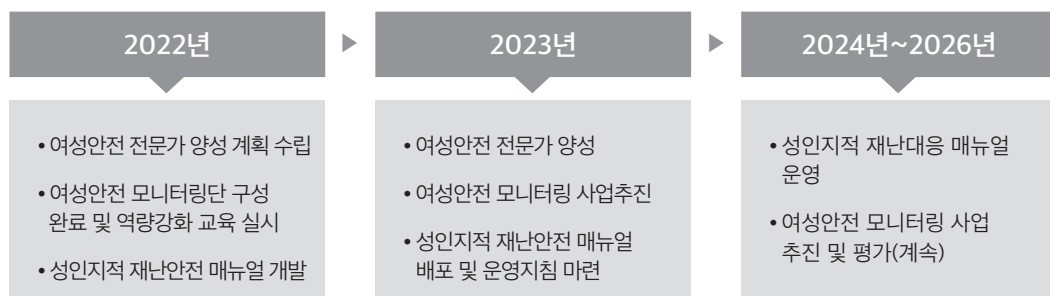
○ 도민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기존의 참여단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확보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활동과 연계(성평등분과, 도시공간분과 등)
- 지역 내 안전 관련 시설 점검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 안심벨 위치 및 작동, 위험한 시설물이나 도로 점검, 방치된 폐가 관리 등
 - 도민참여단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 및 정책 개선방안 제언

○ 성인지적 재난안전 매뉴얼 개발

-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재난취약자를 위한 재난 취약지역 발굴 및 안내, 관련 시설물 설치·운영 등에 대한 재난취약자의 이해를 고려한 안내서 작성
- 대피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대피소 지도제작 및 보급
- 기존 대피소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및 환류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도민안전체험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1-2-3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안심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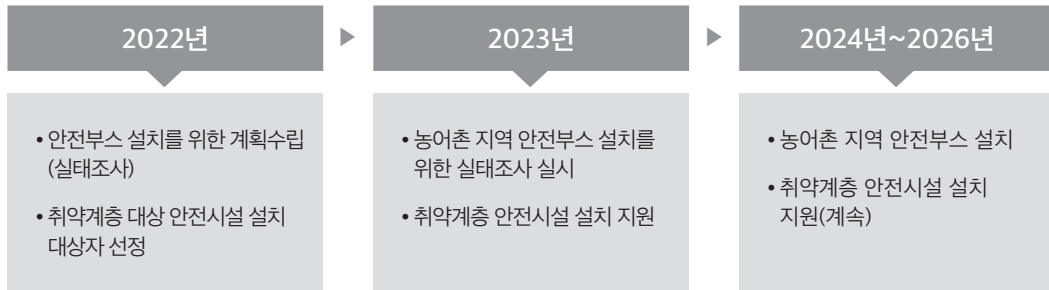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전관련 정책을 세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 지역 선정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시설물 설계와 설치가 필요함
- 기존의 여성 1인가구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4종세트인 원룸용 동작 감시 센서(외출 시 외부인 침입여부 확인), 침입알림장치(무단침입 확인 시 경찰 연락하여 자택 동행방문), 휴대용 호출벨 보급, 무선비상벨 등의 설치는 침입자 확인 용도로는 유용하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비 설치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농어촌 지역 중심 안전부스 설치 확대
 - 범죄예방을 위하여 인구가 많은 도심지 이외에 농어촌 지역에 안전부스 설치 확대
 -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하여 스마트 안전부스 설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범죄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비상 시 안심부스로 대피하면 자동문이 닫히는 운영체계)
 -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지원 확대
 - 여성 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창 설치 지원 확대
 - 성인지적 우수관광 사업체 선정 및 지원
 - 기존 우수관광사업체 지원사업에 여성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이고 성인지적 우수관광 사업체 발굴·지원
 - 기존의 평가항목인 안전위생관리 분야에 성인지 관점의 평가지표 개발
 - 종사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 안내
 - 여성(1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장비(전기충격기, 호신용품 등) 비치 및 대여
- ※ 참고: 현행 평가항목(사업체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도시디자인담당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협회

3) 여성의 건강권 확대

1-3-1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 사업 배경 및 목적

- 산후조리는 출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과정이며, 저출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2018년 보건복지부가 국내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부 정책 1순위(51.1%)로 ‘산후조리원 이용 경비 지원’을 꼽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비용지원 등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 현재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 1곳을 포함하여 총 13곳으로 양질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들의 호응을 크게 얻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 제주시 권역의 인구 밀도와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서귀포시)의 접근성, 산모의 이용 수요도, 욕구 등을 파악한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방안 모색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자녀양육 등에 대한 부담으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등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여성의 건강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젠더 건강불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함
 - － 여성들의 지각된 스트레스는 16점 만점 평균 7.48점으로 중간보다 아래이고 중장년기가 가장 높고 기혼유배우자 집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2021)
 - － 제주지역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 본인이 건강하다고 평가한 여성은 47.9%, 남성은 58.4%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평가가 낮게 나타남(통계청, 2020)
 - － 최근 1년 동안 여성가족 건강문화 관련 시설이용률은 1~5회 미만인 70% 이상을 차지하여 일회성 이용이 대부분이므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치

- 사업목표 : 국가적인 최대 현안인 저출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권역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추진내용 :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실태 및 제주 도내 산모 대상 욕구 조사 실시
- 제주시 권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
 - 지역별 인구, 거리 등을 고려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확충 필요
 - 타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호응도 및 만족도 참고
- 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회복 지원
-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② 제주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 사업목표 : 일과 가사,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심신이 지친 여성의 정신건강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문화 복합 공간 제공

○ 추진내용 :

- 제주여성 힐링공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주여성 힐링 공간 설치 및 운영(상담 및 교육인력 등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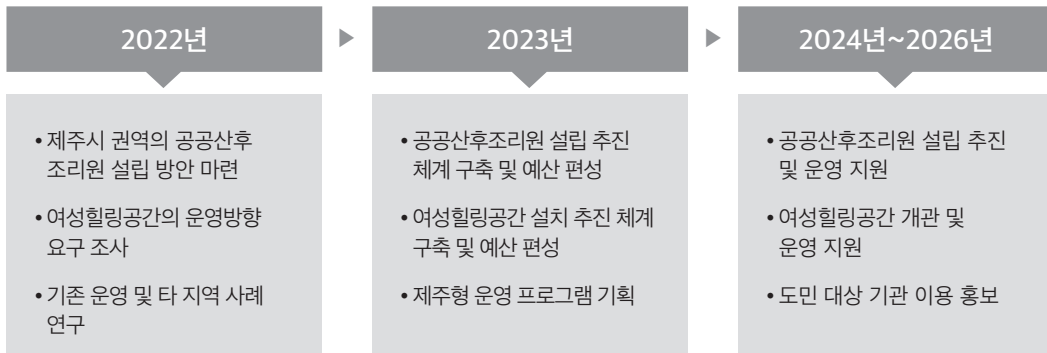
<(가칭) 제주여성 힐링 공간·쉼팡 세부 과제>

목표	세부 과제	사업 내용
심신통합 여성 건강문화 조성 기능	여성건강 상담 및 건강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건강 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 교육
	심신치유문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에 따른 심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삶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운영
	체력증진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신체적 특성 고려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배치 · 여성의 생애주기 고려한 체력 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목표	세부 과제	사업 내용
사회적 연대 기반 공동체 강화	건강문화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문화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건강문화 자조모임 발굴 및 성장 지원 제주여성건강축제 운영
	쉽과 만남의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남과 소통이 있는 힐링 카페 공간 구성 가변형의 여성건강문화 열린 공간 운영
	다양한 가족을 위한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돌봄(육아) 공간 운영 개수대와 전자레인지가 구비된 공유 부엌 제공
여성 건강문화 연계 및 교류 확대	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관련 및 여성가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여성건강문화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민주적 운영 구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간 이용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창구 마련

자료: 손태주 외 4인(20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1-3-2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정례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파악, 건강 증진 사업을 계획, 평가하고 있으나 제주여성의 건강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주 지역의 특성과 제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가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돌봄의 영역에서 여성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가 시간 활용도 또한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등(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2019) 제주 여성의 생활 형태와 건강의 연관성을 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아울러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 시,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리 요구 증대에 따른 생리, 피임, 임신, 출산, 낙태 등 여성 건강권 관련 실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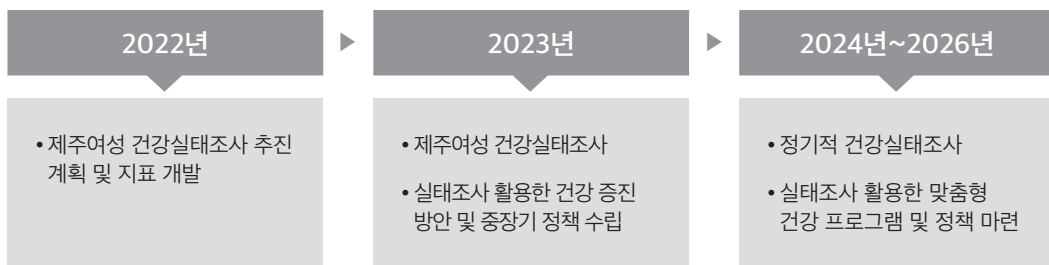
- 국가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반으로 ‘제주여성 건강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정기적 조사 실시
 - 국가에서 만 19세 이상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항목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건강지식,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사회 물리적 환경,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제활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 항목이 추가됨
 -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 항목 외 제주 여성의 실정에 맞는 항목 예시 : 여성의 경제활동 분야, 경제 활동 연수(경력), 지역(마을별,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삶의 형태, 돌봄의 주체여부, 가사 시간, 여가 시간 활용도, 자녀의 수(자녀의 미취학, 취학, 성인 여부), 가족 병력, 출산 여부, 초경과 완경(폐경) 시기,

- 약물 복용(치료제 및 건강보조제 등), 건강 증진서비스 경험(건강검진서비스, 물리치료, 마사지, 도수 치료 등), 건강관련 교육 이수 및 프로그램 참여 등
- 재생산 건강과 권리 관련 항목 추가
 - : 생리, 피임, 임신, 출산, 낙태 경험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 발굴

○ 활용 방안

- 지역, 직종, 연령, 계층별 통계 데이터를 도출하여 제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의 근거 제공
- 연도별 통계를 비교하여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 : 보건소

1-3-3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 및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건강은 여성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생활 속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63.2%)은 전국 여성(51.8%)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지만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규칙적 운동실천은 31.0%로 전국 여성 35.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8)
 - 「사회조사」(통계청, 2018)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55.4%)이 남성(52.3%)보다 생활전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여성(27.5%)이 남성(30.6%)보다 낮아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목표 : 여성의 건강검진 촉진을 위한 체계 및 제도 강화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여성의 건강한 삶에 기여
- 추진내용 :
 - 이동식 건강검진센터 운영
 - 건강검진·의료서비스의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산간, 도서지역에 이동식(예 버스형) 건강검진센터 정기 운영
 - 노년층, 장애인, 이주민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별 순회 운영 및 간단한 건강 관리 교육 제공
 - 건강검진 수검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 제주도민의 건강검진 수검률(2015~2017)은 2015년도 여성 72.6%, 남성 72.1%, 2016년은 여성 74.7%, 남성 71.7% 수치를 보여 2015~2016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수검률이 높았으나, 2017년에는 여성 77.2%, 남성 79.7%로 남성의 수검률이 높았음(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2019)
 - 2017년도 제주도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전국 시도별과 비교했을 때, 1위는 울산(83.4%), 2위 광주(82.3%), 3위 세종(8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는 전국 평균 78.5%에도 크게 못 미치는 73.1% 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임(제주특별자치도

치도 성인지통계, 2019)

- 제주지역의 남성과 여성 비교 수치를 넘어 제주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여성의 지역, 직종, 연령별 등 다양한 여성의 비수기 상황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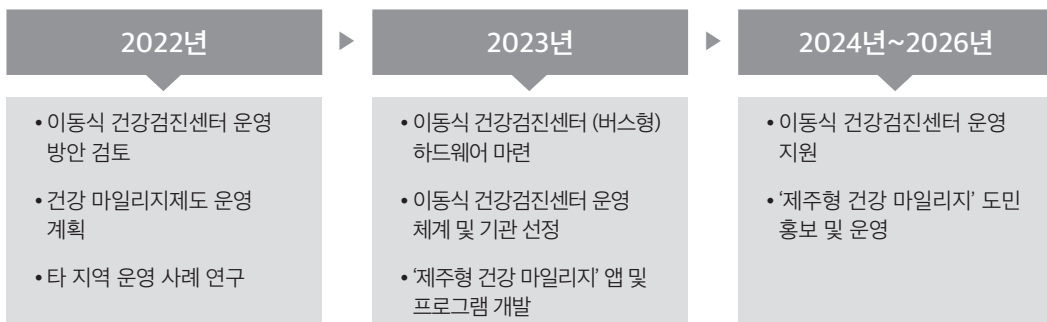
② 건강 활동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사업목표 :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 및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제주 여성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 추진내용 :

- 서울시 중구 건강마일리지 제도 벤치마킹
- 제주형 건강 마일리지 앱 개발
 - 생활 속 걷기 운동을 기반으로 한 만보기 기능 탑재
 - 지역별, 연령별, 난이도별 건강 프로그램 및 걷기 코스 개발
 - 계절 특성에 따른 이벤트 코스 개발
- 마일리지 부여
 - 제주형 건강 마일리지 앱을 활용하여 운동을 할 경우 마일리지 부여
 - 보건소 또는 건강의료기관의 교육,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시 마일리지 부여
 - 적립된 마일리지는 '탐나는전'과 같은 지역화폐와 연계하거나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참여도 증진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나.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제주형 여성 일자리 확대

1) 여성일자리정책 기반 강화

2-1-1

여성일자리정책 전담팀 및 인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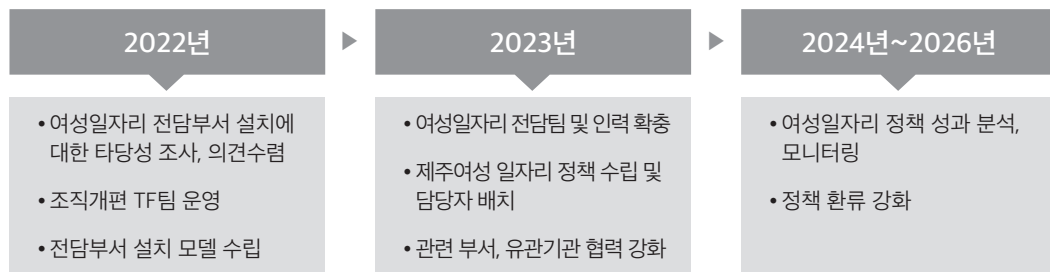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부서 없이 “여성권익정책팀” 아래 사업 담당 인력 1명이 여성 고용, 일자리, 여성 인력개발, 여성 단체 지원 등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인 제주 여성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여성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필요

□ 사업내용

- 여성일자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
 - － 여성일자리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 의견수렴, TF팀 구성 등 협의
 - － 여성일자리 전담 부서 및 인력 확충 계획 수립, 추진
-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팀’ 설치, 업무 분장, 인력 배치
 - － 제주여성 일자리 장단기 정책 수립
 - －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 및 성과 관리
 - －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통합 관리, 협력 업무
 - －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간, 인프라 등의 물리적 자산 확보 및 관리
 - －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 주류화 기획·관리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성평등정책관, 일자리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1-2

고용평등 환경 조성

□ 사업배경 및 목적

- 그동안 성평등한 노동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주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간 볼 수 없었던 50%대로 하향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 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이를 위한 지자체-기업의 협력이 확대강화되어야 함
- 2020년 기준, 제주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의 66.7%에 그침.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임금공시제 도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일자리 로드맵에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일자리 정책성과를 성별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여 일자리 정책의 성인지적 성과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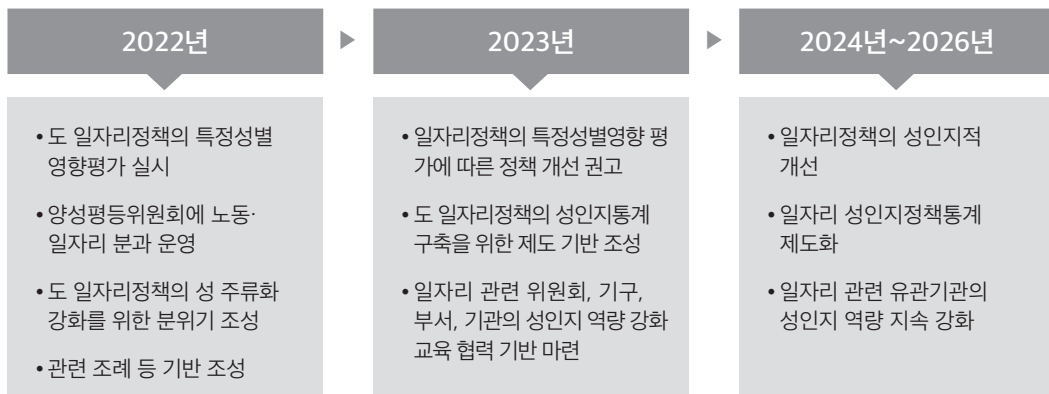
- 성평등 채용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도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성평등 채용, 여성 인력 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
 - 성평등 채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식 확산 : 공공기관 모니터링,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토론회, 교육, 캠페인 등)
 - 도내 공공기관, 기업 대상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지도 추진
- 성별 임금공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방안 마련
 - 성별 임금격차 개선 TF팀 운영, 관련 조례 및 추진 방법 정립
 - 조례, 추진 시스템, 위원회, 추진 부서 등 정립
 - 성별, 연령별, 직급별 등 임금공시 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인센티브 마련
- 성평등 임금 컨설팅 및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 찾아가는 성평등 임금실천 상담
 -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 주류화 실천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발
 -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른 제주도 일자리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정책의 성인지 통계 구축
 - 제주도 일자리 로드맵에 의해 운영되는 일자리 정책(참여자, 수혜자)의 성별 통계 구축
 - 일자리정책의 성인지정책 통계 구축의 제도화 및 추진체계 정립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위원회의 여성 일자리 정책 조정 기능 및 관심 제고
 - 양성평등위원회의 여성 노동일자리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 일자리 정책 관심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관련 기구, 부서, 기관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일자리과, 예산담당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여성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2-2-1

대상별 직업교육훈련 개발

□ 사업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경험은 일하는 문화와 제도까지 바꾸어 뉴노멀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훈련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 인재 육성의 구체적 방향을 설계하고 구현할 필요성 대두됨
- 대상별 분야별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대상자별 직업교육훈련의 접근성, 질적 수준 등 격차 발생
- 이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대상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직종 개발 요구됨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과 취업 실태조사 실시
 - 여성 전문 직업교육 운영기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조사 추진
 - 지역별 상황 파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결과 도출
-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종 개발
 -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후 대상별 구직여성의 수요와 제주 특화 산업에 맞는 직종 개발

※ 직업훈련 대상별 구분

- 20~30대 여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반 기술집약형 훈련 등
- 30~40대 여성 :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기반 훈련 등
- 50대 이상 여성 : AI 레이블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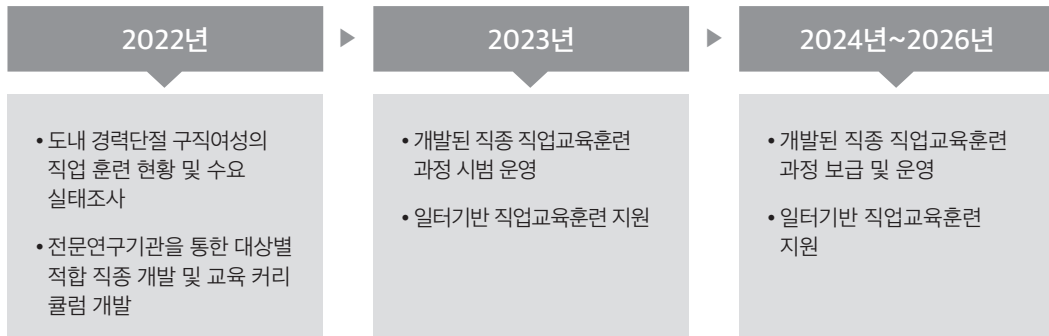
○ 새로운 직종의 직업훈련 시범운영

- 단계: 직종개발->시범운영->평가 및 피드백->적합직종 보급 및 운영

○ 고용유지를 위한 일터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

- 사내교육, 재직자훈련, 일터학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디지털 전환교육, 홍보미디어 교육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2

여성 직업훈련기관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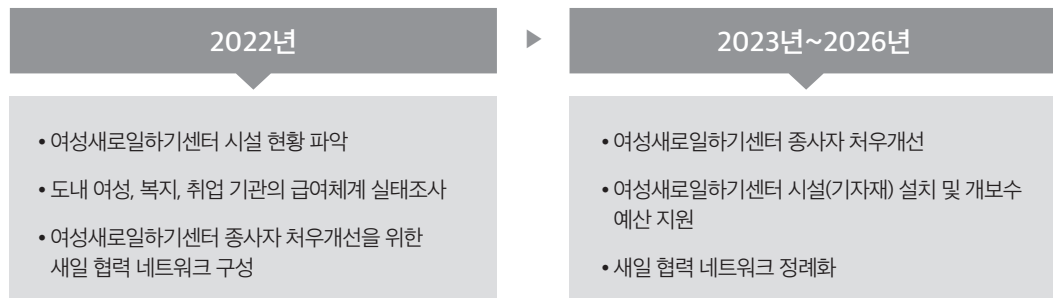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제주시 1곳, 서귀포 2곳이 운영해 오고 있음. 기관이 아닌 프로젝트형 지원으로 새일센터 운영 여건이 매우 열악함
- 새일센터 채용조건에 따른 유사직종과 비교 시 처우가 낮고, 매일 고용정보를 다루는 직업적 특성을 볼 때 이직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급여 체계 개선을 통한 고용유지와 장기근속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 지원확대가 요구됨

□ 사업 내용

- 여성 직업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지원
 - － 건물 노후 개보수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시설 인프라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 유사계열 도 내 기관 종사자 급여 체계 비교 조사
 - － 새일센터 급여체계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 새일센터 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 － 새일센터지원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3) 여성 창업 지원 활성화

2-3-1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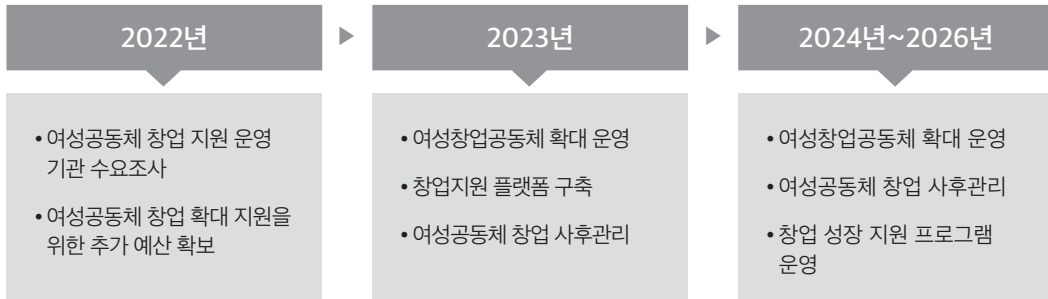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 공동체 창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제주형 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과라 볼 수 있음
- 향후 여성창업공동체 사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전담 창업 보육 매니저 배치, 사후관리, 공간 지원 등의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여성공동체 창업 지원 조직 플랫폼 운영기관이 제주시에 위치해 서귀포에서 창업을 준비할 경우 상대적 거리감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후 지속적인 컨설팅 등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서귀포에도 운영기관이 필요
- 여성공동체 창업을 확대 지원하여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마련됨으로써 전국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여성공동체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 여성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
 - * 지원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매니저 구성으로 지속적 성장 모니터링 강화
- 여성 창업지원 로컬인프라 공유플랫폼 구축
 - 단순히 공간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컬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의 코워킹이 가능한 공유플랫폼 구축
-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기관 확대
 - 기존 제주시 1개에서 서귀포시 지역으로 기관 1개소로 확대 지원
 - 사업의 행정 지원 및 예산 지원에서 확대하여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여성 창업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후관리를 돕기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이 가능해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2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여성들은 식당, 숙박 등 과거 생계형 중심으로 창업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기존의 창업으로는 한계가 발생되고 있어 여성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여성 스타트업 분야로서 소셜벤처는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신청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함
 - 국내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셜벤처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500개사 정도가 있으며, 이중 여성 스타트업 비중이 24.8%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 국내 벤처기업 중 여성 스타트업 비중은 2.9%(2019년 기준) 수준임
- 제주지역 내에서도 최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테마로 한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행정기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 인식이 타 지역 대비 낮고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여성스타트업 포럼 구성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책 발굴
- 여성스타트업의 결합과 지역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제공
(예, 군산 프랜들리-로컬 커뮤니티호텔, 지역식당, 지역세탁소, 가게, 목욕탕 등 지역 연계 모델 제시) *청년여성 대상 시범사업 운영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여성친화형 소셜벤처 육성 강화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여성 친화적 소셜벤처 기준 마련, 지원 정책의 평가, 환류 기준 마련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지원 인프라 강화

- 여성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친화 창업 공간 조성
-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강화
- 임팩트 투자자 수요조사, 모집, 투자 촉진 시스템 마련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체계적 전문적 육성지원 강화

- 로컬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 소셜벤처 육성 지원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인프라 강화, 육성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 창구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소셜 벤처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타 스타트업 사례 조사 • 여성스타트업 포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인프라 촉진 - 공간 마련, 투자자 확보 등 • 소셜 벤처기업 모집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여성스타트업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소셜 벤처기업 육성 체계 전문화 • 지속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여성스타트업 포럼 운영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미래전략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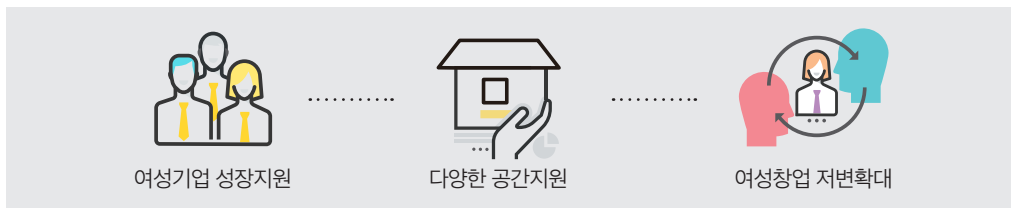
여성창업지원 공간 확충

□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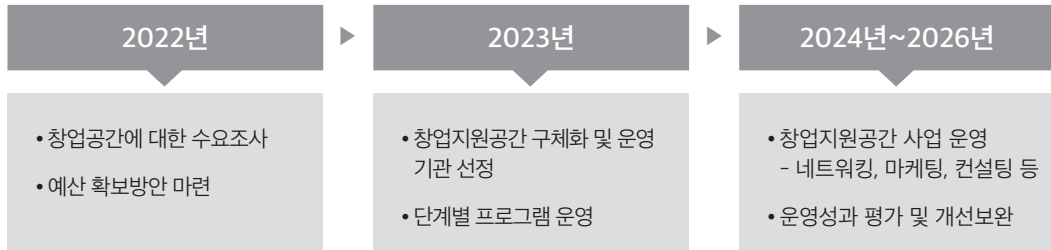
- 제주도내에서 여성들이 창업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많고, 창업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부족함.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생존과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필요 있음
-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신감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창업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여성 창업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창업지원 공간 수요 조사
 - 여성 전용 창업지원 가능 공간 검토
 - *신규공간이 아닌 기존 공간 활용-일반형 새일센터 공간 추가 지원 검토 가능
 - 복합적인 창업공간으로의 지원
 - *기존 여성 구직자 및 창업 준비자의 접근성 높임
- 창업 지원 공간에 대한 구체화 및 예산 마련
 - (창업실험실) 공유 사무공간 / (공용공간) 세미나실, 상담실 등의 이용 / (교육·컨설팅) 창업 및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홍보·마케팅) / (네트워킹)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진행
-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제주형 여성일자리 확대

2-4-1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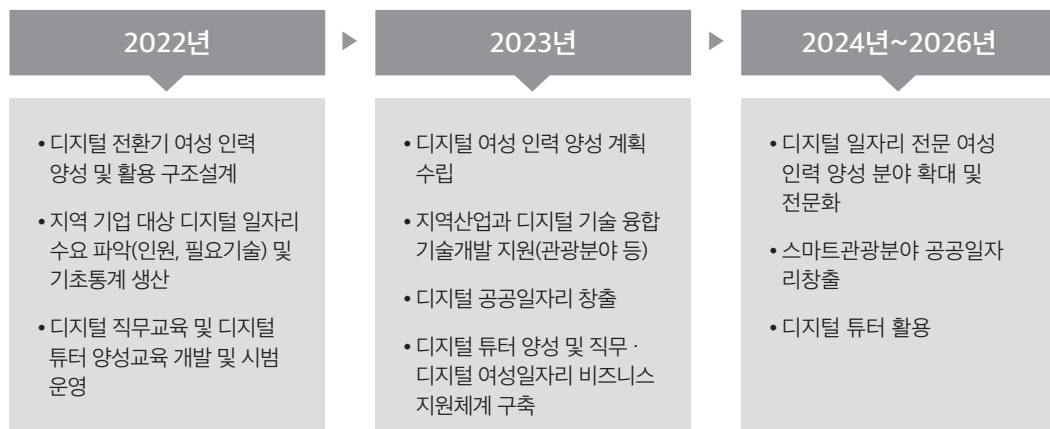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산업 전반에 걸친 자동화의 가속화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여성에 대한 디지털 일자리로의 전직 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필요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의 비약적 발전과 부문 간 융합으로 산업 전반에 기술변화는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제주지역 산업에 특화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여성 일자리 창출로 미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전문 여성인재 양성이 필요함
- 더불어, 디지털화 가속에 따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장되고 있어 이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재직여성의 디지털 직무교육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디지털 일자리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참여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의 특성이 있고, 제주라는 지역 특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일자리로 확장 가능함. 초기 AI레이블링 작업처럼 저숙련 디지털 분야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아 전문기술 보유도가 높지 않은 청년 및 중장년 여성의 디지털 일자리 진입도 가능하고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디지털 전환기에 미래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구조설계
 -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단계별 여성인력양성과 핵심 산업분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일자리 여성인력 구조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생산
-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제공에 따른 공공일자리 또는 인턴십 지원

- 트래블테크(Travel+Technology, VR, AR기술, ICT 첨단 서비스,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제주특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제주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 디지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및 디지털튜터 양성
- 경력단절여성 및 재직여성의 디지털 직무교육(200명 이상)
- 디지털미래 사회 대비 디지털 튜터 양성 및 활용(튜터 20명, 도민교육 500명)
- AI레이블러 등 디지털 여성일자리 비즈니스 지원체계 구축
- 빅데이터 전처리 및 레이블링과 관련한 저숙련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장벽을 낮추는 고용정책 검토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일자리과, 관광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대학, 지역 기업

2-4-2

제주의 가치를 담은 여성 일자리 개발

□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에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임
 - 자연문화유산해설, 친환경관련 분야, 관광분야 등 여성 인력이 편중되어 있는 산업분야, 즉 이와 연계하여 제주의 가치를 지속하는 여성 일자리 분야의 개발이 필요함
- 제주의 가치인 자연경관을 활용한 1차 관광에서 코로나19의 영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2차적 웰니스 관광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명상, 힐링, 돌봄, 휴식, 관리 등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해 여성 일자리 개발을 지원함
- 미래 여성일자리에 여성의 미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미래여성일자에 맞는 여성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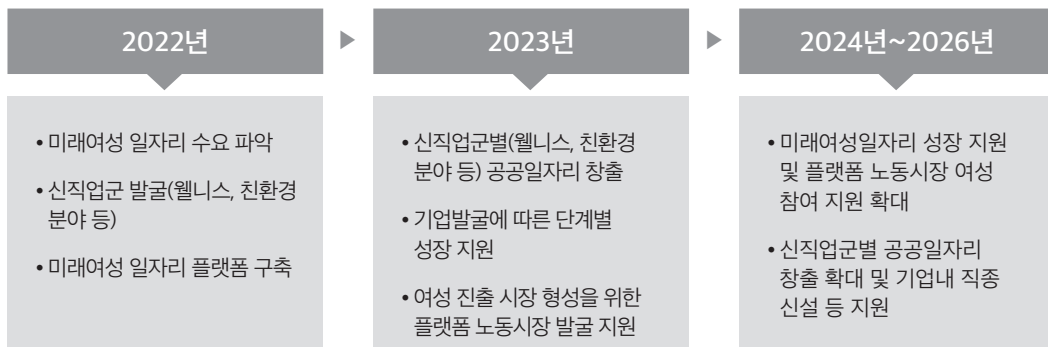
□ 사업 내용

- 제주 가치와 연결 가능한 여성 미래 일자리 수요 파악
 - 자연문화유산, 친환경, 관광분야 D.N.A 생태계 강화
- 친환경분야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
 - 전문화된 업사이클 일자리, 저탄소농업 및 친환경산업 전환 일자리 등
- 웰니스 관광 기업 발굴 및 일자리 연계 지원
 - 기존 웰니스 산업의 전문화 및 신규 콘텐츠 발굴
(예: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방안 마련 등)
- 미래 여성일자리 적합 플랫폼 구축
 - 예: 교육, 배달, 돌봄 영역 등 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여성의 유연한 일자리 참여 구조 지원

<서귀포 치유의 숲>자연+음식+해설 등 결합

구분	주요내용	
개장연도	● 2016년	
부지면적	● 약 174만㎡	
주요시설	● 힐링센터, 건강축정실, 다담실, 힐링하우스, 편백나무 침대, 산도록 숲 야외무대 등	
운영코스	● 가명오명 숲길, 가베뜨롱 치유숲길, 벤조롱 치유숲길, 숨비소리 치유의 숲길, 오고생이 치유숲길, 쉬멍 치유 숲길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내 최초의 치유의 숲으로 심신의 회복과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한 산림 ● 치유마을 호근동과 연계하여 차롱치유 밥상 판매, 마을 힐링해설사 운영 등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업 병행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관광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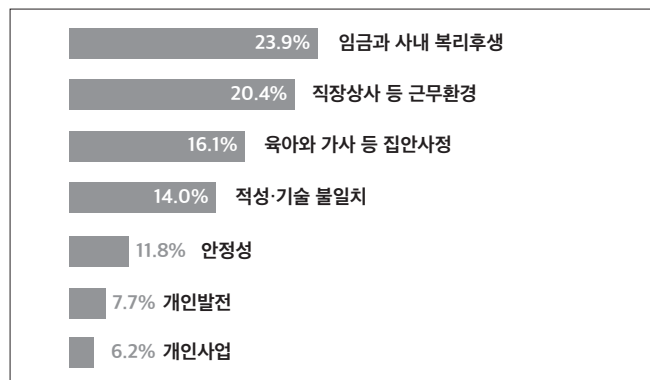
2-4-3

워라벨 일터 조성 지원

□ 사업배경 및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유연근무제와 워라벨 문화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와 기업의 공감대가 큼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확대 지원하며 노동조건과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 직업교육 훈련 확대, 프리랜서 지원 정책 확대 등이 필요
- 특히, 청년 여성의 이직 사유 중 장시간 근로 등 근무환경의 사유가 가장 비중이 높아 고용유지를 위한 워라벨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생활 균형 제고

<청년 이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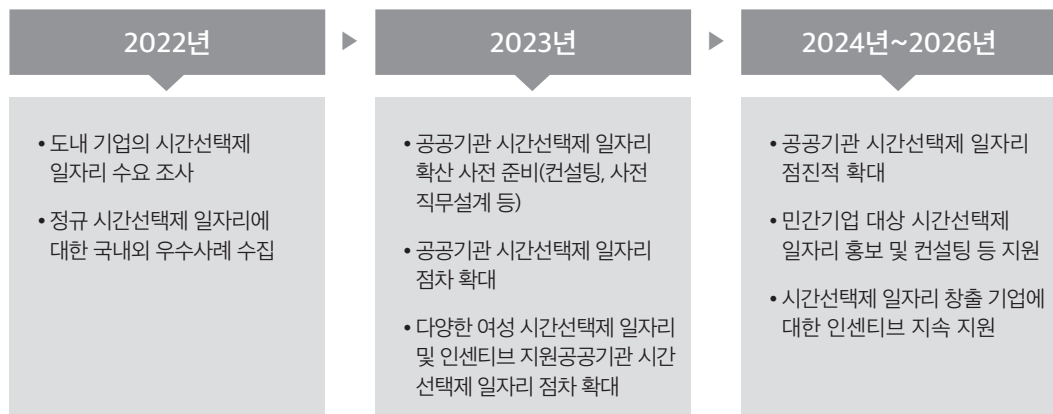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사업 내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 및 수요 조사 실시
 - 도내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무 설계를 위한 사전, 사후 전문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유연 근무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유연한 근무형태의 일자리 확대 제공을 통한 잠재 여성 인력 활용
 - － 퇴직교육 및 공무원 인적자원 활용
 - － 고학력 여성의 전문 일자리 선택 근로 가능
- 기업의 워라벨 확산,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홍보 캠페인 등 지원 확대
 - － 직원복지, 직원성장, 유연 근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다. 다양한 가족·돌봄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1)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 및 기반 강화

3-1-1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⁴⁰⁾ 및 제주의 가족 형태 변화와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및 전담부서를 통한 가족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성

-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양한 가족 지원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함
- 제주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가족센터’ 운영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효율적 정책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제주는 (2018년 기준) 1인 가구 29.4%로 가족의 형태 및 세대 구성에서 1인 가구 형태가 주류적 형태가 되었고, 비혈연, 한부모, 기타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하고 있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23).

- 2020년 5월 기준 외국인 인구 24,589명(총인구의 3.5%), 외국인의 성별 인구는 여성 10,879명(여성비율 44.2%)으로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2019년보다 증가하였고(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12) 2020년 6월 기준 고령인구는 15.4%(여성 17.9%, 남성 12.9%)로 고령인구 증가 추세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15)
- 그동안 가족정책은 아동, 노인, 여성 등 개인 대상별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제주의 보육 및 돌봄 지원과 취약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으로써 가족 형태의 다양성 및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40)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양한 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관한 관심 증가인데,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기반 조성임

포괄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체계는 미흡함

-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전담부서 신설 및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을 통한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정책은 민선6기에 이어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지역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아우름으로써 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동력으로서 가족정책 담당기구 구축·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설치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중 가족정책 업무는 가족담당관에서 기획·집행하고 있음. 여성정책이나 보육정책과 분리하여 가족정책 및 가족 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와 특화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경기도는 여성가족국이 설치되어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일가정지원과 등으로 가족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광주광역시도 여성가족국과 그 산하에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가족과 산하에 여성정책팀이 있어 여성가족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사업내용

①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목표 :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추진내용 :

- 가족 지원 전담 조직과 업무
-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 실시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가족정책위원회’(협의·조정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가족 형태와 가족 구성원의 실질적 지원·보장의 근거와 내용 등

② 가족정책 담당 조직 신설

- 사업목표 : ‘가족복지국’(가칭) 산하에 ‘가족정책과’를 설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설계와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가족정책과’를 신설해 가족정책 담당 조직기반 구축
 - 가족정책팀, 돌봄가족친화팀, 외국안다문화정책팀을 조직해 가족 다양성 포용
 - 다양한 가족정책 개발과 정책사업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 ‘가족실태조사’(도지사 임기 또는 5년 주기) 실시 계획 수립·관리

③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⁴¹⁾

- 사업목표 :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력 및 가족 다양성 수용 강화와 다양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족정책 실행력 확보

○ 추진내용 :

- 정부의 가족정책(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기조 반영
-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 결과 반영
-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
- 가족 서비스의 방향 및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
- 중장기 가족정책의 연차별 실행계획과 추진체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가족정책의 핵심 영역과 영역별 세부과제

41)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일·생활 균형과 존중·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⁴¹⁾을 수립한 바 있고, 경기도는 가족정책 계획(2006~2010) 수립연구를 진행하여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일·생활 균형 증진을 목표로 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였으며 최근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과 경기도 가족 형태 변화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또한 충청남도는 2016년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충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충남을 목표로 한 ‘충청남도 가족정책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한 바 있음. 최근 수립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비전은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경기’이며,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기반 조성, 모든 가족의 역량 강화·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등 4개 핵심 정책을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115억 6,500만원으로 추산되고 4개 핵심 정책, 22개 세부과제, 5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참조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생활 여건 보장 정책·사업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내용
- 가족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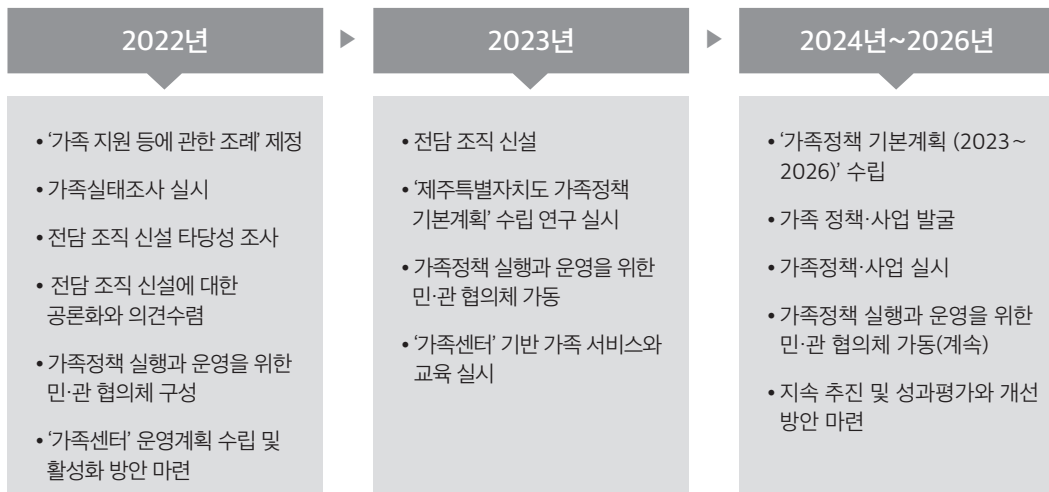
④ ‘가족센터’의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사업목표 : 지역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운영과 서비스 기반 강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발굴과 서비스 강화

○ 추진내용 :

- ‘가족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신설)
- 가족서비스 전달 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족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족돌봄협의체 네트워크와 마을돌봄 네트워크 강화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각 지역 ‘가족센터’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관련 단체

3-1-2

제주가족친화지원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2016.5.20. 개소)하여 현재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제주형 수놓음육아공동체 발굴과 지원, 수놓음돌봄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음
- 특히, 타 지자체의 유사 기관들이 일/생활 균형에 초점을 맞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해,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가족친화 직장환경뿐만 아니라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센터 조직과 인력 면에 있어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에 주력하는 타 지자체 센터와 다르지 않으며, 아울러 타지역 유사 기관*은 여성가족재단(연구원)의 내부조직이거나 지자체 행정조직이지만 제주지역만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조직 기반 개선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대구, 서울, 광주, 전남 등
- 이를 통해 제주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별 ‘수놓음나눔터’ 운영, 가족돌봄협의체 및 마을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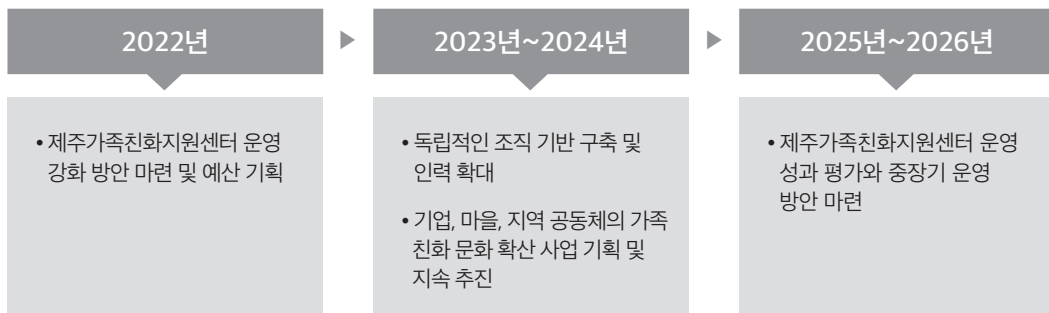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가족친화지원기관(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조직 기반 강화
 - 기관운영 방식 개선
 - 도 위탁사업 → 독립적인 조직 체계 마련 및 상설 조직으로 개편
 - 조직 및 인력 강화
 - 기존) 센터장, 1개 팀 등 5인
 - 개선안) 가족친화 직장환경, 마을환경 등 2개 팀으로 확대, 인력 확충

○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주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 돌봄공동체 참여자 및 수놓음육아나눔터 담당자 대상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참여자들의 소속감, 자긍심,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 수놓음돌봄활동가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등

2) 돌봄가족 친화 환경 조성

3-2-1

마을중심 가족·돌봄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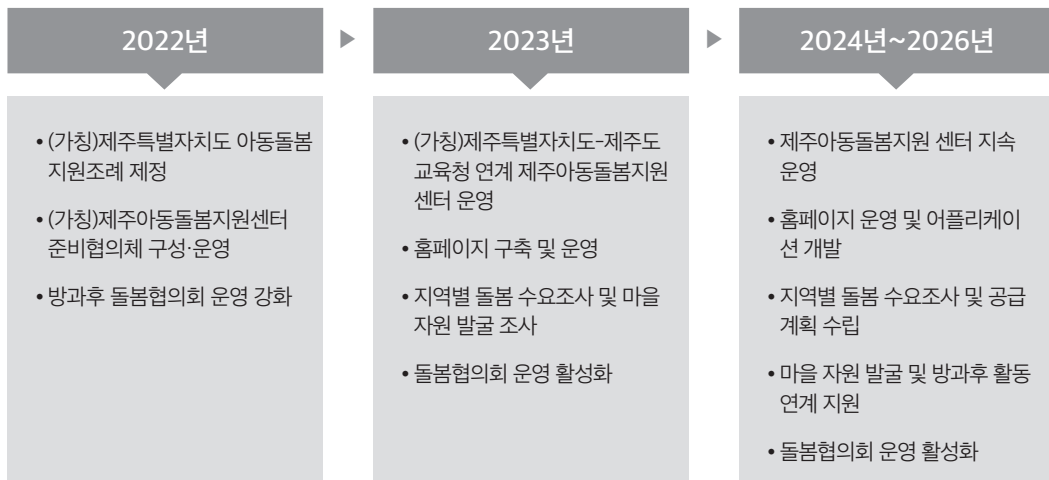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이 약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코로나19로 학교와 돌봄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함
- 코로나19로 전국 아동·청소년들은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른 초등학교생이 46.8%에 달했으며(정익중, 2020a에서 재인용), 제주지역의 경우 코로나 전(37.9%)보다 현재(44.8%) 직접 돌봄 응답 비율이 6.9%p 더 높고 돌봄 대안을 찾지 못한 경우 ‘자녀 혼자 두고 출근’ 한 것으로 나타남(손태주 외, 2021에서 재인용)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면서 공적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많은 가정들이 아동 돌봄 위기를 경험함
- 정부와 지자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대상을 늘리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적절한 공급환경을 만들지 못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원의「포스트 코로나 사회 제주지역 돌봄 뉴딜 방안 연구」(손태주 외, 2021) 결과 제주지역 학령기 아동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마을단위의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됨.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는 돌봄 추진체계 정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을돌봄 생태계 조성, 지역돌봄 네트워크 강화 순으로 나타남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민선8기 도정은 가족과 아동 돌봄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생태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 및 마을과 마을 자원의 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마을의 자원 활용, 생애주기별 돌봄·다양한 가족 돌봄 등 마을중심 가족·돌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아동돌봄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방안 모색 필요
 -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제정
 -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 연계 제주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
- 마을 돌봄 생태계 구축
 - － 돌봄 활동을 위한 학교 및 마을 유휴 공간 발굴 및 운영지원
 - －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공백 아동 기관연계 지원
 - － 지역중심 돌봄 나눔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 소통과 연대를 위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강화
 - － 학교 돌봄 및 마을 돌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돌봄 협의회 운영 활성화
 - － 방과후 돌봄 이용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방과후 돌봄 유관기관

3-2-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복지 추진체계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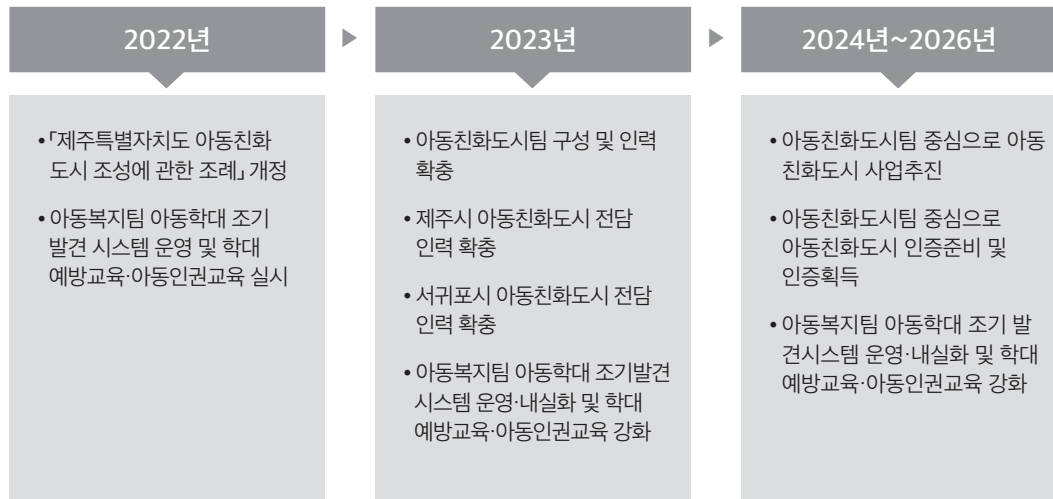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9)에 근거해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실시했으며 2021년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를 비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도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결과 보호자의 45.6%는 제주도가 아동의 권리가 반영된 법과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분리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지역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고 예방과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팀에서 집중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41,389건으로 전년대비 약 13.7% 증가했으며 제주의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959건으로 전년대비 약 1.6% 증가했음.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여성, 노인 등 약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민선8기 도정에서는 아동친화팀을 아동친화도시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나누어 추진체계를 강화해 아동친화도시팀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을 담당하게 하고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을 강화해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팀 구성 및 인력 확충

- 제주시와 서귀포시 아동친화도시 전담 인력 확충
-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운영·내실화 및 학대예방교육·아동인권교육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시, 서귀포시

3-2-3

도민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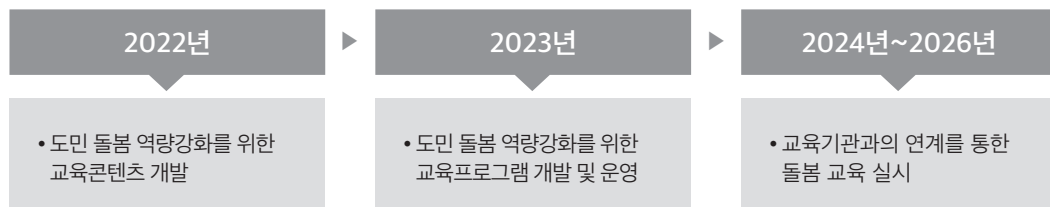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공적 돌봄이 강화될 것임. 더불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취약가족, 장애아동 돌봄, 다문화가정 아동 돌봄 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2019)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맞벌이 부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 3시간 7분, 남성 54분으로 여전히 가사·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앞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보장,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타인을 돌보는 돌봄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돌봄, 특정인이 돌보는 돌봄에서 누구나 돌봄을 할 수 있는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민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도민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교육콘텐츠 개발
-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돌봄자가 될 수 있도록 돌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도민 대상 돌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운영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교육관련 유관기관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3-3-1

일·생활균형 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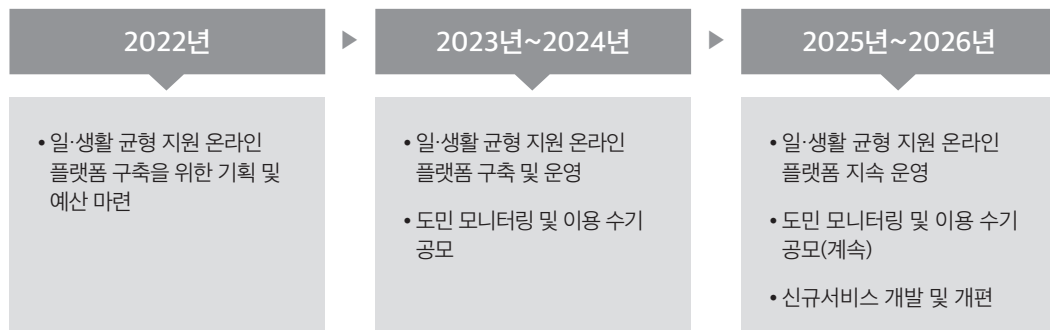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변화하는 경제·노동·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제주 도민들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내 분산된 다양한 위라벨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 도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

□ 사업 내용

- 일·생활균형에 필요한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보 제공
-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안내
- 아동돌봄 정보 플랫폼 운영
- 온라인상담 서비스 제공
- 제주도 일·생활균형 정책, 법·제도 안내 등 * '경기도 위라벨 링크' 운영 참고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등

3-3-2

영세사업체·여성 집중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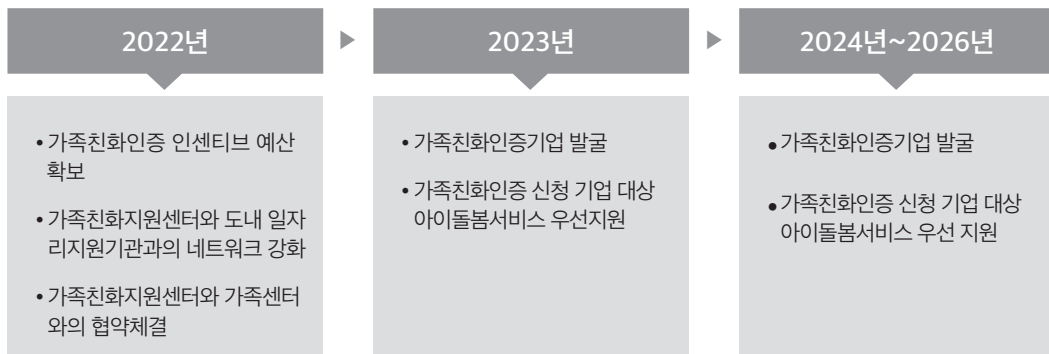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3.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전체 사업체 일자리의 48.1%를 차지함
- 제주지역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지역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8.7%에서 12.7%로 증가함
- 제주지역의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영세사업체와 여성 집중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일·생활균형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체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 발굴
-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 대상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업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라.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및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및 전략 강화

4-1-1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흐름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의 변화와 연동하여 성평등정책관 및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등 제주지역 자체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성평등정책관-여성가족청소년과, 양성평등담당관제 등)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민선7기 양성평등정책 성과 평가를 통해, 성 주류화 전략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안전과 인권 업무의 이원화(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 일자리 정책 담당 조직의 부재, 가족과 보육, 아동청소년 업무의 담당 조직 위상 미약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짐
-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까지 포함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도 전체 예산 중 ‘성평등 및 여성권익’ 예산은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 확대 및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위상 강화

- 사업목표 : 참모형 조직구조의 한계 극복을 위해 부서 위상 강화 및 의사결정권 제고,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을 통한 성평등-가족정책의 실효성 강화
- 추진내용
 - 성평등(여성)과 가족정책을 분리하고 각 담당조직의 위상 강화

- 도지사 또는 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위상 강화 및 확대
 - 국장급 성평등협치정책관으로 격상하여 성평등정책 실행력 및 실효성 제고
 -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여성권익정책팀’을 성평등협치정책관으로 이관
 - 성평등협치정책관 내 성평등노동팀, 단체협력팀 등 신설
- 보건정책과 가족복지정책 분리 후, 가족, 복지, 아동청소년정책 등을 아우르는 ‘가족 복지국’ 신설 :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 성평등협치정책관과 가족복지국의 협업체계 운영
- 별도의 성평등-가족정책 상시소통협의체 운영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협업 기능 강화
 -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이슈) 관련 사항 공유 및 협업 추진

② 성평등·여성권익 예산 0.25% 확보

○ 사업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중 ‘성평등 및 여성권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타지역 수준으로 확대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실행력 및 내실화 강화

○ 추진내용

- 매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타 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예산 분석 및 자료 구축
 - 2021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성평등 및 여성권익’분야 예산은 10,330백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17%로 나타남. 이는 서울과 대전 등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0.05~0.08% 낮은 수준임
-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따른 사업 기획 및 예산 수립
 - 단계적 예산 확대 편성 : 도 예산의 0.23 ~ 0.25%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도 예산	양성평등정책 예산					
	전체	성평등, 여성권익	가족	보육, 아동, 어린이	청소년	기타 (경비)
5,829,868	334,841	10,330	19,119	285,849	18,837	806
100%	5.7% (100%)	0.17(3.1)	0.32(5.7)	4.9(85.4)	0.3(5.6)	0.01(0.2)

자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양 행정시 포함)

<2021년 '성평등 및 여성권익' 예산 지역 비교>

(단위 : 백만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101,178(0.25%)	12,516(0.22%)	10,330(0.17%)

*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권익보호담당관 소관 예산, 대전광역시 : 성인지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③ 양성평등담당관제 정착 및 운영 활성화

- 사업목표 :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행정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본청뿐만 아니라 행정시 및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동력 강화로 효율적인 성 주류화정책 확산

○ 추진내용

- 양성평등담당제 총괄(기획조정실장, 현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운영(성평등정책관) 업무의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 ※ 민선8기 양성평등정책 조직 개편 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성평등협치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담당관제 총괄업무와 운영업무 통합 필요

참고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관련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관리로 부서장의 책임성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도를 통한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 및 네트워크 강화
 - 성인지교육 필수화로 공무원사회 성인지역량 제고
 - 양성평등담당관(과장), 양성평등담당(팀장) : 성 주류화정책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담당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연2회) 운영
 - 양성평등담당자 : 성 주류화정책 실무교육 확대(상,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담당관 담당자별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 분	직 책	성 주류화정책 교육 및 네트워크
양성평등담당관	부서장(과장)	- 성 주류화정책 필수교육으로 이수(의무화) - 부서별 성 주류화제도 추진·점검 위한 정례회의 참석(연2회)
양성평등담당	부서 주무팀장	- 성 주류화정책 필수교육으로 이수(의무화)
양성평등담당자	부서 예산담당	- 성 주류화정책 실무교육 확대(상, 하반기)

- 성평등 활동 부서 인센티브제도 신설(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외)
 - ‘우수 양성평등담당 부서’ 발굴 및 시상
 - : 성평등목표 수립,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정책환류 등 성인지정책 협력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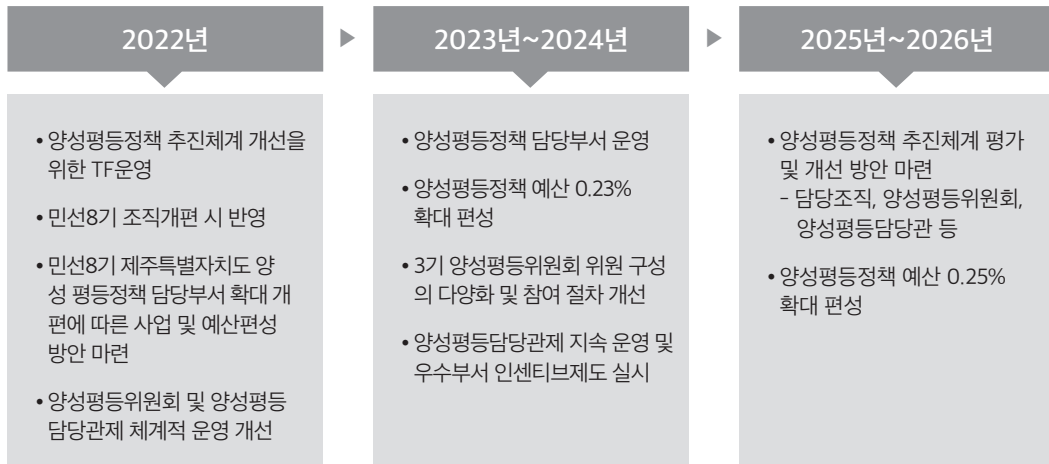
④ 양성평등위원회 강화, 정책권고제 확대

○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협의조정기능 강화 및 성평등 거버넌스 활성화

○ 추진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2030세대, 여성농어민, 이주민, 젠더전문가 등 다양한 도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성인지정책 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
 -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성과 등 도민사회 홍보를 위한 성과 공유 기회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기존) 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및가족친화분과
 - ‘여성일자리 및 노동’ 분과 추가 구성
 - 기획단을 별도 구성하여 성평등의제 발굴 및 기획, 실행을 위한 분과 활동 활성화
=> 분과위원회에서 핵심과제 정책개선방안 구체화 : 정책권고제와 연동
- ‘정책권고제’ 확대 운영 및 운영성과 도민사회 홍보 강화
 - 정책권고제 사업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여 확대 실시
 - 정책영역별로 구축된 시민거버넌스 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정책권고제 대상 과제 발굴 => 모니터링 => 정책피드백 등 정책이행점검 환류체계 구축·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양 행정시 각 부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등

4-1-2

성인지정책 업무 지원체계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2019, 이해웅·신승배)⁴²⁾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40% 이상이 ‘제도 및 업무 이해 부족’으로 응답함.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9%, ‘나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21%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성인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교육’(21.6%)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컨설팅 지원 강화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성인지정책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이행과 성인지교육 이수 실적이 성과관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① 공무원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사업목표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상시 교육과정의 전문적인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도 성평등정책관, 도 인재개발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 협업
 - 정책 분야별, 직급별, 성별 등 대상별 맞춤형 공무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인지정책 전문 강사 양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기능 강화
 - ※ 5급 이상 간부급 성인지교육 의무 실시
 - 성인지교육 방식의 다각화 : 소규모 워크숍 및 대면 컨설팅 연계 운영

42) 조사대상자 452명 중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 62명 응답(여성 26명, 남성 36명)

② 성인지정책 업무 성과관리(BSC) 반영

○ 사업목표 : 성인지 정책 실행의 동기부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독려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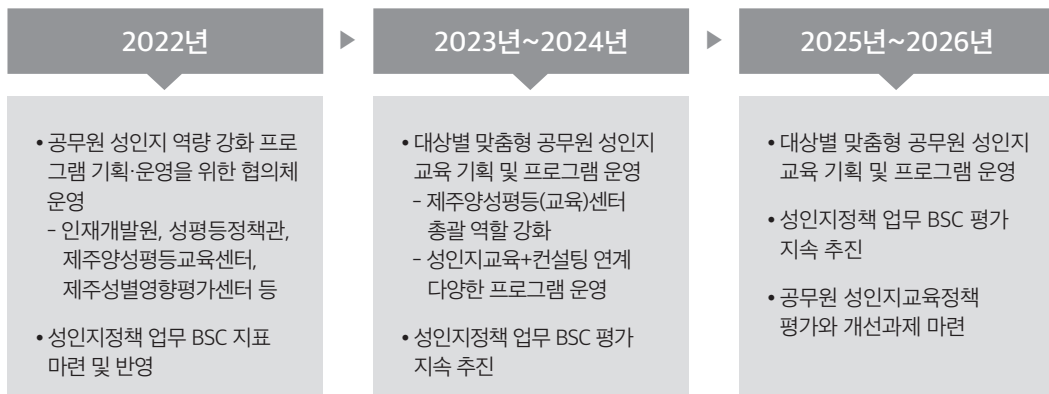
－ 성 주류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업무이행과 성인지교육 이수 실적성과관리 반영

※ 서울, 울산 등 타지역 성과관리에 반영 중

－ 주요 평가항목

- 성인지교육 참여율
- 성별영향평가 업무 이행
 -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제출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 개선의견 반영률 및 정책개선 이행율
- 성인지예산 연계(대상과제)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4-1-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네트워크 운영

□ 사업 배경 및 목적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성인지통계, 지역 성평등 지수 등은 모두 지역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들 간의 연계 추진 시 정책 개선 성과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정책 담당조직은 대표적으로 성평등정책관과 예산담당관(회계과)으로 각 부서 업무연계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등의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제주지역 성 주류화 거버넌스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지역 젠더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행정의 역할 강화와 도민 주도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성인지정책 실무협의체 운영

- 사업목표 : 성인지정책 간 연계 및 실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단계별 업무 추진의 효율화 및 정책 실행력 강화
- 추진내용
 - 주요 추진단계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실무협의체 운영
 - : 대상과제 선정 → 분석서 작성 및 검토 → 정책개선 이행점검 관리 등
 - * 서울, 충남 등 운영
 - 기관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총 2회) : 상·하반기 인사이동에 맞춰 각 1회 실시
 - 구성원 : 도 및 양 행정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기관담당공무원, 제주 성별영향평가센터(전문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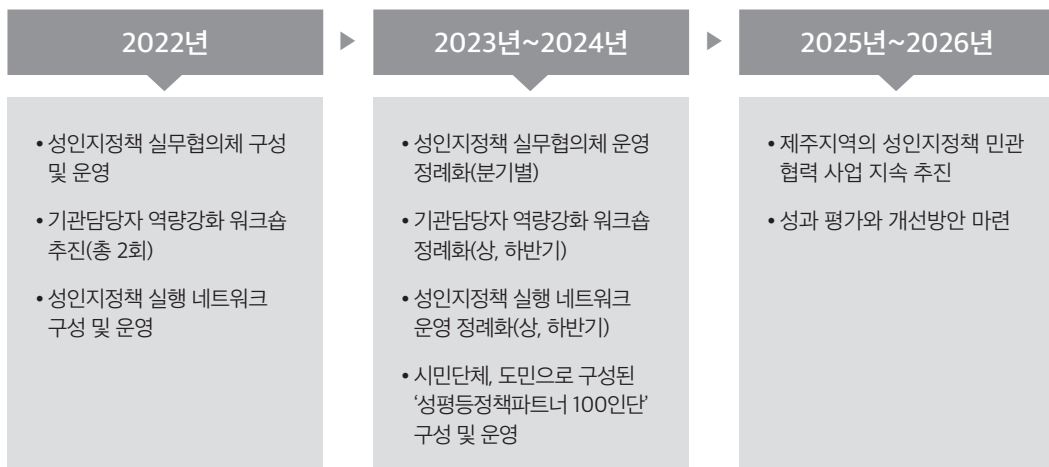
② 성인지정책 민관네트워크 운영

- 사업목표 : 성인지정책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 등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공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치 체계에 성인지적 관점 통합

○ 추진내용

- 시민단체 회원,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다양한 도민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 : 제주지역 성평등 이슈 발굴, 성평등 목표 마련,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등 참여
-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공무원-학계’로 구성된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운영 : 성인지정책 대상사업 선정, 컨설팅, 전문가 검토의견, 우수 개선사례 발굴 등 과정별 실행 네트워크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예산담당관
- 협력 부서(기관) : 양 행정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담당 부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2)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4-2-1

제주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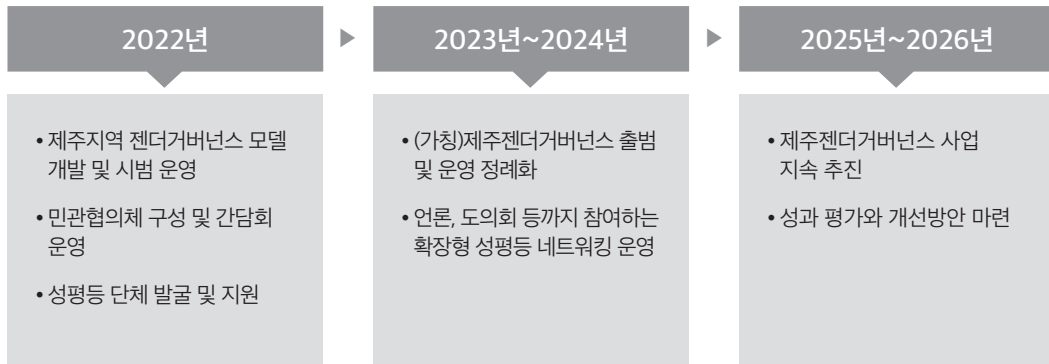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성평등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공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
- 반면, 민간영역과 협력구조는 소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정책 실행을 위한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을 뿐, 그 외 민관협업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구조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젠더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요구도 지역사회에서 지속되어왔음
- 따라서 민간 여성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구축 및 정례적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민+관+도의회+언론 등 확장형 네트워크 사업까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제주지역 젠더거버넌스 현황 분석 및 모델 개발(시범 운영)
- 성별, 세대별, 직업별, 지역별 다양한 집단의 성평등 단체 발굴 및 협력 사업 운영
 - － 2030여성, 여성농어업인, 남성 성평등 파트너단 등
- 성평등정책관과 지역 내 여성단체 민관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운영(연 2회 이상)
 - － 지역사회 성평등 비전 및 아젠다 형성
 - － 지역 밀착형·체감형 성평등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테이블
 - － 지역사회 성평등 현안 및 대응 논의
- (가칭)제주젠더거버넌스 출범 및 운영 정례화
 - － 언론, 도의회 등까지 참여하는 확장형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운영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방안 고려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 협력 부서(기관) : 도내 관련 여성단체, 언론, 도의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모델 개발)

4-2-2

NGO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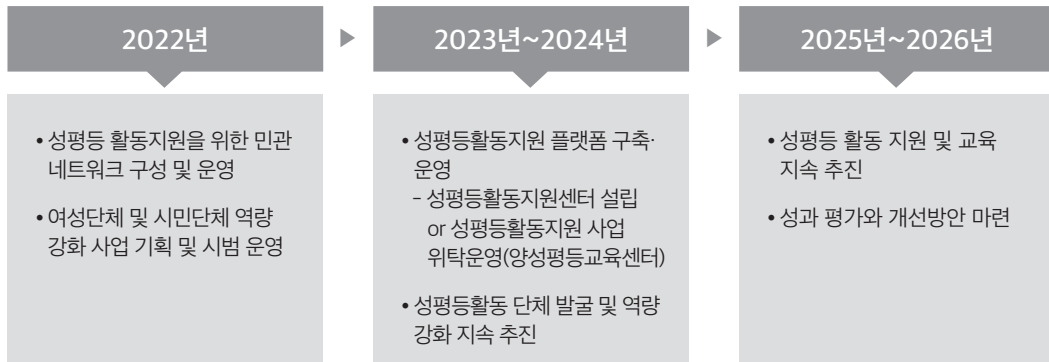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그간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성평등 활동들이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제도화되면서, 성평등 관련 NGO들의 활동, 정책참여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2021년 7월 기준, 총 16개이며 소속 회원 수는 12,950으로 제주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는 적지 않으나,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성 주류화정책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이 매우 소수인 상황임
- 따라서 성평등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축인 NGO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성평등 시민조직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지역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 제주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립 or 성평등활동지원 사업 위탁운영(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고려
 - 허브형 공유공간 조성 및 다양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
 - ※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지역주민과 만들어가는 성평등플랫폼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는 성평등 가속화 센터
 - 풀뿌리 여성 소모임, 성평등 활동단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역량강화 사업 강화
 -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성평등 공익활동가 인턴십제도 신설 : 인건비, 성인지적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성평등활동가 아카데미
 -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성평등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단계별, 실무형)
 -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풀뿌리 여성주의 아카데미, 페미니스트 운동이론 아카데미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리더십 강화

4-3-1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균형구성 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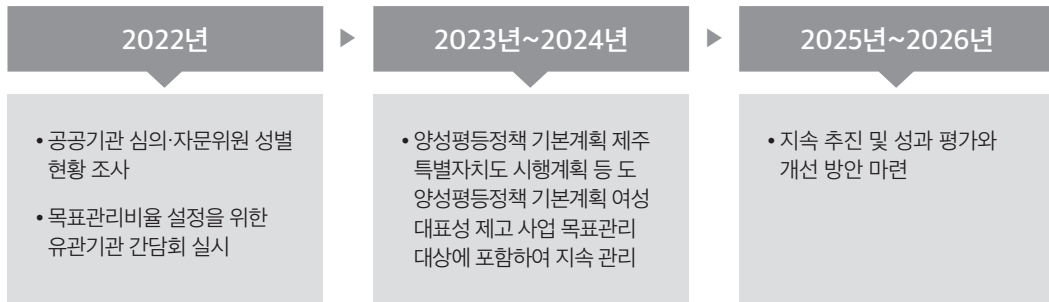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 중심의 여성대표성 관리를 통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공공부문 관리직 여성비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 이상인 상황임
 -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목표치(19.6%) 대비 초과 달성('21. 8월)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 ('19. 12월) 44.3% → ('20. 12월) 45.3%
 -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 : 18% → ('21. 8월) 24% 초과 달성
 -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목표: 20% → ('21. 8월) 18.52% 미달
- 그러나 제주지역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인 16개 공기관의 심의·자문위원회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으로 포함·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대표성 관리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공공기관 심의·자문위원 성별현황 조사
 - 기관별 당연직, 위촉직 구분된 성별 구성현황 조사 및 기본통계 생산 및 관리
 - ※ 2020년 도의회 서면질문에 따라 수집된 자료(2020년 3월 기준)에 의하면, 도내 1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심의·자문위원 502명 중 여성위원은 109명으로 21.7%(당연직, 위촉직 구분 없음)이고,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0%(15명 중 0명)인 경우도 있음
 - (출처: 2020년 4월. 도의회 서면질문 수집자료. 당연직, 위촉직이 분리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표성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목표관리비율 설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도내 공공기관

4-3-2

마을·자치단위 여성대표성 확대 및 현장형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 기초단위인 마을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대표성 확대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마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성별균형참여를 제도화하고, 성평등교육, 여성의 공동체 조직 활동 및 리더십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여성 역량을 강화함
- 기존의 여성리더 대상 획일화된 리더십 교육이 아닌, 현장형, 단계별, 상시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여성들의 실질적 요구 반영하는 정책 운영이 요구됨
- 다양한 영역 맞춤형 리더십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실질 정치 관련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및 제주지역 여성정치 대표성을 제고함

□ 사업 내용

① 마을·자치단위 의사결정기구 여성대표성 확대

- 사업목표 : 마을·자치단위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동등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여성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리·통장, 어촌계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리더 성별통계 구축 및 여성대표성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표성 목표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제주도 성평등마을 조성사업(성평등마을규약 개정사업)’ 전역으로 확대
 - 마을 개발위원회(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남녀 평등참여 제도화
 -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이 남성가장으로 대표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로 여성의 투표권 보장 등
 - 마을리더(이장, 각 위원회 위원장 등), 농수축협 조합장 및 대의원, 어촌계장 대상 마을로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확대
 - 성평등마을만들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장협의회, 부녀회장협의회, 제주지역 마을규약·성평

등마을규약 관련 연구자(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마을자치,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기관 및 개인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하여 성평등 마을규약 개정사업의 실행력 및 파급력 강화

② 마을리더, 여성농어업인 성인지적 리더십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표 : 가부장적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주지역 마을단위에 특화된 성인지적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인식 제고

○ 추진내용

- 제주지역 마을에 특화된 성인지적 여성리더십 교육 콘텐츠 개발
 - 부녀회, 마을리더, 여성농어업인 등 마을 여성들 대상별 콘텐츠 수요조사 실시
 - 대상별, 단계별,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 예) 성평등마을만들기, 회의 주재하는 법, 스피치교육, 마을정치 아카데미, 농·수축협 등 조합형 경제공동체 운영과 참여 방법 등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여성리더십 과정과 연계 및 협업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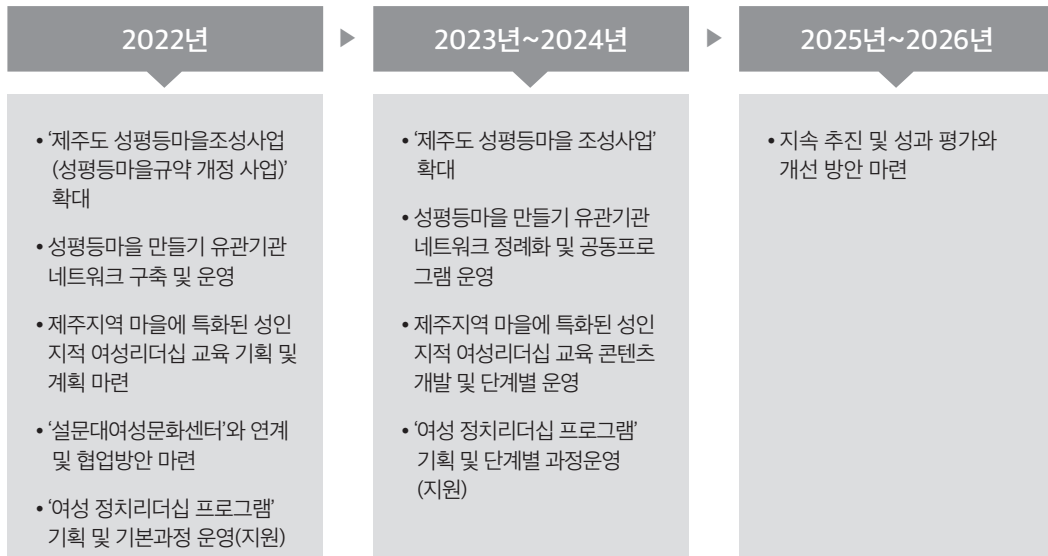
③ 지역 현안 중심 ‘여성 정치리더십 프로그램’ 마련

○ 사업목표 : 실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정치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 도전 및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역량 강화 및 지역중심 여성정치네트워크 기반 마련

○ 추진내용

- 실제 지역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리더십 워크숍 운영
 - 제주지역 성평등정치를 위한 여성정치리더십 콘텐츠 개발
 - 제주지역 현안 및 정치구조, 성평등정치에 대한 이론과 지식 등
-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과정을 교육과정으로 구성
 - ⇒ 이후 해당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 형성으로 확장
- 청년여성정치 의제 섹션 구성
 - ※ 제주양성평등기금 활용 방안 고려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수산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의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 교육센터, 도내 관련 여성(시민)단체 등

4-3-3

제주여성인재DB 활용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제주여성인재DB(데이터베이스)”는 제주 여성인재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에 처음 구축되었으며, 현재 총 1,729명이 등록되어 있음(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 한편, 현재 제주여성인재DB의 활용범위는 “도 산하 각종위원회 및 공공기관 이사회 등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으로 활용”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지속 발굴·정보 축적 강화 및 여성인재 적극 활용 및 지속적인 성장 기회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 내용

① 다른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스템 마련

- 사업목표 : 타 인재DB와 연계로 제주여성인재 DB 활용도 제고
- 추진내용
 - － 국가인재DB, 여성인재DB(여성가족부), 제주 청년인재POOL, 제주연구원 인재등록 DB 등과 연계방안 마련
 - － 분야별 지속적인 인재 발굴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체계 구동
 - － 추가 발굴 실적관리

② 제주여성인재DB 활용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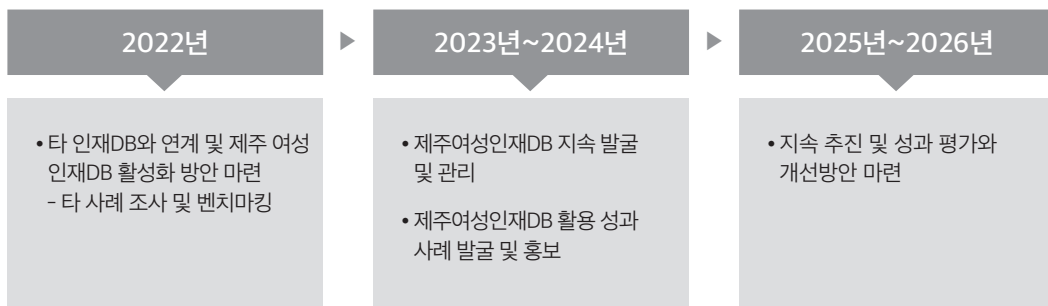
- 사업목표 : 다양한 콘텐츠 제공, 성과사례 발굴로 여성인재 역량강화 및 성평등정책 관심 제고
- 추진내용
 - －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제공 콘텐츠(“여성인재DB 뉴스레터”) 및 여성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 정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발간물(정책브리프 등) 등을 제공·홍보함으로써, 여성인재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

- 제주여성인재DB 활용 성과사례 발굴 및 홍보
- 여성인재 뉴스, 여성인재 스토리 등 제주지역 사례 발굴 및 홍보
- 예)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뉴스레터” 콘텐츠

※ 참조 사례

-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제주 청년인재 POOL 구축」
 - “숨어있는 청년인재발굴, 청년정책 추진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청년 정책 정보의 맞춤형 제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도내·외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외에도 “관심 분야에 따라 분류된 청년대상 맞춤형 관심정보 제공, 유사관심사 청년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청년인재양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함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여성가족부, 제주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지역 성평등교육·연구 기반 강화

4-4-1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 사업 배경 및 목적

- 국내 지역 여성의 역사문화 및 여성사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제주 지역에서도 1998년 민선2기 제주도에 이 르러 보건복지여성국 신설 및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출범 등 제주의 성평등정책 (여성정책)의 태동과 함께 제주여성의 삶과 역사문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추 진되기 시작하였음. 이처럼 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의 역사문화 및 여성 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평등 차원에서 제주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 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문순덕, 2009; 김은실, 2018).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주특 별자치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중요한 당면 과제이기도 하며, 최근 제주 여성문화 연구, 자료 아카이브 구축, 후학 양성 등 체계화된 연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의 시 대적 요구가 생겨나고 있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18; 정여 진 외, 2018)
-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여 민선7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성의 지위 향상’ 을 위한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브랜드화’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제주여성역사 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과제를 제시했음. 동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해 제주도는 사례 및 자료 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 진해 나가는 계획을 제시하였음(고지영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8기 제주 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의 지속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1단계 : 센터 설립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및 통합적 재구성을 위한 TF(이하 TF)” 운영
 - 제주 여성 역사·문화 관련 기관(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만덕기념관, 해녀박물관

등), 연구·교육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가칭), 여성단체 및 도민이 함께 참여

-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논의구조 마련
-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의 비전, 목표, 운영원칙, 지향 등에 대한 논의

<제주여성역사문화센터의 목표, 기본 방향, 주요 사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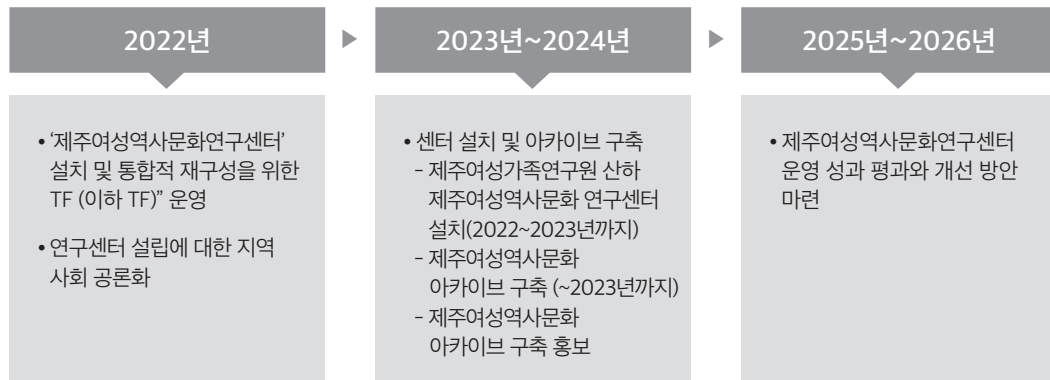
자료 : 고지영 외(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단계 : 센터 설치 및 아카이브 구축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산하 제주여성역사문화 연구센터 설치 (2022~2023년까지)
- 제주여성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2023년까지)
 - 분야별, 매체별 자료 발굴·수집 및 DB생성을 위한 조사·연구
- 제주여성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

- 3단계 :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장기적 비전 논의를 위한 TF 운영
- (가칭) ‘2030년 플러스, 성평등 제주’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들의 통합적, 유기적 재구성을 위한 청사진 마련 및 추진
 - TF를 중심으로 내용적, 기능적, 공간적인 면에서 관련 시설들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 조직, 도민 의견 반영된 청사진 마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⁴³⁾의 BTL 만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 연차별 추진 계획



* 향후 장기적으로는 제주여성문화·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장기적 비전 논의를 위한 TF 운영(민선9기).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BTL 만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등 전 부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만덕 기념관, 해녀박물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도내 관련 여성(시민) 단체 등

43)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구)여성회관으로 출발하여 제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여성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교육 기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을 통해서 제주여성 관련 신화, 역사, 생활 등과 관련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 및 전시하는 문화사업의 고유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여성 관련 교육과 전시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전문적인 연구 기능은 부재하여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와의 중복성이 없음(고지영 외, 2020)

4-4-2

여성가족연구기관 기능 강화 :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 사업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국제적인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흐름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 수행 기관의 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2005년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를 거쳐 2014년 3월 제주지역의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출범하기에 이룸
- 전국의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은 대부분 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재단 형태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14개 중 8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네트워크,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지역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여성 및 가족분야 정책연구 및 주요사업 수행, 도내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여성·가족 정책 종합플랫폼 구현하고, 성 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연계, 성평등 인식확산 사업 등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도민의 성인지력을 증진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 기존의 정책연구뿐 아니라 제주여성의 역사문화 가치 확산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 지역 성평등 플랫폼 구현을 위한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마련
 - － 제주여성가족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
 - － 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 및 의견수렴
- 제주여성가족연구 기관의 기능 확대
 - － 지역여성역사문화 역구 및 사업
 - － 성평등교육문화 확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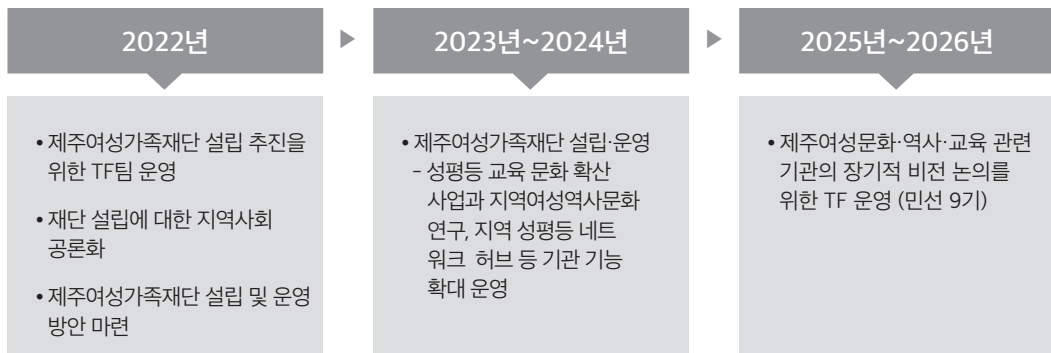
- 성평등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역할 강화
 -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소통 공간 지원
 - 지역사회 성평등 아젠다 발굴을 위한 도민참여 원탁회의 개최(매해)
 -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지원
 - 마을 기반 자치조직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 국내외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등

※ 각 지자체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설립 유형

(2021.11월 현재)

재단(8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충북여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6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부설 기관(2개)	대전세종연구원(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 연차별 추진 계획



※ 향후 장기적 관점(민선9기)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문화센터(가칭) 등과 함께 각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관련 시설들의 통합적 재구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1-4-1. 참조). 특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BTL 만료시기인 2029년 이전까지 청사진 및 추진전략 완료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4-4-3

제주양성평등교육기관의 조직 기반 및 기능 강화

□ 사업 배경 및 목적

- 민선7기 도정의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20. 9월 설치)은 도내·외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성과로 인정받고 있으나, 기관의 운영 방식 및 역할의 한계로 인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매년 수탁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인력의 계약도 매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위탁운영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 체계 및 상설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가부장적 지역 공동체문화가 공고한 제주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센터의 기능을 성평등문화 진흥 및 확산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성평등교육 및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여타 시민교육과의 성평등교육 연계, 양성평등 관련 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양성평등교육기관(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조직 기반 강화
 - 기관운영 방식 개선 : 도 위탁사업 → 독립적인 조직 체계 마련 및 상설 조직으로 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 ③항 개정

기 존	개편안
제27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기관 인프라 확충

- 사무공간 : 교육장 및 성평등 활동 공간 확대
- 조직 및 인력 : 2개 팀으로 확대, 인력 확충

○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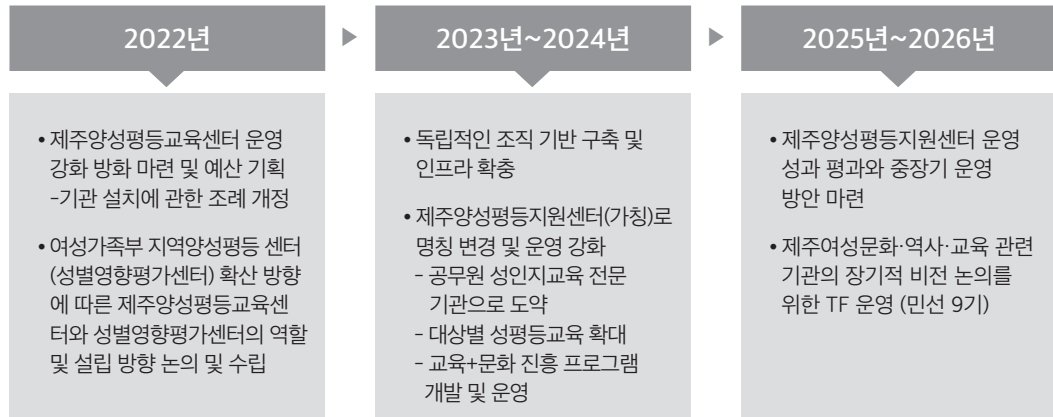
- 양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교육 의무 추진
- 성별영향평가센터 성 주류화정책 교육 및 공무원교육 업무 전반 담당
- 견고한 제주지역 가부장제 문화 개선 위한 도민 성평등교육 확대,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 성인지교육 필수화
 - 개발위원회 등 마을단위 자치조직 및 도민 성평등 교육 확대 방안 마련
- 공공영역, 산업분야별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성평등 관련 NGO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성평등 활동 지원
- 지역주민·단체 성인지정책 도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가칭)로 명칭 변경 운영

- 성평등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현재의 기관명을 ‘(가칭) 제주양성평등지원센터’로 변경

※ 향후 여성가족부 지역양성평등센터(성별영향평가센터)⁴⁴⁾ 전국 확대 방향에 따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 및 설립 방향 논의 필요(중앙과 지역의 매칭 사업 추진 등)

□ 연차별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주관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부서(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역 양성평등 교육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등

44) 지역양성평등센터는 현재 전국 4개 지역 유치 중임(인천, 경기, 경북, 전남)

참 고 문 헌

- 강경숙(2019),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와 향후과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포럼 및 제2차 성평등포럼 - 지방자치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경숙·신승배(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이해웅·고민지·김민선(2019),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이해웅(2018), 「제주특별자치도 성 주류화 추진기반 강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희영(2020), 젠더이슈, 베이징+25 현재 맥락과 새로운 이슈 1-베이징 행동강령의 의미와 이행점검, 서울여성가족재단.
- 경기도(2021),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고지영(2017), 「201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문순덕·이연화·홍선영(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권희정·염미경(2014), 「20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가족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은실(2018),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과 여성 역사문화 연구의 의의”, 「제주여성 역사문화 연구 활성화,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여성가족정책 현안 소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김혜영. 2012. “기로에 선 한국의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학」. 28(3): 64-94.
- 김혜정·문정희·이옥경·정현주·최청락·하정화·홍미영(2018), 「지방분권화시대 부산형 여성가족정책 과제 발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문순덕(2009), “제주여성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32:87-112, 제주도연구회.
- 변화순. 2007. “가족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법학연구」. 17(3): 225-244.
- 손태주·이화진·정여진·박재규·주재선(20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시린 M 라이(2014),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민족주의와 지구화」, 이진옥 역, 후마니타스.
- 신승배·이해웅(20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신승배·손태주(2020), 「2020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안현미·강희영·국미애·이선형·민연경·홍미희·이화용(20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오신정(2012), 「국가페미니즘의 지방적 함의 연구 : 1990년대 이후 제주도 여성정책기구 설립의 정치적 동학」,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연화(2017), Issue Brief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욕구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연화(2019), Issue Brief 「생애주기로 본 제주지역 여성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해웅·강경숙·윤금이(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해웅·신승배(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해웅·정은숙·강경숙(2021),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강지영·정여진(2020),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장은하·김희(2020),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브리프, 제54호.
- 장운선·김경화·박수범·김수자·정혜선(2019),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여진·강경숙·고지영·손태주·김영순·김이승환·정이은숙(20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여진·차성란·민주홍(2019), 「제주지역 가족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섯별·이명진·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한국사회학」. 37(5): 1-30.
- 함인희. 2014.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87-128.
-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 여성가족부(2018),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2021), 「2025 세상모든 가족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
- 여성가족부(2021),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제주특별자치도(2018~2021),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15), 「제주처럼」.

제주특별자치도(2019), 「성평등한 제주 ‘더 제주처럼’」.

제주특별자치도(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통계청(2020), 「사회조사」.

연구보고서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발 행 일 2021년 11월 30일
발 행 인 민 무 속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064-720-4922, Fax.064-711-2349
www.jewfri.kr
인 쇄 사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77-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45 제주시 연오로89(연동) 3층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비매품/무료



9 791187 026778
ISBN 979-11-87026-77-8